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2026~2030)

2025.10.

보고용



목 차

I 종합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	1
II 공간정보 정책의 현 주소	3
III 대내외 환경	7
IV 종합계획 목표 및 주요과제	12
V 과제별 세부내용	16
1 디지털 전환 선도	16
2 경제 혁신 촉진	21
3 시민 체감 실현	27
4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32
5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35
VI 추진체계 및 과제별 이행계획	38
부록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47

I 종합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

(1) 종합계획 개요

□ (수립배경)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 관리와 민선8기 시민 중심 행정 혁신을 실현하고, 국가 공간정보정책과 연계된 지역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

- AI·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에 따라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 필요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27)」의 지역 실행형 계획 마련 요구
-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집행·도시관리·시민서비스’ 혁신의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 재난·재해, 인구감소, 도시 불균형 등 복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지능 기반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수립근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 법적 근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조례: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국가계획 연계: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정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

□ (수립주기) 매 5년

- 계획 기간: 2026년 ~ 2030년 (5개년 중장기 계획)
- 갱신 주기: 국가 기본계획(5년)과 연동하여 주기적 재검토 및 보완
- 점검 체계: 매년 성과평가 및 추진과제 이행점검을 통한 계획의 탄력적 운영

□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유통·거버넌스 전 주기 혁신

- 비전: '시민 행복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지능 AI-시티, 인천' 구현
- 목표: 5대 추진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9개 핵심 추진전략 도출
 - 5대 목표: ① 디지털 전환 선도, ② 경제 혁신 촉진, ③ 시민 체감 실현, ④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⑤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
- 핵심 플랫폼: 3차원/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인천-트윈(Incheon-Twin) 플랫폼'
- 로드맵: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도입/기반 마련, 확산/고도화, 정착/성숙) 추진

[2] 종합계획 주요 수립경위

- 2025. 4.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주관)
- 2025. 5.~7. 현황조사(부서 면담 260개, 설문 632개) 및 업무·시스템 분석
- 2025. 8. 중간보고회(내부) - 계획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안) 검토
- 2025. 8.~9. 시민(2,200명) 설문조사 및 전문가(18명) 의견수렴
- 2025. 10.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안 확정 ('25.10.30.)

- 전국 광역시 최초로 '공간지능 AI-시티' 개념 도입
- 데이터 기반 정책 집행모델(도시운영OS, GeoAI 등) 제시
- 인천형 공간정보 플랫폼 전략(디지털트윈-AI-데이터 통합) 수립
- 국가 계획과 정합성 확보: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
- 산·학·연 전문가, 시민·공무원 참여형 협업 구조 구축

■ **(성과)** 도시 전반의 공간정보 정책을 지방정부 최초로 통합·체계화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시민 체감형 스마트 거버넌스로 전환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

- 공간정보 정책을 **정책 실행도구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지역형 모델 제시
- 행정데이터의 공간화 및 표준화 추진 기반 마련
- 시민 수요 기반의 AI-데이터 행정체계 전환 시범모델 구축
- 공간정보-AI-산업-시민이 연결되는 **“디지털 트윈 인천” 생태계** 제시
- 국가공간정보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인천형 추진과제 도출
 - * 50개 개선과제 총 677억 원 규모, 5개 선도과제 선정

II 공간정보 정책의 현 주소

[1] [생산] 공간데이터 구축은 확대되었으나 표준화와 최신성 관리가 미흡

- (성과) 인천시는 도시계획·교통·환경·재난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3차원(3D)·지하시설물 등 입체적 데이터 생산 기반을 확보하였음

→ 이러한 다층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트윈 구현과 도시변화 탐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구분		보유량	세부내용	비고
기본 공간정보	수치지형도	2,657도엽	1/1,000: 2,310도엽 1/5,000: 347도엽	토지 정보과
	정사영상 및 DEM	111도엽 (686.37km ²)	영상:8,080매, 축적:1/5,000, 해상 도:25cm	
	위성영상, 항공사진	1,446.37km ²	항공사진 686.37km ² , 위성영상 760km ²	
UIS DB	도시기반 시설물	211레이어 (12,965km ²)	공통, 도로(주차포함), 하수도, 녹지, 주차, 상수도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42레이어 (10,236km)	통신, 전기, 가스, 난방, 송유	

- (한계) 부서별 개별 구축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정합성·갱신주기 관리가 분절적이며, 지상-지하-실내 등 다층 공간 간 연계가 미흡

→ 부서 간 데이터 중복을 줄이고 통합 갱신체계 마련이 시급

[2] [유통·공유] 데이터는 개방하지만 통합 관리와 활용 편의성이 부족

- (성과) 국가공간정보포털(K-Geo), 브이월드(V-World), 공공데이터포털(data) 등 중앙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일부 공간데이터를 개방하고, 자치구 단위 지도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 시민이 공간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 (한계) 부서별 시스템이 분산되어 통합 메타데이터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시민과 민간이 재활용하기 어려운 구조

→ 통합포털 구축 및 표준 메타데이터 체계 정립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활용] 일부 행정·민간 활용이 증가했으나 정책 의사결정 연계는 제한적

- (성과) 도시계획, 재난관리, 교통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분석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생활형 서비스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공간정보가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생활 개선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 (한계) 정책결정·기획 단계에서의 공간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시간 분석·모니터링 기능과 부서 간 연계성이 부족

→ 통합 분석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도입이 필요

[4] [인프라기술] 기반 인프라는 확보, 시스템 노후화와 실시간 처리 한계

- (성과) 정밀지도·항공영상 등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고, 일부 부서에서 드론 및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시범 도입

→ 기술 기반은 향후 자동화된 데이터 갱신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한계) 인프라의 노후화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 한계로 인해 디지털트윈 전환이 어렵고, 기술 수준의 부서 간 편차가 존재

→ 공용 인프라 현대화와 기술 역량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

시스템명	개시일	서비스망	주요 이용대상	주요 기능
GIS행정포털 (imap 시스템)	2014.3.	행정망	전 직원	수치지형도 기반 공간정보 통합 조회·편집·관리
수치지형도 관리시스템	2014.3.	행정망	전 직원	도엽 단위 지형도 제작, 갱신, 도면 출력
지도포털 (imap.incheon.go.kr)	2014.2.	인터넷	시민	다양한 주제도(관광·문화·행정 등)의 조회 서비스
공간영상정보시스템	2011.3.	행정망	공무원	항공사진·위성영상의 연도별 열람 및 비교·판독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2002.10.	행정망	공무원	도로, 녹지,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인프라 시설물 관리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iroad.incheon.go.kr)	2009.1.	행정망·인터넷·VPN	공무원·시민·기관	도로굴착 인허가 신청·관리, 시설물 중복 방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incheon.go.kr)	2010.2.	인터넷	시민	토지·건축물 정보 통합조회 및 민원서비스
지하시설물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2024.6.	행정망	공무원	현장 중심 지하시설물 점검, 위치기반 시설물 판독 지원

[5] [거버넌스 · 조직역량] 제도 기반은 마련, 통합 조정력과 전문인력 부족

- (성과) 공간정보관리 조례 제정, 협의회 운영, 토지정보과 중심의 전담 조직을 통한 행정적 운영기반 마련

→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큼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팀별 기능 분류

팀명	고유 업무 요소	융복합 업무 요소	미래지향적 업무 요소
토지행정팀	• 공시지가 결정 • 실거래가 관리 및 거래허가제	• 부동산시장 동향정보 공개	• 부동산정보 시각화 지도서비스
지적관리팀	• 지적기준점 • 성과검사 및 측량업 관리	• 개발사업 사전협의 및 지적컨설팅	• GNSS·드론을 활용한 지적성과 검사
지적재조사드론팀	•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경계 정비	• 드론기반 재조사 및 도면 정비	• 정사영상 제작 • 접경지역 3D지도 제작
부동산관리팀	• 감정평가사 관리 • 중개업 등록	• 부동산개발정보와 정책지도 연계	• 시장 정보공개 + 시민이해 콘텐츠 제작
주소정책팀	• 도로명주소 관리 • 국정평가 지표 수행	• 명예도로명 브랜딩 정책 연계	•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 실내 위치정보 등
공간정보팀	•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항공사진 판독	• 부서행정 데이터와 지도 시각화 연계	• 고정밀전자지도 • ISP 수립 및 디지털트윈 기반 분석
스마트도시공간팀	• 3D 기반 행정지도 서비스	• 부서협업 정책지도, • 복지/안전 연계 지도	• 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 AI·DT 정책모델화

- (한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사적 조정 및 민관협력 추진력이 미흡

→ 지속 가능한 협업 구조와 인력 양성·교육체계 강화가 필요

6 [시민 인식·체감도] 인식은 높으나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과 참여 기반 약화

- (성과) 생활편의·교통·안전 분야에서 공간정보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점차 시민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하며 공간정보의 공공성 인식이 확산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대표 서비스	백문이 불여일지도	알려줄지도	ON THE MAP
컨텐츠 수	30여 종	53 종	27 종
주요 특징	주민생활형 콘텐츠 + 행정지원 도구 이원화 운영	드론 활용한 고정밀 행정지도 + 대민 홍보용 지도	POI, 통계, 복지, 안전, 공공의료 등 부서별 생활지리 통합
컨텐츠 전략	행정지원 + 홍보 콘텐츠 이원화	정책형 주제도 + 드론지도	통합형 대민 콘텐츠 망 구성
협업 체계	부서 요청 중심 자체 수요 조사 없음	부서 요청 드론 수요조사 반영	부서별 정기 연계 콘텐츠 책임 부서 명확화
시스템 구조	행정망과 외부망 분리된 이중 구조	플랫폼 독립 카카오맵 API 병행	ArcGIS 기반 전 부서 협업 중심 콘텐츠
플랫폼 전환	본청 클라우드 수용 가능 속도 우선 고려	공통기능 제공에 한계 인식	K-Geo 및 본청 플랫폼 연계 가능성 동시 검토

- (한계) 시민 체감형 서비스 이용률과 참여 기반이 낮아 공간정보가 행정 중심 기술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과 참여형 데이터 수집 체계 도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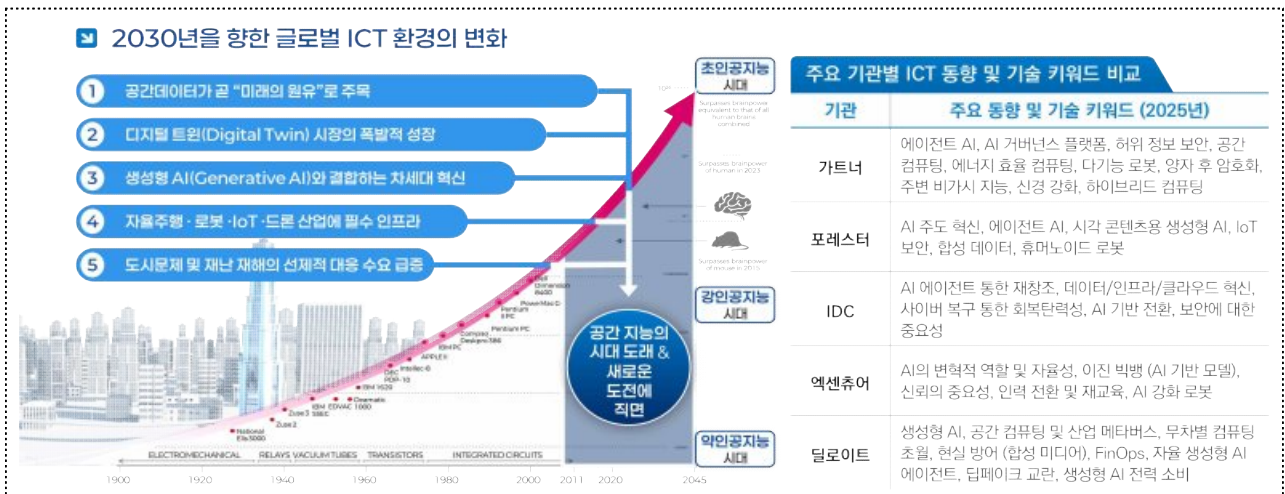
[종합평가] 인천의 공간정보정책은 기술·제도·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갖추었으나, 향후에는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지역 균형 데이터 구축, 신기술 실증과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시민의 핵심 요구사항 ① 체감형 서비스 선호 ② 사용 불편함 지적 ③ 최신 데이터 기대 ④ 시민 참여 희망	인천시 전략적 방향성 측면 - 글로벌 비전 실현 및 경쟁력 강화 - 선제적 기후·환경 리스크 대응 - 시민 체감형 복지·생활 서비스 - 스마트 그린인프라 및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바다िय음' 해양·연안 공간 관리 - 지능형 원도심 재생 지원 - 고부가가치 산업 및 MICE 경쟁력 강화 - 도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주요 부서의 핵심 요구사항 ① 데이터 통합 요구 ② 과학적 행정 요구 ③ 실시간 대응체계 필요	통합 디지털 인프라 측면 -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재난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3D 기반 지능형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지원 시스템 -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및 기업지원 정보 서비스 -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및 통합 교통정보 지원 - 도시환경·생태 통합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대응 - 스마트 해양·항만·섬 관리 체계 구축 - 시민체감형 생활·복지정보 맞춤형 제공 -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플랫폼 운영 기반 구축
주요 계획의 핵심 요구사항 ① 실시간 대응의 어려움 ② 미래 예측 기능 부재 ③ 생활 밀착 정보 부족 ④ 통합적 시스템 요구	

Ⅲ 대내외 환경

(1) 기술 환경 - '디지털 전환과 공간지능 확산'

- (현황) 디지털트윈·AI·IoT·클라우드 등 융합기술 확산으로 공간정보의 실시간·예측 활용이 확대
- 디지털트윈,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 융합이 급속 진전
 - 공간정보는 정적 지도 중심에서 실시간·예측형 데이터로 진화→'공간지능(GeoAI)
 - 3차원 공간정보 구축기술(MMS, LiDAR, 드론 등)이 상용화되고, 실시간 수집·처리 기반의 인프라가 확대
 -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트윈국토,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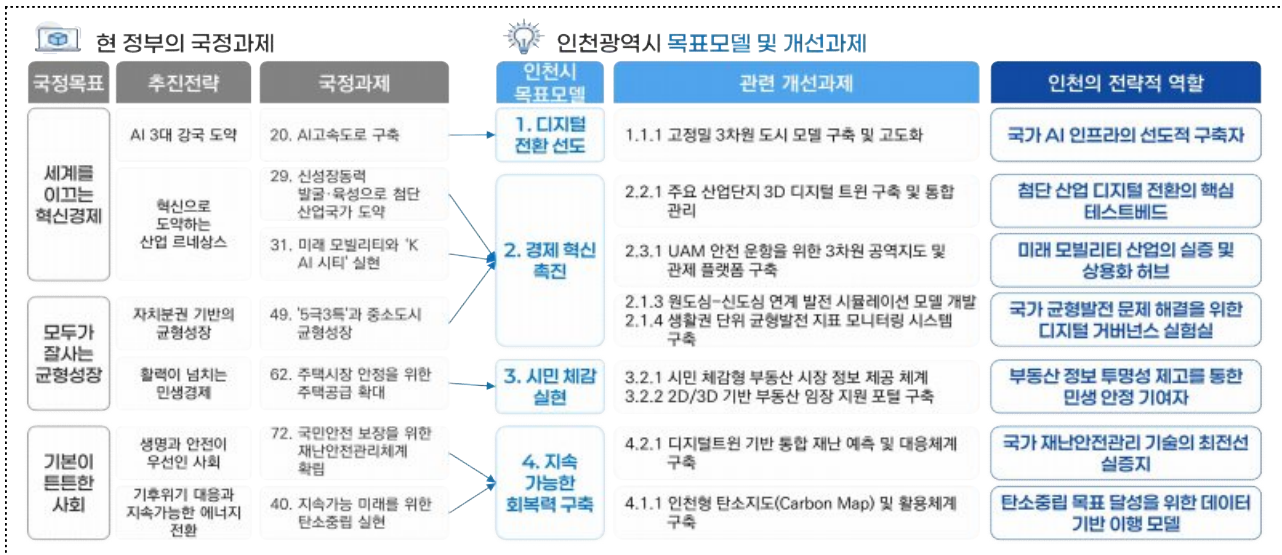


- (시사점) 인천시는 신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함
-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해 AI기반 도시관리 및 예측 행정으로 확장
 - 지역 단위에서 디지털트윈 실증·확산 모델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십 체계 구축이 요구

(2) 정책·제도 환경 - '국가정책 연계와 제도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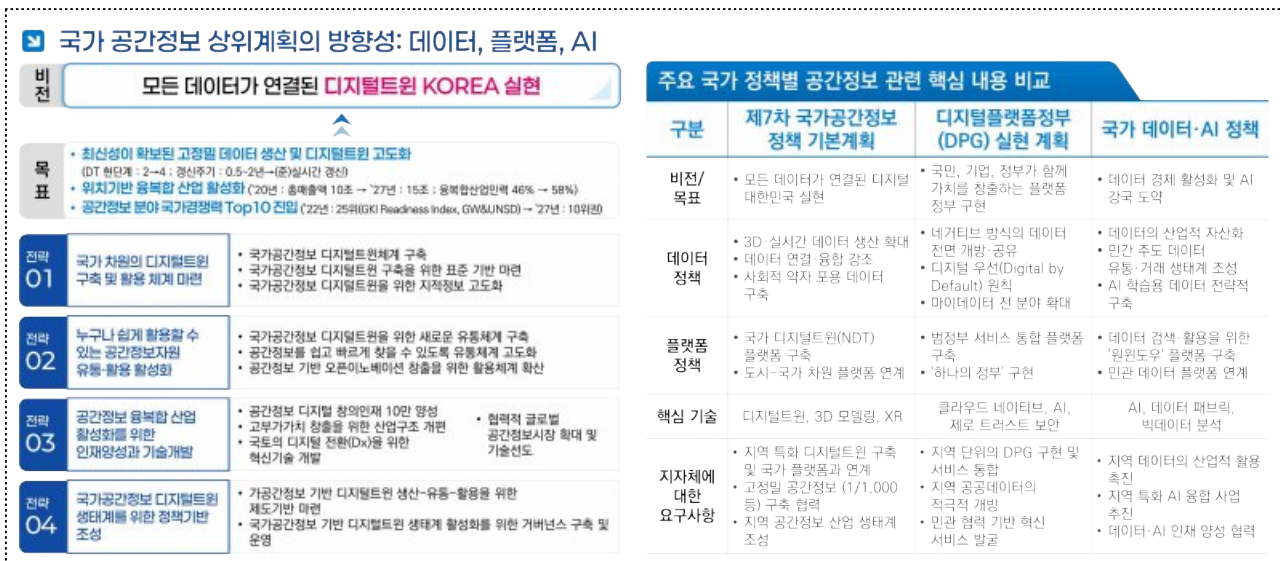
- (현황)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 중앙 정책이 본격화되며 공간정보의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라,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개방·활용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공간정보를 국정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트윈국토, RE100-탄소중립 대응 등)와 연계 추진 중
- 공공데이터법, 공간정보관리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어 지자체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 각 부처·지자체 간 데이터 표준 및 거버넌스 일관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



□ (시사점) 국가 정책과 연계된 지역 실행형 계획을 구체화하고, 중앙-지자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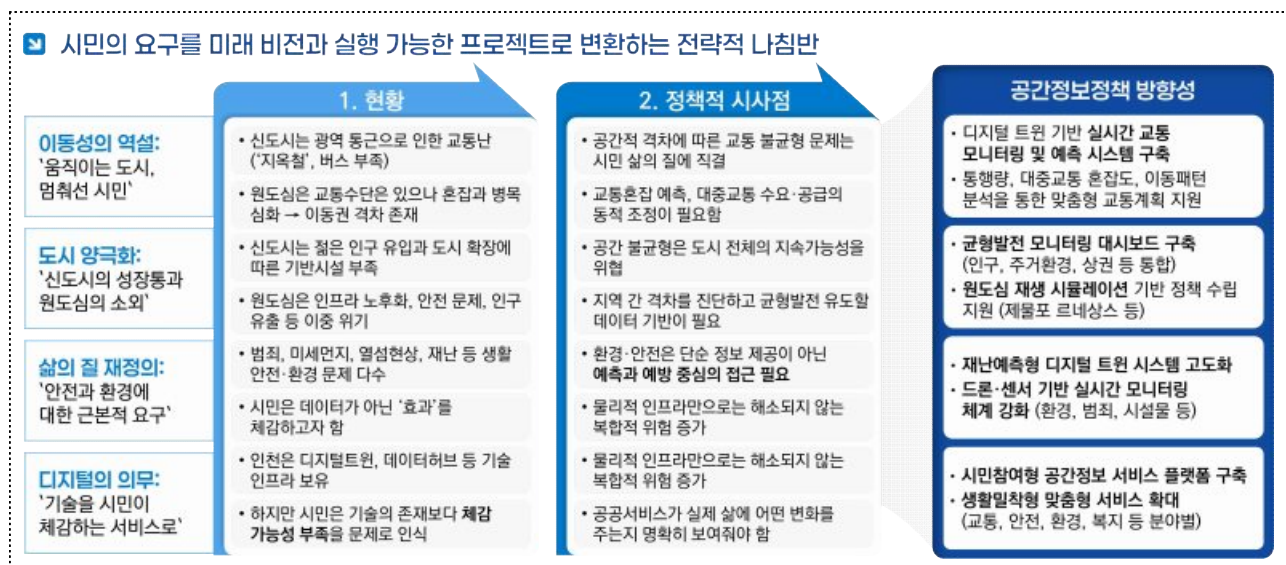
- 인천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된 지역 실행형 공간정보 전략을 구체화
- 중앙-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공유체계 구축으로 이중 구축 및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간 정합성 검토를 통해 지역 차원의 실행 근거를 명확화 해야 함



[3] 사회·경제 환경 - ‘인구·생활구조 변화와 공간복지 수요’

□ (현황) 저출산·고령화, 비대면 사회, ESG 등 사회 변화로 생활권 기반의 공간정보 행정 수요가 증가

- 저출산·고령화, 인구이동 감소, 지역소멸 등 구조적 변화가 심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업무 문화가 정착되며,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수요가 급격히 확대
- 온라인 소비·물류·교통 등 생활 전반에서 공간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일상화
- ESG·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강화 추세



□ (시사점) 인천시는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활밀착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공간정보는 변화하는 도시 수요를 데이터로 가시화하고 예측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활용
- 인천시는 고령화·도시축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생활권 기반 데이터 정책 마련
- 시민의 참여와 체감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간정보 서비스로 정책 신뢰 제고

[4] 산업 및 시장 환경 - ‘공간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확산’

□ (현황) 공간정보 산업은 모빌리티, 물류, 부동산 등으로 활용 영역을 넓히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지속 성장
- 민간 영역에서는 모빌리티, 물류, 부동산,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공간데이터를 서비스 자원으로 활용

- 인천은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공간정보 수요가 집중된 복합산업도시로,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잠재력이 큼
- 공공 중심 사업구조로 인해 민간 혁신 주도형 산업생태계는 아직 제한적

□ (시사점) 인천은 산업구조에 적합한 공간데이터 산업 생태계와 실증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인천은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된 공간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육성
- 민간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데이터 개방-활용-서비스 창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산업단지·항만 등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기반 실증산업 허브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5] 지역 환경(인천의 특성) - ‘복합공간 구조와 균형 발전 과제’

□ (현황) 항만·공항·도심·도서가 공존하는 복합공간 구조를 지니며, 신·원도심 간 공간 불균형이 존재

- 인천은 항만·공항·도심·도서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구조를 지닌 도시
- 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재생이 병행되며 도시공간의 이질성이 높음
- 스마트시티, UAM실증, 디지털트윈기반 시범사업 등 실증사업이 다수 추진 중
- 그러나 원-신도심 간 데이터 불균형과 해양·항공 등 특수 공간의 데이터 부족이 과제로 지적됨



□ (시사점) 인천은 지상-지하-해양-항공을 아우르는 다층적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균형 발전을 도모

- 도시의 복합 공간구조를 반영한 다층적 공간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원도심·신도심 간 데이터 편차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조성
-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항공·항만 특화형 데이터 정책이 필요

[6] 제도·윤리·보안 환경 -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

-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지만, 보안·윤리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
 - 데이터 보안, 책임성, 활용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 데이터 오남용, 정보 비대칭, 알고리즘 편향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부각
 - 데이터 개방과 보안 간의 균형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
- (시사점)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윤리·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해 시민 신뢰를 확보
 - 인천시는 공공데이터 활용 시 윤리·보안·개인정보 보호를 병행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모델을 제시
 -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 환경을 마련

[종합평가] SWOT 전략 및 핵심성공요인



IV 종합계획 목표 및 주요과제

[1] 비전 및 목표

비전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지능 AI-시티, 인천

성과 지표

- ❖ **공간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도시 운영 고도화**
공간데이터 통합률 95% 달성 / 행정 데이터 활용 비율 60% → 90% 향상
- ❖ **시민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확산 및 삶의 질 향상**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률 40% → 80% 상승 / 시민 서비스 만족도 85점
-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
탄소지도 구축 100% (10개 구) / 탄소흡수량·미세먼지 저감효율 20% 향상
- ❖ **민관협력 및 글로벌 연계를 통한 혁신 생태계 확립**
민·관 공동 프로젝트 30건 이상 / 민간·국제 협력 네트워크 참여기관 50개 확보

목표 및 추진 전략

—
677
억원

① 디지털 전환 선도 과학적 도시계획 및 첨단 관리를 위한 '인천-트윈 (Incheon-Twin)' 플랫폼 구축 (220억원)	•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100) •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40) • 입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50) • 지능형 도시변화 탐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0)
② 경제 혁신 촉진 미래 산업 견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225억원)	• 지능형 도시계획 및 원도심 재생 지원 (60) •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혁신 지원 (40) •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60) •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20) •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45)
③ 시민 체감 실현 포용적 생활환경 및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구현 (105억원)	•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0)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20) •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5) •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30)
④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환경 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관리 (120억원)	• 데이터 기반 기후행동 이행 (30) •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60) • 지속가능한 해양·녹지공간 관리 (30)
⑤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공간 지능 시대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7억원)	•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7) • 미래 선도를 위한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 • 공간 지능 역량 내재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

[2] 개선과제(추정예산 포함)

목표	개선과제	과제유형	추정예산(억 원)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기반의 사업추진			677
1 디지털 전환 선도			220
	1-1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100
	1-1-1 고정밀 3차원 도시 모델 구축	플랫폼 기반	40
	1-1-2 지하 공간 통합지도 모델 구축	플랫폼 기반	20
	1-1-3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핵심 API 개발	플랫폼 기반	40
	1-2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40
	1-2-1 모든 행정 데이터의 공간정보화 강화	데이터 구축	20
	1-2-2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 및 통합 데이터 구축	플랫폼 기반	20
	1-3 입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50
	1-3-1 다목적 드론 영상 수집 및 3D 데이터 갱신	데이터 구축	10
	1-3-2 드론 기반의 지능형 도시관리 서비스 확대	응용 서비스	20
	1-3-3 도시 변화 탐지 및 수시갱신 체계 강화	응용 서비스	20
	1-4 지능형 도시변화 탐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0
	1-4-1 관내 도시개발 사업현황 열람 서비스 제공	응용 서비스	10
	1-4-2 민원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문제 해결	응용 서비스	10
	1-4-3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시정’ 대시보드 고도화	응용 서비스	10
2 경제 혁신 촉진			225
	2-1 지능형 도시계획 및 원도심 재생 지원		60
	2-1-1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응용 서비스	20
	2-1-2 도시·건축 통합 심의 고도화 지원	응용 서비스	10
	2-1-3 원도심-신도심 연계 발전 시뮬레이션 모델	응용 서비스	20
	2-1-4 생활권 단위 균형발전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응용 서비스	10
	2-2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혁신 지원		40
	2-2-1 주요 산업단지 3D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기반	20
	2-2-2 산단기업 지원 플랫폼 및 가상 테스트베드	응용 서비스	20
	2-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60
	2-3-1 UAM 3차원 공역지도 및 관제 플랫폼	플랫폼 기반	40
	2-3-2 자율주행 물류 통합 라스트마일 혁신체계	R&D/서비스	20
	2-4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20
	2-4-1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관광	응용 서비스	10
	2-4-2 마이스 (MICE) 방문객 위치기반 지원체계	응용 서비스	10
	2-5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45
	2-5-1 지속가능한 도시 자산 및 시설 관리체계 구축	플랫폼 기반	20
	2-5-2 도시 교통 및 하천 인프라 건설관리 체계 구축	응용 서비스	20
	2-5-3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지원체계 구축	응용 서비스	5

목표	개선과제	과제유형	추정예산(억 원)
3 시민 체감 실현			105
	3-1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0
	3-1-1 통신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 모델 개발	데이터/서비스	10
	3-1-2 '10분 만족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발 및 관리	응용 서비스	10
	3-1-3 복지·보육 서비스 공급-수요 격차 분석 시스템	응용 서비스	10
	3-2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20
	3-2-1 시민 체감형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체계	응용 서비스	10
	3-2-2 2D-3D 기반 부동산 입장 지원 포털 구축	응용 서비스	10
	3-3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5
	3-3-1 정밀도로지도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ITS) 연계 체계 고도화	플랫폼 기반	10
	3-3-2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Barrier-Free) 지원	데이터/서비스	10
	3-3-3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지원체계 구축	응용 서비스	5
	3-4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30
	3-4-1 시민 체감형 융복합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응용 서비스	20
	3-4-2 '인천-트윈' 연계형 시민참여 리빙랩 및 제안 플랫폼 구축	응용 서비스	10
4 지속 가능한 회복력 구축			120
	4-1 데이터 기반 기후행동 이행		30
	4-1-1 인천형 탄소지도 및 활용체계 구축	데이터/서비스	20
	4-1-2 인천 RE100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응용 서비스	10
	4-2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60
	4-2-1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재난 예측 및 대응	플랫폼 기반	40
	4-2-2 환경 유해인자 확산 예측 및 대응 모델 개발	응용 서비스	20
	4-3 지속가능한 해양·녹지공간 관리		30
	4-3-1 '바다이음' 해양·연안 공간 관리 플랫폼	플랫폼 기반	20
	4-3-2 스마트 그린인프라 및 생태 네트워크 플랫폼	응용 서비스	10
5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7
	5-1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7
	5-1-1 공간정보정책 총괄 컨트롤타워(토지정보과) 기능 강화	정책과제	비예산
	5-1-2 최신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조례, 지침 및 실행계획 현행화	정책과제	7
	5-1-3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보안 체계의 전면적 강화	정책과제	비예산
	5-2 미래 선도를 위한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
	5-2-1 공간정보 R&D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정책과제	비예산
	5-2-2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정책과제	비예산
	5-2-3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상시 운영	정책과제	비예산
	5-2-4 민간 주도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	정책과제	비예산
	5-3 공간 지능 역량 내재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
	5-3-1 공무원 데이터 문해력 및 공간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과제	비예산
	5-3-2 맞춤형 공간정보 전문인력 활용 체계 구축	정책과제	비예산
	5-3-3 시민 대상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 활용 교육·홍보 강화	정책과제	비예산
	5-3-4 공간정보정책 성과 홍보 및 시민 참여 채널 다각화	정책과제	비예산

■ 인천의 미래상



■ 비전과 5대 목표

“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지능 AI-시티, 인천** ”

목표모델 01

디지털 전환 선도

- 1-1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 1-2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 1-3 입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 1-4 지능형 도시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목표모델 02

경제 혁신 촉진

- 2-1 지능형 도시계획 및 원도심 재생 지원
- 2-2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혁신 지원
- 2-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 2-4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 2-5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목표모델 03

시민 체감 실현

- 3-1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3-2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 3-3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 이동권 보장
- 3-4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목표모델 04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 4-1 데이터 기반 기후행동 이행
- 4-2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4-3 지속가능한 해양·녹지공간 관리

목표모델 05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 5-1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 5-2 미래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 5-3 공간 지능 역량 내재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 AI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의 다층적 데이터 전략

	AI 서비스 영역	핵심 데이터 영역	주요 기술 표준	핵심 가치
	변화탐지	• 시계열 포인트 클라우드, DEM/DSM	• LAS/LAZ	• 정량적 부피/높이 변화 분석
	공간컴퓨팅 (행정)	• 의미론적 3D 모델	• CityGML	• 법적/행정적 속성 정보
	공간컴퓨팅 (시뮬레이션)	• SimReady 3D 에셋	• OpenUSD	• 물리/재질 속성, 실시간 성능
	피지컬 AI	• 분류된 포인트 클라우드	• LAS/LAZ	• AI 인식 모델 훈련을 위한 원시 특징
	RAG 기반 LLM	• 공간 인덱싱 된 DB(속성)	• SQL, GeoJSON	• 검색 가능한 의미/공간 속성

V 과제별 세부내용

1. 디지털 전환 선도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1]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① 고정밀 3차원 도시 모델 구축 및 고도화

- (추진목표) 인천광역시 전역을 포괄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정밀도 25cm급 이상의 3차원 지형/건물 모델 구축, ▶ 공공 시설물 상세 모델링, ▶ '인천-트윈' 플랫폼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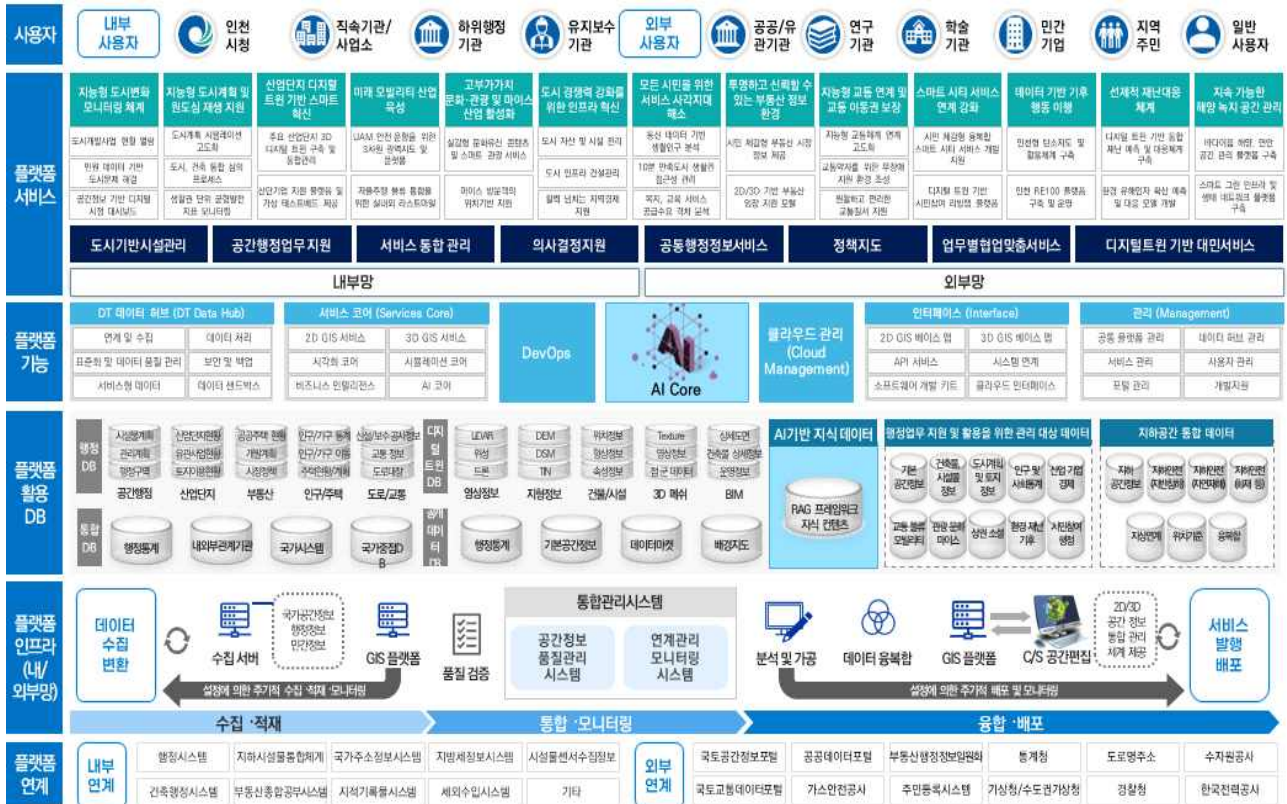
② 지하 공간 통합지도 모델 구축 및 고도화

- (추진목표) 지하 시설물 정보의 통합 및 정밀도를 높여 재난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지원
- (주요내용) ▶ 지하 시설물(상하수도, 통신, 전력 등)의 3D 통합 지도 구축, ▶ 지하 공간 정보 갱신 자동화, ▶ 재난 활용 시스템 연계



③ [선도과제]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핵심 API 개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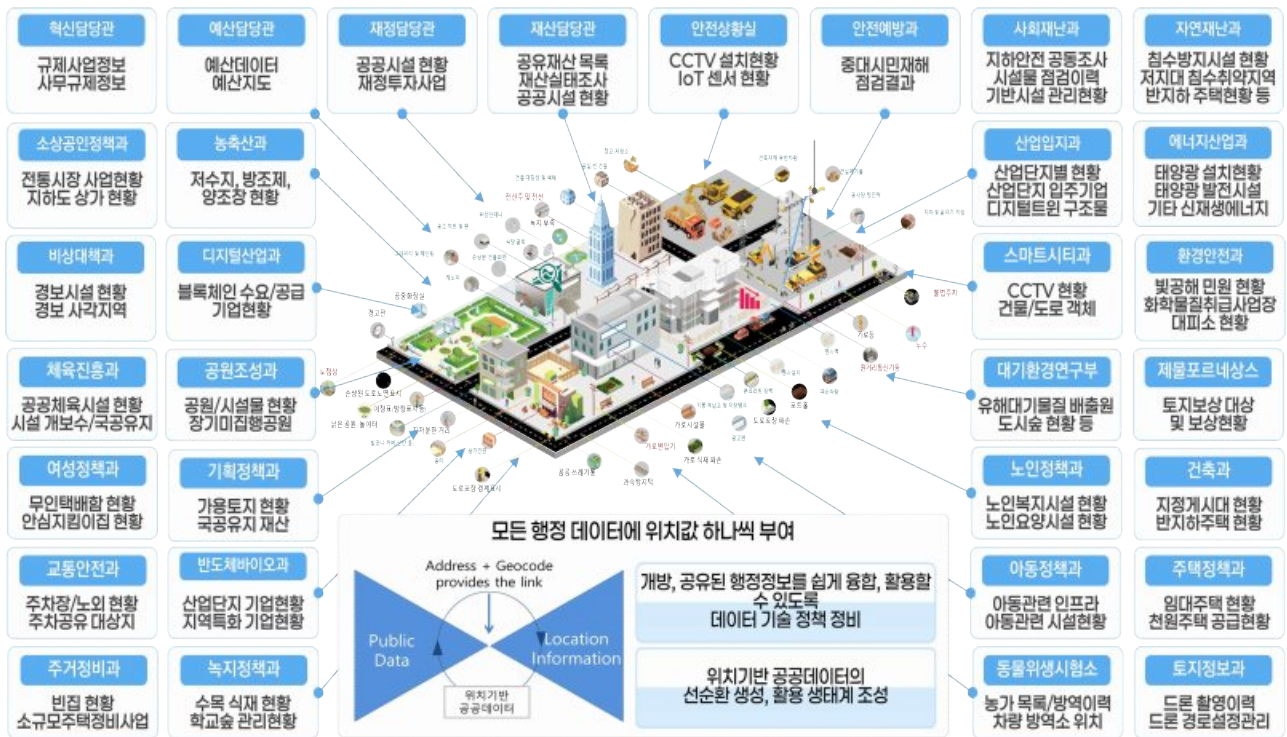
- (추진목표) 디지털 트윈 기반 데이터와 분석 기능을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성능 및 확장성 확보
- (주요내용) ▶ 플랫폼 기반 기술 업그레이드 (AI/빅데이터 융합), ▶ 시뮬레이션 기능 강화, 핵심 분석 API 개발 및 민간 개방



(2)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① 모든 행정 데이터의 공간정보화(Geocoding) 강화

- (추진목표) 행정 데이터의 위치 기반 분석 활용도(복잡한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를 극대화하여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약 45종 이상)
- (주요내용) ▶ 행정업무 시스템 연계 및 공간정보화 자동화, ▶ 표준 지오코딩 체계 확립, ▶ 비정형 데이터(민원 텍스트 등)의 공간정보화



②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 및 통합 데이터 구축, 연계

- **(추진목표)** 공간정보의 품질, 표준, 보안을 관리하는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 부서 간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며 상호운용성을 극대화
- **(주요내용)** ▶ 공간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기준 마련, ▶ 데이터 메타 시스템 구축, ▶ 부서 간 데이터 협의체 운영

(3) 입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① 다목적 드론 영상 수집 및 3D 데이터 구축, 갱신

- **(추진목표)**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및 3D 데이터의 주기적인 수집 체계를 확립하여, 도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행정 업무에 활용
- **(주요내용)** ▶ 고성능 드론 운용 인프라 및 전용 관제 시스템을 구축, ▶ 정사영상, 3D 모델(DSM, DTM) 등의 드론 데이터 수집 및 갱신 주기를 단축

2 [선도과제] 드론 기반의 지능형 도시관리 서비스 확대

- **(추진목표)** 드론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불법 행위 감시 등 다양한 현업 부서의 도시 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 **(주요내용)** ▶ 드론 영상 기반의 AI 객체 인식 및 변화 탐지 모델을 개발로 불법 건축물, 농지 이용 변경 등을 자동 감지, ▶ 주요 시설물(교량, 고가도로 등)에 대한 드론 자동 비행 및 비파괴 점검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적용, ▶ 현업 부서의 드론 활용 지원 확대, ▶ 드론 스튜디오 및 데이터 처리 센터 운영

③ 도시 변화 탐지 및 수시갱신 체계 강화

- (추진목표) 위성, 항공, 드론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AI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변화의 자동 감지 및 공간정보 최신성 유지
- (주요내용) ► 영상 기반의 AI 객체 인식 및 변화 탐지 모델을 개발로 불법 건축물, 농지 이용 변경 등을 자동 감지, ► 주요 시설물(교량, 고가도로 등)에 대한 드론 자동 비행 및 비파괴 점검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적용, ► 현업 부서의 드론 활용 지원 확대



[4] 지능형 도시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① 관내 도시개발 사업현황 열람 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모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진행 상황, 변경 이력 등을 지도 기반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
- (주요내용) ▶ 도시개발 사업별 위치, 사업 기간, 계획 내용 등을 지도 위에 시각화하여 제공, ▶ 인허가 진행 상황, 착공 및 준공 정보 등 최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 ▶ 시민들이 관심 있는 개발 지역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② 민원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문제 해결 관리체계 구축

- (추진목표) 시민 민원 데이터의 공간적 분석으로 도시 문제의 발생 패턴을 진단,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및 정책 수립 지원
- (주요내용) ▶ 민원 빅데이터(내용, 위치, 시간 등)의 공간적 군집 분석 및 패턴 예측 모델 개발, 민원 유형별 발생 원인을 공간 정보와 연계하여 진단하고, ▶ 해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대시보드 구축, ▶ 특정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지도 기반으로 가시화하여 담당 부서 간의 협업 및 신속한 대응 유도

③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시정’ 대시보드 고도화

- (추진목표) 정책결정권자들이 시정 현안을 공간정보 기반의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치기반 정책지표 시각화 지원
- (주요내용) ▶ 주요 시정 지표(재정, 인구, 정책 성과, 현안 사업 등)를 지도 기반으로 통합 시각화하는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상황실 정보, 재난 안전 정보 등과 연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입체적인 상황 판단 지원, ▶ ‘인천-트윈’ 플랫폼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사전 검토하는 환경 마련



2. 경제 혁신 촉진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1] 지능형 도시계획 및 원도심 재생 지원

①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 **(추진목표)** 도시 공간변화와 개발 시나리오를 예측·검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계획지원 체계 구축으로 도시계획 정합성과 과학성 제고
- **(주요내용)** ▶ 토지·교통·환경·인구 데이터를 통합한 3D 시뮬레이션 엔진 구축, ▶ 개발사업 영향 분석(교통·환경·기반시설 등) 자동화, ▶ 인허가·도시계획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연계 검토

② 도시·건축 통합 심의 프로세스 지원체계 구축

- **(추진목표)** 도시·건축 인허가 심의를 3D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해 심의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처리효율을 향상
- **(주요내용)** ▶ 건축·경관·교통·환경을 한 화면에서 통합 검토하는 심의지원 시스템을 구축, ▶ 설계안 자동검증·시각화 기능을 제공, ▶ 부서 공동 검토 프로세스 도입으로 중복 방지 및 처리 속도 개선

③ 원도심-신도심 연계 발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추진목표) 원도심과 신도심의 공간·인구·교통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
- (주요내용) ▶ 생활·산업·교통데이터를 연계한 공간 분석 기반을 마련,
▶ 지역 간 상호 영향(유출입 인구, 접근성, 기반시설 수요)을 모델링,
▶ 도시계획·재생사업 시 원-신도심 간 파급효과 예측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

④ 생활권 단위 균형발전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추진목표) 생활권별 인구·시설·접근성 등 핵심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 간 불균형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력 제고
- (주요내용) ▶ 생활SOC, 교통, 환경 등 생활여건 지표를 표준화해 위치 기반으로 분석, ▶ 지역 간 격차를 시각화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우선지원지역 자동 진단과 부서간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2)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혁신 지원

① 주요 산업단지 3D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통합 관리

- (추진목표) 산업단지 내 입지·시설·물류 흐름을 3D 기반으로 통합 관리해 산단 운영 효율성과 안전·환경 관리 수준 제고
- (주요내용) ▶ 산단 건물·도로·설비·환경 데이터를 3D 디지털트윈으로 구축, ▶ 에너지·교통·환경 등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 분석, ▶ 공업지역 특성 진단과 개선 시뮬레이션 제공, ▶ 산단 관리기관·입주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기반 조성

② 산단기업 지원 플랫폼 및 가상 테스트베드 제공

- (추진목표) 산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물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기업지원 플랫폼과 가상 테스트베드를 구축
- (주요내용) ▶ 산단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입지정보, 물류 흐름 분석, 공정 최적화) 제공하고, ▶ 변화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는 가상 테스트베드 환경 마련, ▶ 기업·공공·지원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산단 혁신 생태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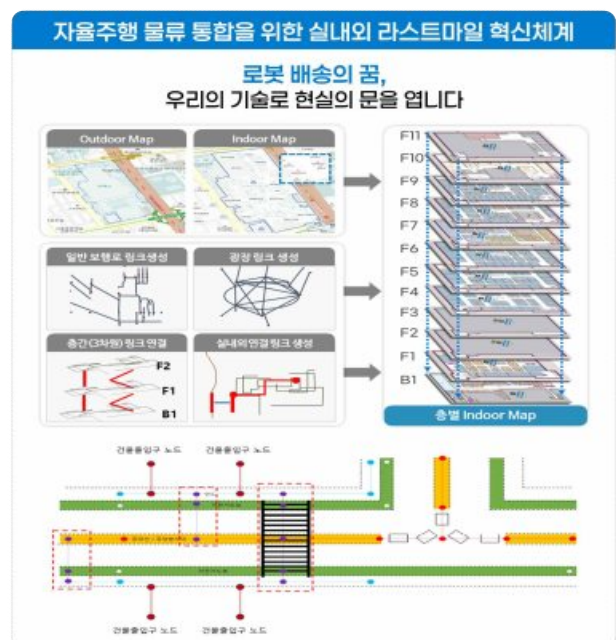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① UAM 안전 운항을 위한 3차원 공역지도 및 관제 플랫폼 구축

- (추진목표) 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대비해 안전한 운항경로·공역관리·관제 기반을 3D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 (주요내용) ▶도심·해안·공항 주변의 공역 구조를 3차원으로 정밀 모델링, ▶장애물·비행 제한구역·기상 정보를 통합한 공역지도를 구축, ▶UAM 운항경로·버티포트 입지·혼잡 위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여 교통망(I-MOD 등)과 연계

② 자율주행 물류 통합을 위한 실내외 라스트마일 혁신체계 개발

- (추진목표) 도시 물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실외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기반 라스트마일 물류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보행환경·도로·건물 내부 데이터를 연계한 자율주행 물류지도(Indoor-Outdoor Routing) 구축, ▶배송로봇·자율주행차량의 동선 최적화 모델을 개발, ▶물류 흐름 모니터링 및 시설 혼잡 예측 기능을 도입해 항만·산단·도심 배송을 통합 관리



[4]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①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인천의 문화유산·도시자산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해석해 실감형(AR/VR)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관광경쟁력을 강화
- (주요내용) ▶ 역사·문화 자원을 3D·AR로 구현하여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 ▶ 주요 관광지의 이동·해설·편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 구축, ▶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해 방문객 흐름·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② 마이스(MICE) 방문객의 위치기반 지원체계 구축

- (추진목표) 국제행사·전시·회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선 안내·시설 정보·교통·편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LBS (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Based Service) 기반 MICE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컨벤션센터·호텔·주요 베뉴를 중심으로 3D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투어·시설 안내 기능 제공, ▶ 방문객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숙박·편의시설 정보를 개인화하여 제공, ▶ 행사 운영자에게 참가자 통계·이동 패턴 등 운영 분석 도구 지원



[5]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① 지속가능한 도시 자산 및 시설 관리체계 구축

- (추진목표) 도시 시설물·자산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해 유지 보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 도로·교량·공공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의 상태·위험도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관리하며, ▶ 예측보수·우선순위 설정을 지원, ▶ 부서별 분산된 시설 데이터를 통합해 통합 모니터링 기반 마련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② 도시 교통 및 하천 인프라 건설관리 체계 구축

- (추진목표) 교통·하천 등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정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공사 품질·안전성·효율성을 강화
- (주요내용) ▶ 설계-시공-준공 전 과정을 공간데이터 기반으로 관리, ▶ 공정·안전·환경 영향 요소 시각화, ▶ 교통관로·하천 구조물 등 기반시설의 이력관리 기능 구축으로 사업 관리 투명성과 예측성 제고

③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지원체계 구축

- (추진목표) 상권·소상공인·지역경제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체계화
- (주요내용) ▶ 상권 변화, 유동인구, 점포 현황 등 경제 데이터를 공간기반으로 통합 분석, ▶ 쇠퇴지역·성장지역을 시각화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 ▶ 창업·재창업 지원정보, 정책대상 지역 진단 기능 등을 제공해 현장 중심의 경제활성화 지원



3. 시민 체감 실현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

(1)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① 통신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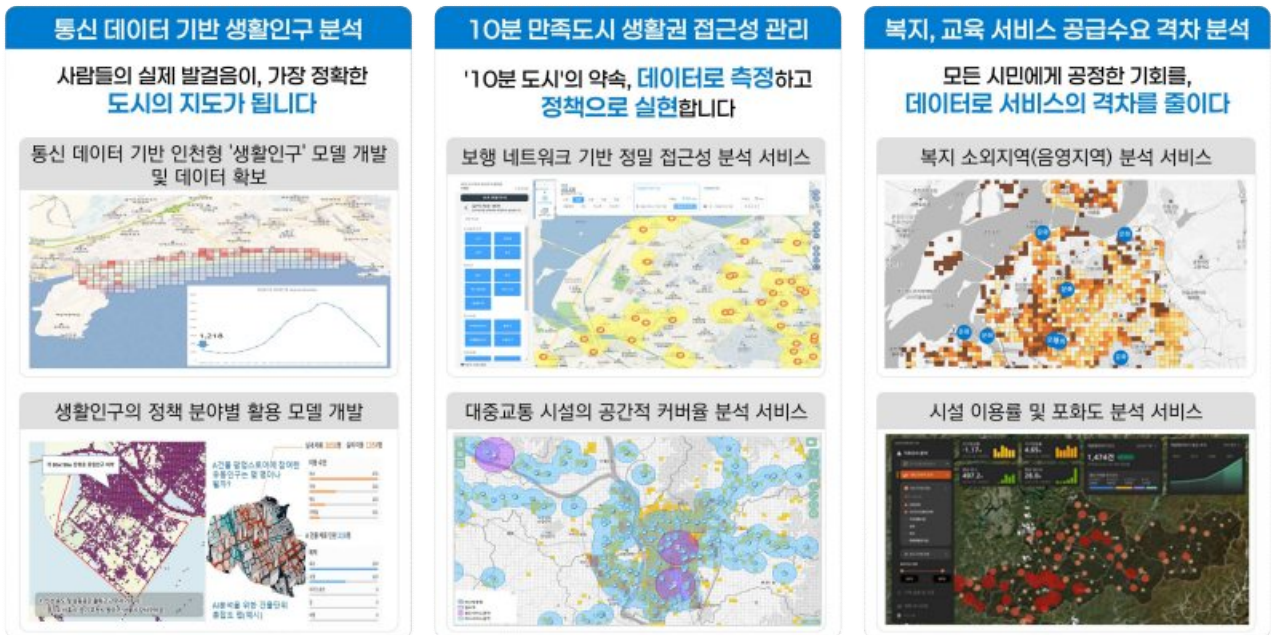
- (추진목표) 도시 내 실제 체류·이동 인구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하게 파악하고, 생활권·시간대별 인구 변화 분석을 통해 생활·안전·교통 정책의 근거를 강화
- (주요내용) ▶ 통신사 유동 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결합해 생활권·상권·관광지 등의 혼잡도/체류패턴 분석, ▶ 생활인구 변화를 공간·시간 단위로 분석, ▶ 혼잡예측·수요관리 등 예측 모델과 시각화

② ‘10분 만족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발 및 관리

- (추진목표) 보건·보육·문화·공원 등 생활SOC의 ‘10분 이내 접근성’을 정량 평가해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생활 인프라의 균형적 공급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 (주요내용) ▶ 핵심 생활시설의 도보·대중교통 접근성을 분석해 지역별 격차 시각화, ▶ 서비스 부족지역을 자동 진단해 신규 시설 입지 제안, ▶ 10분 생활권 지표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 효과 관리

③ 복지·보육 서비스 공급-수요 격차 분석 시스템 개발

- (추진목표) 복지·보육 서비스의 공급과 실제 수요를 정밀 분석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 영유아·노인 등 정책대상 인구 분포와 어린이집·복지기관 등의 공급 현황을 공간 기반으로 중첩 분석해 서비스 부족 지역을 자동 진단, ▶ 지역별 대기수요·초과공급 문제 시각화, ▶ 신규 시설 입지 선정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시스템 구축



(2)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① [선도과제] 시민 체감형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체계

- (추진목표) 부동산 가격·거래·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통합 제공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뢰 기반 정보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실거래가·공시가격·개발계획 등을 지도 기반으로 한 화면에 통합 제공, ▶ 관심 지역 알림·변동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 ▶ 허위 정보·정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 신뢰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시각화를 제공해 시민과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

② 2D/3D 기반 부동산 임상 지원 포털 구축

- **(추진목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건물·입지·환경 정보를 2D·3D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임상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기업의 조사 편의성 향상
- **(주요내용)** ▶ 건물 구조, 주변환경, 일조·조망 등 주요 요소를 3D 모델로 구현해 가상 임상 기능 제공, ▶ 주변 개발정보·기반시설·규제 정보의 자동 연계, ▶ 부동산 민원·상담 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통합 현장분석 도구로 활용



(3)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 이동권 보장

① 정밀도로지도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ITS) 연계 체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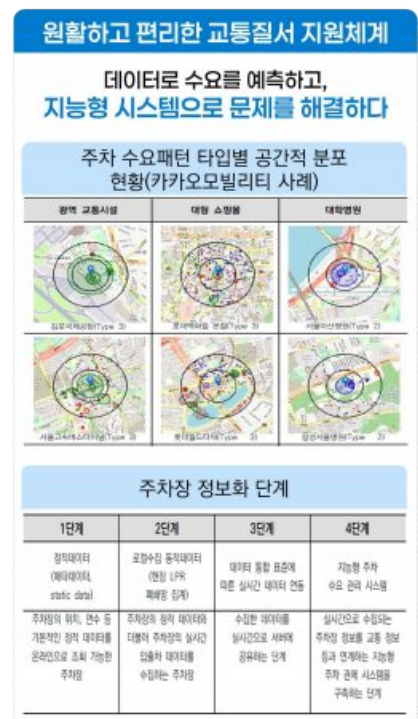
- **(추진목표)** 정밀도로지도와 ITS 데이터를 연계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예측·관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 ITS 시설물, 차선 단위 교통정보, 돌발 상황 등을 정밀도로지도 기반으로 통합 시각화, ▶ AI 기반 교통 예측을 통해 신호 최적화·혼잡 완화 지원, ▶ 디지털트윈과 연계해 정책 시뮬레이션과 교통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②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지원환경 조성

- (추진목표)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정보적 장벽을 제거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보행로 기울기·단차·경사로·보도 폭 등 세부 무장애 정보를 공간데이터로 구축, ▶ 휠체어·보행약자 맞춤형 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 ▶ 장애물·위험구간 자동 감지 및 업데이트 기반으로 이동권 보장 체계의 정확성 향상

③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지원체계 구축

- (추진목표) 교통법규 위반 발생을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관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질서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불법주정차·위험운전 등 위반 데이터를 분석해 상습 지역과 발생 가능성을 예측, ▶ 최적 단속지점·순찰경로를 제공, ▶ 위반·사고 연관성 분석과 시각화 기능을 구축, ▶ 사후 단속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4]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① 시민 체감형 융복합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추진목표)** 도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치·효과·상태 기반으로 통합 시각화해 정책 연계성과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교통·안전·환경·에너지 등 스마트 도시서비스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집계, ▶ 설치 위치·운영상태·효과를 한 화면에서 조회, ▶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신규 서비스 수요지역을 진단하는 분석 기능을 제공, ▶ 부서 간 협업 기반 강화

② ‘인천-트윈’ 연계형 시민참여 리빙랩 및 제안 플랫폼 구축

- **(추진목표)** 시민 의견과 생활 불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감형 정책 실행력 제고
- **(주요내용)** ▶ 민원·현장 제보·시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공간 기반으로 통합 분석, ▶ 불편 발생 지역·패턴을 자동 진단해 서비스 개선 우선순위 도출, ▶ 시민-행정 간 상시 소통 채널을 연동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4.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도시 안전 및 기후 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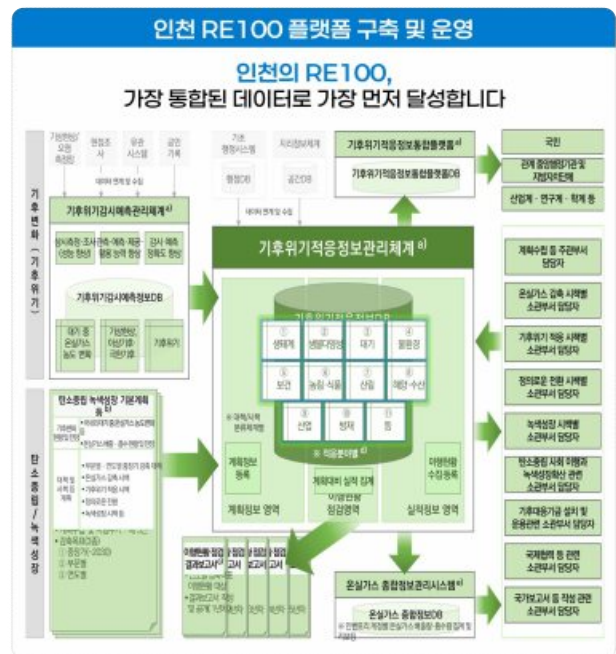
(1) 데이터 기반 기후행동 이행

① [선도과제] 인천형 탄소지도(Carbon Map) 및 활용체계 구축

- (추진목표) 도시 전역의 탄소 배출·흡수 특성을 공간 기반으로 시각화해 기후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지역 맞춤형 감축전략 수립을 지원
- (주요내용) ▶ 부문별(수송·건물·산업 등) 탄소 배출량과 녹지·해양 등 흡수원을 위치 기반으로 통합 분석하여 탄소지도를 구축, ▶ 취약 지역·우선관리권역을 자동 진단, ▶ 감축 시나리오별 효과를 시각화해 정책 실행력 제고

② 인천 RE100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추진목표) 재생에너지 수요·공급·인프라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인천시 공공·산업 부문의 RE100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소비 현황, 도입 가능성 등을 공간기반으로 분석하여 RE100 이행 경로를 제시, ▶ 기업·기관의 참여 현황과 목표 달성도를 모니터링하는 공개형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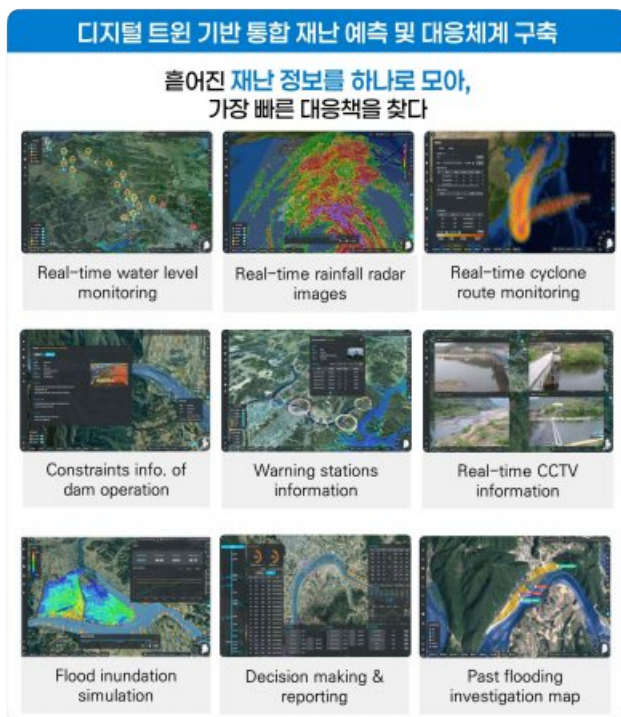
(2)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① [선도과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재난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

- (추진목표) 기상·지형·시설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 침수·산사태·화재·폭염 등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를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 ▶ 위험지점·전파경로·대응시간을 자동 산정, ▶ CCTV·센서·교통 정보와 연계해 재난 경보·대피·현장 대응을 통합 지원

② 환경 유해인자 확산 예측 및 대응 모델 개발

- (추진목표)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유해인자의 확산 경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환경안전 사고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
- (주요내용) ▶ 산업단지·하천·연안 등 주요 지역의 오염원 데이터를 통합, ▶ 기상·지형 요소를 반영한 확산 예측 모델 구축, ▶ 노출 취약 지역과 영향 범위를 시각화해 환경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



(3) 지속가능한 해양·녹지공간 관리

① ‘바다이음’ 해양·연안 공간 관리 플랫폼 구축

- (추진목표) 해양·연안의 환경·재난·이용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안전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조위·수질·해양쓰레기·침식 등 연안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통합, ▶ 위험구간 및 관리 필요지역을 자동 진단, ▶ 해양 이용(관광·어업·항만) 정보를 연계해 다중 이용 갈등 조정으로 연안 관리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② 스마트 그린인프라 및 생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추진목표) 녹지·생태·환경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도시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후적응과 생태 네트워크 회복력을 강화
- (주요내용) ▶ 공원·녹지·산림·하천의 현황과 단절 구간을 공간 분석해 생태축 연결성을 평가, ▶ 복원 우선지역을 제시, ▶ 도시 열섬·미세 먼지 등 환경 취약지 진단 기능을 제공, ▶ 녹지 확충 및 생태 기반 도시계획을 지원



5.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및 정책 기반 강화)

“ 다층적 실행체계로 **선순환**하는 **공간정보정책 생태계 조성** ”

조직 공간정보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토지정보과) 기능 강화	▪ 협업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기술 및 플랫폼 기반 협업 활성화 ▪ 역량 강화 및 협업 문화 조성	법제도 최신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조례 및 지침 현대화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현대화 ▪ 관련 내부 지침 신설 및 현대화
협력 네트워크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 제도적 기반 강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핵심 프로그램 설계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단계별 실행 로드맵)	교육 및 역량 강화 공무원 데이터 문해력 및 공간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제도적 기반 강화 (제도적 지원) ▪ 핵심 프로그램 설계 (맞춤형 교육 체계) ▪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전문가 자문단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상시 운영	▪ 다분야 전문가 풀 구성 ▪ 상시적·체계적 운영 ▪ 정책 결정 과정과의 연계	홍보 및 참여 확대 공간정보정책 성과 홍보 및 시민 참여 채널 다각화	▪ 성과 홍보의 스토리텔링화 및 다매체 확산 ▪ 온·오프라인 참여 채널의 통합 및 고도화 ▪ 참여와 성과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

(1)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① 공간정보정책 총괄 컨트롤타워(토지정보과) 기능 강화

- **(추진목표)** 시정 전반의 공간정보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 일관된 전략 추진과 부서 간 협업을 체계화
- **(주요내용)** ▶ 토지정보과를 총괄 컨트롤타워로 재정립하고, ▶ 조직·인력·권한을 강화해 기획-표준-품질-활용까지 일원화, ▶ 부서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실행력과 책임성 제고

② 최신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조례, 지침 및 실행계획 현행화

- **(추진목표)** 디지털트윈·데이터 행정 등 최신 공간정보 환경을 반영해 법·제도·지침을 정비하고 정책 실행의 근거를 강화
- **(주요내용)** ▶ 공간정보 조례·행정지침을 디지털전환 기반으로 개편, ▶ 데이터 구축·활용 기준을 최신 표준에 맞춰 갱신, ▶ 플랫폼·AI·표준 관련 규정을 반영해 정책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 공간정보 정책 종합계획의 정례적 수립 및 재정비

③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보안 체계의 전면적 강화

- (추진목표) 전사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보안체계를 통합 구축해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립
- (주요내용) ▶ 메타데이터, 품질 기준, 표준 모델 등 전사 표준 규칙 마련, ▶ 데이터 오류·중복을 줄이는 품질검증 체계 구축, ▶ 접근 권한·보안관리의 통합 운영으로 데이터 안전성 강화

(2) 미래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① 공간정보 R&D 발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추진목표) AI 분석·디지털트윈·3D 모델링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형 공간정보 R&D를 발굴·지원
- (주요내용) ▶ 산·학·연 공동 R&D 과제를 기획, ▶ 시범사업·실증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증, ▶ 디지털트윈·AI 기반 분석 등 중장기 기술 개발을 지원해 혁신 역량 제고

②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 (추진목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실증-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주요내용) ▶ 정기 협의체와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 ▶ 대학·기업·연구기관과 연계된 공동 프로젝트 운영, ▶ 인천형 실증·사업화 모델을 확산해 산업 생태계 강화

③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상시 운영

- (추진목표) 외부 전문가의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해 정책·기술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 (주요내용) ▶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 ▶ 정례 자문·검토 체계를 운영해 전략·사업의 완성도 제고, ▶ 정부·지자체·민간 R&D와 연계된 자문 기능 강화

④ 민간 주도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리빙랩 운영 확대

- (추진목표) 인천-트윈,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증 환경을 민간에 개방해 혁신기술·서비스 개발을 촉진
- (주요내용) ▶도심·산단 등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운영, ▶시민 참여형 리빙랩 확충, ▶공공데이터·API 개방 확대로 스타트업·기업 혁신 지원

[3] 공간지능 역량 내재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① 공무원 데이터 문해력 및 공간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표) 전 공무원의 데이터·공간 분석 역량을 강화해 공간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조직에 내재화
- (주요내용) ▶직무별 데이터 교육과 실습형 공간 분석 훈련을 제공, ▶디지털트윈·GIS 활용 사례 중심 프로그램 운영, ▶부서 간 공동 활용 역량 강화

② 시민 대상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 활용 교육·홍보 강화

- (추진목표) 시민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과 공간정보 이해도를 높여 정책 효과와 참여도를 확대
- (주요내용) ▶시민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트윈·공간정보 활용 사례를 시각적 콘텐츠로 제공, ▶온라인 홍보채널을 확대해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

③ 공간정보정책 성과 홍보 및 시민 참여 채널 다각화

- (추진목표) 정책 추진성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참여 채널을 다양화해 공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
- (주요내용) ▶성과 지표·서비스 효과를 시각화하여 공개, ▶SNS·참여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정책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로 연결되는 참여 구조 조성

VI 추진체계 및 과제별 이행계획

[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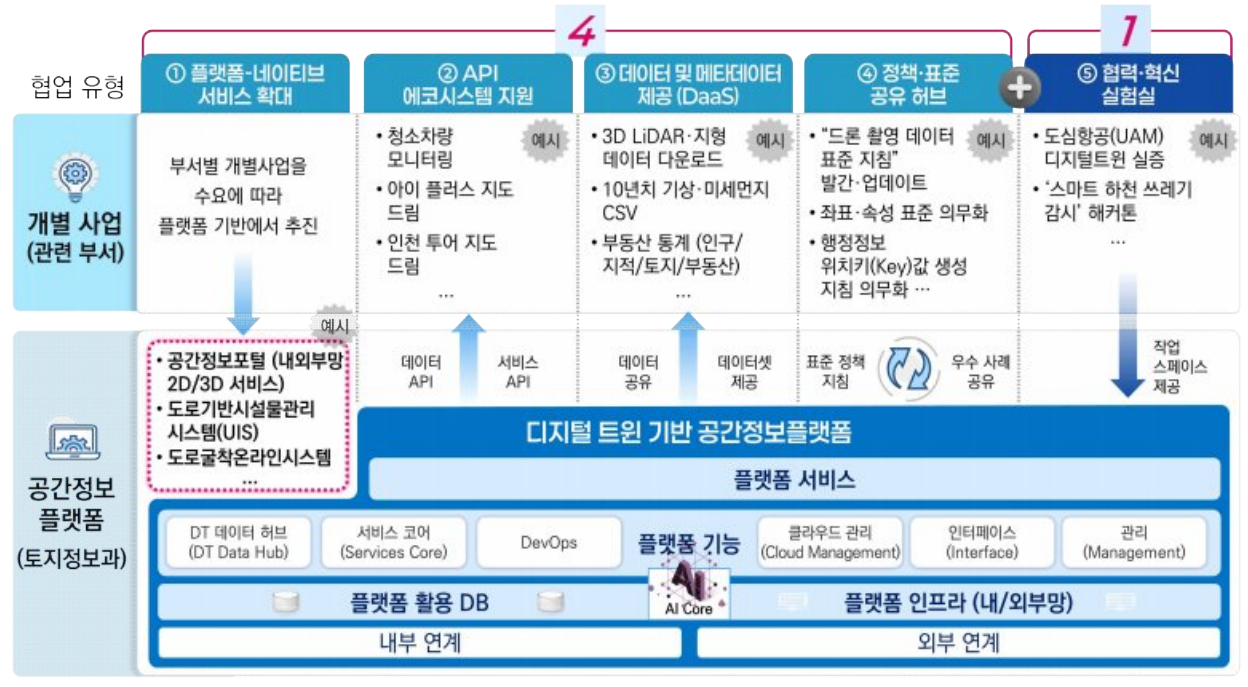
- ‘공간지능과(가칭)’ 중심의 총괄 운영 및 조정 역할 수행
 -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5개년)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
 - 개별사업은 중복투자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고, 향후 집행실적 평가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 역할 강화
 - 민·관·학의 기존 구성 방법에서 민·정·관·학·연으로 확대 개편
 -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 추진체계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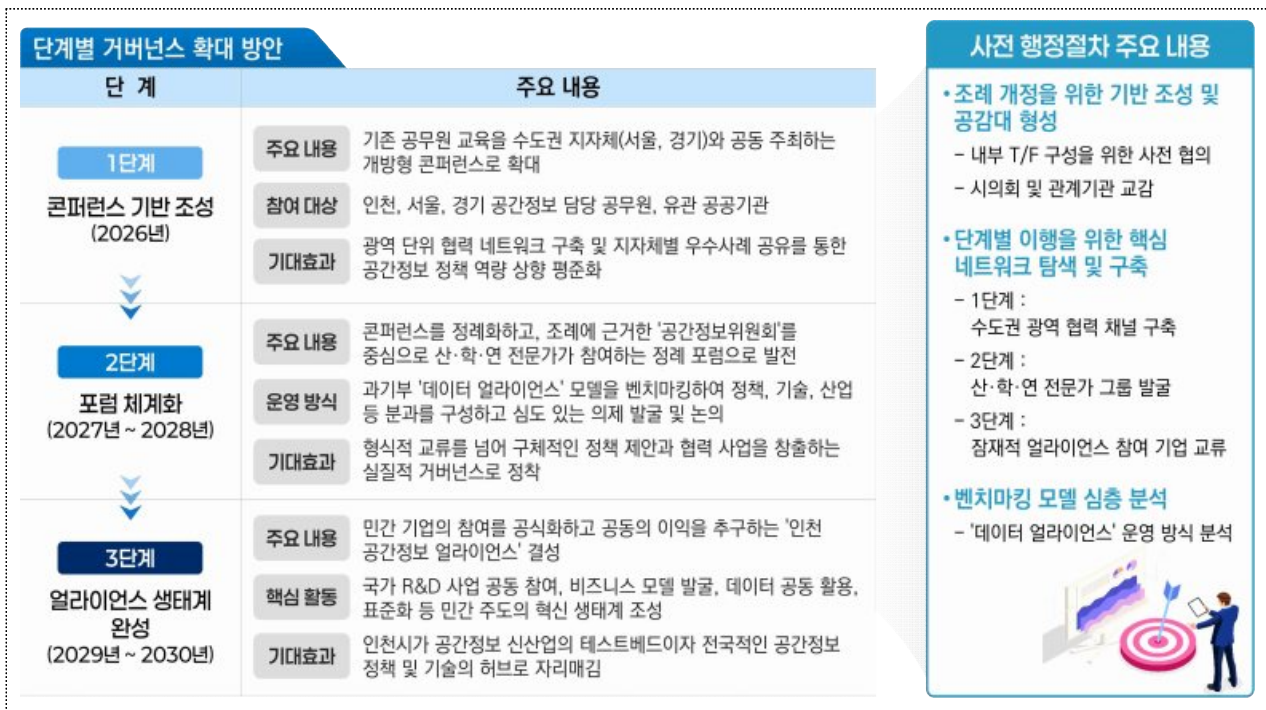
[2] 4+1 플랫폼 전략 및 협업체계

- 4대 축(데이터·기술·서비스·거버넌스)을 통합 관리하고, 민·정·관·학·연이 참여하는 ‘+1 협력축’을 통해 공간정보를 도시운영의 공통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전략

“서비스와 데이터, 표준과 협력이 만나 플랫폼 혁신 생태계를 완성”



- 단계별 거버넌스 확산으로 공간정보 정책의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 조례를 통한 법적 위상과 실행력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체계가 단순 심의 역할을 넘어 인천 공간정보 산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3] 핵심 선도과제 추진

- 국가정책 연계성, 시정 핵심목표와 시너지, 시민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추진이 필요한 5개 선도사업 선정

선도사업	핵심 가치	전략적 추진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1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핵심 API 개발	"공간을 엮는 심장, 미래를 여는 지혜"	6대 핵심 구성요소 체계적 고도화 및 개방형 API 생태계를 확장 6대 핵심 구성요소 : ① DT Data Hub, ② Service Core, ③ Interface, ④ Management, ⑤ DevOps, ⑥ Cloud Management - 핵심 API 개발 : 데이터 API, 공간분석 API, 시뮬레이션 API, 서비스 연계 API의 4대 분야로 구체화하여, 50개 개선과제와 4대 선도사업을 직접 지원		
2 드론 기반의 지능형 도시관리 서비스 확대	"3D로 담은 도시, 실시간 서비스로 오픈"	- 드론 스테이션 설치 -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 드론 활용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 다양한 행정 수요에 드론 적용/활용 확대 - 경찰청·소방청·환경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 거버넌스 및 산업 연계 - 민·관·산·학 협력 생태계 - 테스트베드를 운영
3 시민 체감형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체계	"부동산 정보, 손안에서 한눈에"	- 지적도, 공시지가, 거래, 인구 등 기초 데이터를 정합화 - 부동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구축	- 체감형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 - 생활권 단위의 맞춤형 분석 서비스 - 모바일 부동산 정보 제공	- 지능형 고도화 - AI/빅데이터 기반 예측형 분석 - 미래지향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4 인천형 탄소지도 및 활용체계 구축	"탄소 그림자를 걷어낸, 맑은 숨결의 도시"	- 주요 배출원과 흡수원 데이터를 수집·정합화 - 격자 단위로 시각화한 탄소지도의 시범 서비스	- 생활권 단위 탄소 수치 분석 - 인천 특화 모듈 서비스 확대 '우리동네 탄소지도' 등 체감형 서비스	- 거버넌스 고도화 -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정착 -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 확보
5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재난 예측 및 대응	"미리 예측하는 재난, 데이터로 지키는 생명"	- 물입형 3차원 상황인식 플랫폼 - 재난 대응의 시각적·운영적 기반	- 폭염, 산사태 등 다중 재난 위험도 평가 - 사회적 취약계층 분석 - 동적 예측 및 시각화 시뮬레이션	- 재난 관리의 범위를 기반침하 등 지하 안전 영역까지 통합 -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4] 투자 및 자원조달 계획(안)

- 종합계획 기간인 향후 5년간 약 67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5년간 단계적 투자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플랫폼·데이터·인프라 등 기반 구축에, 이후에는 서비스 확산과 고도화에 예산을 집중

전략	추진 과제	소요예산 (억원)					
		계	'26	'27	'28	'29	'30
①	디지털 전환 선도 - 과학적 도시계획 및 첨단 관리를 위한 '인천-트윈 (Incheon-Twin)' 플랫폼 구축	220	30	128	44	14	4
	1-1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100	19	66	15	-	-
	1-2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40	-	30	10	-	-
	1-3 입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50	11	22	9	4	4
	1-4 지능형 도시변화 탐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0	-	10	10	10	-
②	경제 혁신 촉진 - 미래 산업 견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225	-	20	90	80	35
	2-1 지능형 도시계획 및 원도심 재생 지원	60	-	20	30	10	-
	2-2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혁신 지원	40	-	-	-	20	20

전략	추진 과제	소요예산 (억원)					
		계	'26	'27	'28	'29	'30
	2-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60	-	-	40	20	-
	2-4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20	-	-	-	10	10
	2-5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45	-	-	20	20	5
③	시민 체감 실현 - 포용적 생활환경 및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구현	105	-	5	45	30	25
	3-1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0	-	-	10	10	10
	3-2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20	-	5	5	-	10
	3-3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5	-	-	10	10	5
	3-4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30	-	-	20	10	-
④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 환경 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관리	120	-	10	20	50	40
	4-1 데이터 기반 기후행동 이행	30	-	10	10	10	-
	4-2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60	-	-	-	20	40
	4-3 지속가능한 해양·녹지공간 관리	30	-	-	10	20	-
⑤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 공간 지능 시대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7	-	-	2	-	5
	5-1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7	-	-	2	-	5
	5-2 미래 선도를 위한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	-	-	-	-	-
	5-3 공간 지능 역량 내재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	-	-	-	-	-
전체 합계		677	30	163	201	174	109

- 사업 구축기간(5년)과 운영 및 편익 발생기간(25년)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는 약 1조 4,106억원으로 분석됨
- 순현재가치(NPV)는 약 1조 4,106억 원으로 경제적 순기여가 크며, 비용 편익비율(B/C)은 2.43으로 산출되어 비용 대비 약 2.43배의 편익 창출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정량 효과	• 공통 기능(API, 인증, 지도 등) 재사용 → 중복 개발 방지 • DevOps·CI/CD 자동화로 서비스 구축·배포 기간 단축	• 신규 공간정보 사업 예산 30% 이상 절감 • 서비스 개발·배포 기간 50% 이상 단축
정성 효과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생활권 접근성, 민원 기반 도시문제 해결 등) • 개방형 API 통한 민간 혁신 서비스 창출 • 외산 종속 탈피, 국산·오픈소스 기반으로 전환	• 행정 효율성 제고 • 시민 서비스 혁신 • 신산업 육성 및 민관 협력 강화 • 디지털 주권 확보
장기 효과	• 데이터 중복 구축 방지 및 자동화 → 행정 비용 절감 • 교통 효율화·재난 대응 개선·탄소 절감 → 사회적 비용 감소 • 민간 서비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높음 •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 과제의 시급성, 상호 연관성,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26년~'30년)의 연차별 공모사업 신청 로드맵 수립
- 초기에는 '인천-트윈'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인프라, 중기에는 응용 서비스 개발 및 확산, 후기에는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에 중점을 두는 단계적 접근
 - 중앙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스마트시티, 안전 등 다양한 분야 공모사업을 인천시 개선과제와 연계한 자원 조달방안 추진

추진전략	2026년 (기반 구축)	2027년 (기반 고도화)	2028년 (서비스 확산)	2029년 (서비스 심화)	2030년 (생태계 완성)
11 '인천-트윈' 플랫폼	111 3D모델 구축 (국토부)	112 지하공간 통합 (국토부)	113 플랫폼 고도화 (과기부)	-	-
12 데이터 거버넌스	121 공간정보화 (과기부)	122 데이터 거버넌스 (과기부)	-	-	-
13 입체정보 수집	131 드론 데이터 구축 (국토부)	133 변화탐지 강화 (국토부)	132 드론 도시관리 (국토부)	-	-
14 도시변화 모니터링	-	142 민원 AI 분석 (과기부)	141 개발현황 열람 (국토부)	143 시정 대시보드 (과기부)	-
21 도시계획 /재생	211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국토부)	213 원도심-신도심 연계 (국토부)	212 통합 심의 지원 (국토부)	214 균형발전 모니터링	-
22 산업단지 혁신	221 산단 디지털 트윈 (산업부)	222 기업 지원 플랫폼 (산업부)	-	-	-
23 미래 모빌리티	231 UAM 플랫폼 (국토부)	-	232 자율주행 물류 (국토부)	-	-
24 문화/관광	-	241 스마트 관광 (문체부)	-	242 MICE 지원 (문체부)	-
33 지능형 교통	331 ITS 고도화 (국토부)	332 무장애 환경 (국토부)	333 교통질서 지원 (국토부)	-	-
34 스마트시티 연계	-	342 시민참여 리빙랩 (행안부)	341 융복합 서비스 (국토부)	-	-
41 기후행동	411 탄소지도 구축 (환경부)	412 RE100 플랫폼 (산업부)	-	-	-
42 재난대응	421 재난 예측 시스템 (행안부)	422 유해인자 확산 (행안부)	-	-	-
43 해양/녹지	431 해양 플랫폼 (해수부)	432 그린인프라 (환경부)	-	-	-
52 혁신 생태계	-	524 스타트업 파크 (중기부)	(R&D, 협력과제 지속)	(R&D, 협력과제 지속)	(R&D, 협력과제 지속)

[5] 과제별 담당기관 및 추진일정

1 디지털 전환 선도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26	27	28	29	30	
1-1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1-1-1 고정밀 3차원 도시 모델 구축 및 고도화						토지정보과
	1-1-2 지하 공간 통합지도 모델 구축 및 고도화						시민안전본부
	1-1-3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핵심 API 개발						토지정보과
1-2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1-2-1 모든 행정 데이터의 공간정보화 (Geocoding) 강화						정보화담당관 토지정보과
	1-2-2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 및 통합 데이터 구축, 연계						디지털산업과
1-3 입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1-3-1 다목적 드론 영상 수집 및 3D 데이터 구축, 갱신						토지정보과
	1-3-2 드론 기반의 지능형 도시관리 서비스 확대						토지정보과
	1-3-3 도시 변화 탐지 및 수시갱신 체계 강화						토지정보과
1-4 지능형 도시변화 탐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1-4-1 관내 도시개발 사업현황 열람 서비스 제공						도시계획과
	1-4-2 민원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문제 해결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산업과
	1-4-3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시정' 대시보드 고도화						정보화담당관 토지정보과

2 경제 혁신 촉진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26	27	28	29	30	
2-1 지능형 도시계획 및 원도심 재생 지원	2-1-1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도시계획과
	2-1-2 도시·건축 통합 심의 고도화 및 지원체계 구축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2-1-3 원도심-신도심 연계 발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주거정비과
	2-1-4 생활권 단위 균형발전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거정비과
2-2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혁신 지원	1-2-1 주요 산업단지 3D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통합 관리						정보화담당관 토지정보과
	1-2-2 산단기업 지원 플랫폼 및 가상 테스트베드 제공						디지털산업과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26	27	28	29	30	
2-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1-3-1 UAM 안전 운항을 위한 3차원 공역지도 및 관제 플랫폼 구축						토지정보과
	1-3-2 자율주행 물류 통합을 위한 실내외 라스트마일 혁신체계 개발						토지정보과
2-4 지능형 도시변화 탐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1-4-1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도시계획과
	1-4-2 마이스(MICE) 방문객의 위치기반 지원체계 구축						정보화담당관 토지정보과
2-5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1-5-1 지속가능한 도시 자산 및 시설 관리체계 구축						재산담당관 사회재난과
	1-5-2 도시 교통 및 하천 인프라 건설관리 체계 구축						종합건설본부 도시균형국
	1-5-3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3 시민 체감 실현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26	27	28	29	30	
3-1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1-1 통신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 모델 개발						디지털산업과 장애인복지과
	3-1-2 '10분 만족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발 및 관리						도시계획과 장애인복지과
	3-1-3 복지·보육 서비스 공급-수요 격차 분석 시스템 개발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3-2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3-2-1 시민 체감형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체계						토지정보과
	3-2-2 2D·3D 기반 부동산 입장 지원 포털 구축						토지정보과
3-3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 이동권 보장	3-3-1 정밀도로지도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ITS) 연계 체계 고도화						교통정보운영과
	3-3-2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Barrier-Free) 지원환경 조성						택시운수과
	3-3-3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지원체계 구축						교통안전과 택시운수과
3-4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3-4-1 시민 체감형 융복합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지원						토지정보과
	3-4-2 '인천-트윈' 연계형 시민참여 리빙랩 및 제안 플랫폼 구축						도시관리과

4 지속 가능한 회복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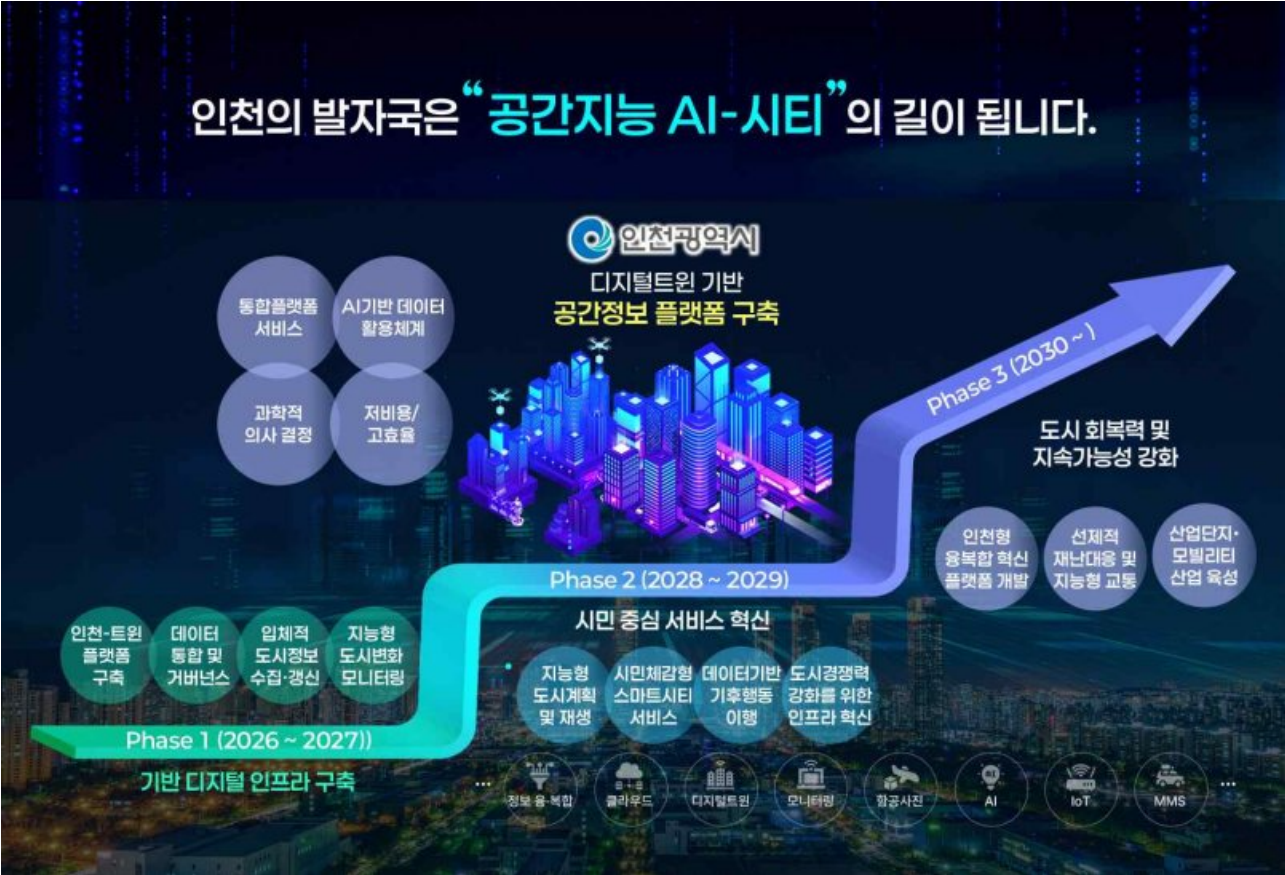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26	27	28	29	30	
4-1 데이터 기반 기후행동 이행	4-1-1 '인천형 탄소지도 및 활용체계 구축						환경기후정책과
	4-1-2 인천 RE100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미래산업국
4-2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4-2-1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재난 예측 및 대응						시민안전본부
	4-2-2 환경 유해인자 확산 예측 및 대응 모델 개발						환경안전과
4-3 지속가능한 해양·녹지공간 관리	4-3-1 '바다이음' 해양·연안 공간 관리 플랫폼 구축						해양항공국
	4-3-2 스마트 그린인프라 및 생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도시균형국

5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26	27	28	29	30	
5-1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5-1-1 공간정보정책 총괄 컨트롤타워(토지정보과) 기능 강화						토지정보과
	5-1-2 최신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조례, 지침 및 실행계획 현행화						토지정보과
	5-1-3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보안 체계의 전면적 강화						토지정보과
5-2 미래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5-2-1 공간정보 R&D 발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토지정보과
	5-2-2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토지정보과
	5-2-3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상시 운영						토지정보과
	5-2-4 민간 주도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리빙랩 운영 확대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5-3 공간 지능 역량 내재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5-3-1 공무원 데이터 문해력 및 공간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토지정보과 인재개발원
	5-3-2 시민 대상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 활용 교육·홍보 강화						토지정보과
	5-3-3 공간정보정책 성과 홍보 및 시민 참여 채널 다각화						토지정보과

■ 연차별 로드맵(안)

목표	추진전략	1단계 (기반 디지털 인프라)		2단계 (시민 중심 서비스 혁신)		3단계 (도시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디지털 전환 선도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고정밀 3차원 도시 모델 구축 및 고도화	지하 공간 용인제도 도입 구축 및 고도화	도시 변화 탐지 및 수시점검 체계 강화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데이터 처리 개발	영동 행정 데이터 공공데이터화 (Decoding) 강화			
경제 혁신 촉진	임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원시적 데이터 캐치온스 및 통합 데이터 구축, 연계	다목적 드론 정보 수집 및 3D 데이터 구축, 갱신	도로 기반의 지능형 도시데이터 서비스 확대		
	지능형 도시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내 도시계획 사업현황 열람 서비스 제공	관외 데이터 기반 ‘지능형 시민’ 데이터 고도화		
시민 체감 실현	지능형 도시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도시계획 시민참여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도시-건축 통합 실리 고도화 및 지능형 구축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질서 지원		도시-건축 통합 실리 고도화 및 지능형 구축	협도상-신도시 연계 발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지속 가능한 회복력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지속 가능한 회복력 구축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 이동권 보장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 이동권 보장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 이동권 보장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데이터 기반 기후환경 이행		데이터 기반 기후환경 이행	데이터 기반 기후환경 이행		
지속 가능한 회복력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해양·농지공간 관리		지속가능한 해양·농지공간 관리	지속가능한 해양·농지공간 관리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력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경제력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경제력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미래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속 가능한 회복력 구축	공간 정보 역량 강화와 시민 공공대 확산		공간 정보 역량 강화와 시민 공공대 확산	공간 정보 역량 강화와 시민 공공대 확산		



부록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5대 목표-19개 전략-50개 과제)

1. 디지털 전환 선도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1] `인천-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과제명	1-1-1 고정밀 3차원 도시 모델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일정	2026년			소요예산	4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40	14	26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미래산업국, 시민안전본부	
추진배경	• 항공사진, 위성영상, LiDAR, 3D 메시(Mesh), BIM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3차원 도시 모델을 구축하여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중 •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는 3D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효율성 제고 필요 • '제물포 르네상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기존 2D 도면 중심 행정은 복합적 도시 변화 예측 및 분석에 한계 존재					
추진목표	• 현재의 3D 도시 모델을 AI 비전 기술과 개방형 표준을 통해 'AI 기반 공간컴퓨팅 플랫폼'으로 전환, 인천시의 미래 신산업 선도 및 국가적 AI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함					
주요 추진내용	• 서비스 목록: - 시민 소통: NeRF/3DGS 기반의 초실감형 차세대 거리뷰 서비스와 XR 기반 도시 체험 및 관광 콘텐츠 제공 - 미래 산업: Physical AI개발을 위한 SimReady에셋과 생성형AI기반 시나리오 검증플랫폼제공 - 도시계획/안전: XR기기를 활용한 다자간 원격협업 심의와 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재난확산 예측서비스 제공 • 데이터 구성: - 기존 3D 메시(Mesh), BIM 데이터 등은 OpenUSD로 통합 관리하고, 주요 전략 지역은 NeRF/3DGS 모델을 신규 구축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채택 - 기존 LiDAR, DEM, 정밀도로지도 등도 OpenUSD 포맷으로 변환·통합하며, 시뮬레이션용 가상 에셋은 생성형 AI로 자동 생성 • 정책/제도: - '인천광역시 3D 공간정보 표준 운영 규정'을 제정 - 모든 공공 3D 데이터 성과물을 OpenUSD 포맷으로 제출 의무화 및 데이터 전 생애주기 관리 - '디지털 트윈 데이터 활용촉진 조례' 제정으로 데이터 개방 및 민관협력(PPP) 모델의 법적근거 마련					
기대효과	• 미래 신산업 핵심 인프라 확보: 단순 3D지도 구축을 넘어, Physical AI와 공간컴퓨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AI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 • 미래 신산업 핵심 인프라 확보: 단순 3D지도 구축을 넘어, Physical AI와 공간컴퓨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AI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 • 국가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 트윈 국토'와 'AI 주권'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에 인천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사례 창출 및 국가전체의 디지털경쟁력 강화에 기여					
성과지표	• 데이터 생태계 기반 마련: OpenUSD 데이터 변환 및 통합률 • 초실감 모델 구축: 주요 거점 NeRF/3DGS 모델 구축 면적 • 미래 산업 지원: 플랫폼활용 Physical AI 시뮬레이션 시간, 플랫폼기반 신규서비스/콘텐츠개발 수 • 시민 만족도 향상: 차세대 거리뷰 서비스 시민 만족도					

과제명	1-1-2 지하 공간 통합지도 모델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일정	2027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20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시민안전본부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계획과, 정보화담당관 등	
추진배경	• 청라, 송도 등 신구도심에서 지반침하 및 지하공간 침수 사고가 반복되어 시민 불안감 가중 • 현재 정부 주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상·하수도 등 15~16종의 시설물 정보 위주로 구성 • 지반침하의 핵심 원인인 지하수위 변동, 연약지반 정보 등 안전 데이터가 누락되어 사고 예측 및 예방에 근본적 한계 존재 • AI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살아있는 지하공간 디지털 트윈'으로의 고도화 시급					
추진목표	• 기존 시설물 정보 위주의 평면적 지도를 넘어, 지상-지하 데이터가 융합된 입체적 '지하공간 디지털 트윈'을 구축 이를 통해 AI 기반 재난 예측, 복합재난 통합 시뮬레이션, 시민 체감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함					
주요 추진내용	• 서비스 목록: - 재난/안전: 'AI 기반 지반침하 위험 예측 경보', '지상-지하 연계 침수 확산 시뮬레이션', '지하 매설물 사고 대응 지원' 등 예측 및 선제 대응 서비스 제공 - 시민/행정: 'AR 기반 지하 시설물 원격 유지보수'를 통해 업무 정확성과 안전성 제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안전 서비스'로 재난 시 최적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제공 • 데이터 구성: - 지하시설물: 기존 15종 시설물 데이터에 노후도, 재질 등 속성 정보를 추가하여 고도화 - 지반/지하수: 3D 지질 정보와 실시간 지하수위 변동 데이터를 통합 위험 지역에는 IoT 센서 설치 - 지하 개발/공사: 공공 및 민간의 모든 지하 관련 공사 정보를 실시간 연계 조례 개정으로 민간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 지하구조물/실내: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BIM 데이터와 3D 실내지도 구축·통합					
기대효과	•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 행정 실현: 경험과 직관이 아닌,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하 안전 정책 수립 •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시 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지하 공간 정보 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 AR 유지보수, 실내 내비게이션, 물류 로봇 등 지하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성과지표	• 데이터: 재난 예측 핵심 데이터(지하수/지반) 통합률, 다중이용 지하 시설 3D 실내지도 구축률 • 플랫폼: 지반침하 위험 예측 정확도, 플랫폼 활용률 (월간 활성 사용자) • 서비스: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율, 시민 서비스 만족도, 유지보수 작업 시간 단축률					

과제명	1-1-3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핵심 API 개발(선도과제)					
추진일정	2026년 ~ 2028년			소요예산	4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40	5	20	15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시민안전, 도시계획, 환경, 교통 부서	
추진배경	- 분산된 시스템 운영: 부서별 개별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 확보에 한계 -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자: 사용자 관리, 지도 표출 등 기본 기능을 부서별로 중복 개발 지적도 등 핵심 데이터의 중복 구축으로 일관성·효율성 저하 - 외산 소프트웨어 종속: ArcGIS 등 외산 솔루션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매년 막대한 비용 발생 특정 업체 종속으로 인해 신기술 도입의 유연성이 저하 - 데이터 공유 부족: 데이터가 부서별로 고립되어 부서 간 공유와 융합이 원활하지 않음 재난 대응, 기후변화 관리 등 부서 협력이 필수적인 복합 문제 대응에 한계					
추진목표	- 인천시 공간정보 기반 혁신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 개별 시스템 개선을 넘어, “통합된 공간 지능으로 시민 중심의 글로벌 연결 미래도시, 인천 실현”을 구현하는 기술적 기반 마련 시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 통합 재난 예측·대응, 인천형 탄소지도 등 4대 선도사업과 50개 개선과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술 백본 역할 수행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데이터 API: 부동산, 환경·기후,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급하여 모든 서비스의 기반을 형성 - 공간 분석 API: 입지·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 도시계획·교통 분야 활용 - 시뮬레이션 API: 재난 확산, 도시 경관·일조권 변화 등 미래 예측을 지원 - 서비스 연계 API: 드론 원격제어, AI 가치 추정, 통합 인증 등을 통해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며 생태계 확장 데이터 구성 - 공간 데이터: 디지털 트윈의 뼈대 역할, 3D 모델·지하시설물·정사영상·연속지적도 등을 포함 - 행정 데이터: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공시지가·인구·복지시설·도시계획 정보 등을 Geocoding을 통해 공간과 결합해 통합 분석이 가능한 자산으로 변환 - 실시간 IoT 데이터: CCTV 영상, 환경 센서, 교통량, 하천 수위 등 도시 곳곳에서 수집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제공해 디지털 트윈에 생명력을 불어 넣음 정책 및 제도 - 법적 기반: 「인천시 데이터 개방 및 API 활용 조례(가칭)」 제정하여 데이터 개방·활용 법적 근거 - 민관 협력: 오픈데이터 해커톤, 리빙랩 운영으로 시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구조 도입 - 국가 연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과 정합성을 확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강화					
기대효과	신규 공간정보 사업 예산 30% 이상 절감: 공통 모듈(지도, 인증 등)과 인프라 중복 개발 제거로 비용 절감 서비스 개발 및 배포 기간 50% 이상 단축: 표준 API 재사용, CI/CD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통한 신속한 배포 실현 데이터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 확립: 통합데이터와 시뮬레이션API 활용으로 정책 효과 검증 가능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개방형 API 제공으로 민간 기업·개발자가 시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데이터 표준 준수율 - 플랫폼 활용도: 월간 API 호출 건수 - 개발 민첩성: 주간 평균 배포 횟수 - 운영 효율성: 오픈소스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액					

[2] 데이터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과제명	1-2-1 모든 행정 데이터의 공간정보화 (Geocoding) 강화					
추진일정	2027년 ~ 2028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10	1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시민안전본부, 미래산업국, 여성가족국, 도시계획국 등	
추진배경	- 인천시는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생산하나,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부서별 시스템에 고립되어 있음 - 이러한 '데이터는 풍부하나 통찰은 부족한(Data-Rich, Insight-Poor)' 현실은 데이터 간 연계 분석을 통한 복합적 도시 현상 파악에 명확한 한계 - 공간정보 관련 요구는 부서별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외부 용역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답습 - 안전,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의 46개 핵심 데이터에 대한 공간정보화 및 시각화 수요 확인					
추진목표	시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경험과 직관'에서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전환 과학적 예측과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공간 인지형 지능 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기반 서비스: 주소 등 텍스트를 좌표로 변환하는 '전사적 지오크딩 서비스(API)'와, 변환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관리·공급하는 '중앙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 응용 서비스: 경기도 규제지도를 벤치마킹한 '인천시 규제지도 서비스', 부산시 도시침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통합 재난관리 대시보드', '인천시 예산지도 서비스', '도시 환경 분석 서비스' 등 고가치 서비스 우선 개발 데이터 구성: - 부서별 면담을 통해 도출된 총 46개 핵심 행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오크딩 추진 -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 관리 책임, 품질 이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한 종합 실행 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CCTV, 중대시민재해 점검결과, IoT 센서, 규제정보, 공유재산, 공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우선순위 '상' 정책/제도: - 부서 간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조례' 개정 - 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폐기 전 과정에 대한 표준절차와 R&R을 규정한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규정' 마련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 정착: 담당자의 경험이나 정성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문화 확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행정 강화: 모든 부서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함으로써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시민 신뢰도 제고: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 획기적 향상					
성과지표	-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핵심 행정 데이터 공간정보화 완료율, 지오크딩 평균 성공률 - 플랫폼 활용도 증진: 중앙 데이터 웨어하우스 활용 부서 수 - 행정 효율성 증대: 데이터 관련 업무 처리 시간 단축률					

과제명	1-2-2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 및 통합 데이터 구축, 연계					
추진일정	2027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20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디지털산업과 또는 신설 CDO 조직		협업부서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등	
추진배경	-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공간정보 플랫폼 등 선도적 데이터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등급을 획득 - 그러나 스마트시티의 동적 데이터, 공간정보 플랫폼의 정적 3D 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의 행정 데이터 등이 플랫폼별·부서별로 분산된 '데이터 사일로(Data Silo)' 현상이 존재 - 이는 도시 전체 데이터 자산의 통합 활용과 시너지 창출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					
추진목표	개별 부서의 '산발적 우수성'을 시 전체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탁월함'으로 전환 데이터를 시정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넘어,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 시대로의 도약을 목표함					
주요 추진내용	거버넌스 조직 설계: -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시장 직속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리더로 임명하여 전사적 데이터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DGC): CDO를 의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 국장급 책임자로 구성 데이터 관련 규정 심의·의결 및 부서 간 갈등 조정 역할 수행 - 데이터 소유자 및 스튜어드: 데이터 관리 책임을 현업 부서에 부여하는 분산 모델 플랫폼 아키텍처: -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의 유연성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관리·분석 성능을 결합한 통합 아키텍처로,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단 플랫폼에서 관리하여 시스템 복잡성과 비용 최소화 - 데이터 카탈로그: 시 전역 데이터 자산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의 도서관 목록'으로, 중복 개발 방지 - 마스터 데이터 관리(MDM): 행정동 코드, 도로명 주소 등 핵심 기준 데이터에 대한 '단일 진실 공급원'을 구축하여 데이터 불일치 원천 방지 - API 게이트웨이: 모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단일 진입점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적 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동력 확보 핵심 데이터 정책 및 표준: - 데이터 표준화: 정부지침을 기반으로 인천시 자체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의무 적용 - 데이터 품질 관리: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데이터 입력 단계부터 유효성 검증 규칙 적용 및 오류 신속 개선 프로세스 정립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에 입각, 민감도에 따른 데이터 등급 분류 및 '역할 기반 접근 통제(RBAC)' 엄격 준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철저 준수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실현: 담당자의 경험이나 정성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모든 정책 과정과 근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조성: 관련 부서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함으로써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시민 공감대 기반의 도시 비전 실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도시 발전 견인					
성과지표	- 데이터 품질 지수,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률, 데이터 검색 및 확보 시간 - 부서 간 데이터 공동 활용 과제 수, 데이터 표준 준수율, 오픈 API 호출 수					

[3] 입체적 도시정보 수집, 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과제명	1-3-1 다목적 드론 영상 수집 및 3D 데이터 구축, 갱신					
추진일정	2026년 ~ 2028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5	3	2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경찰청, 총무과 등 10개 이상 주요 부서	
추진배경	- 도시의 물리적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는 정책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 - 과거 항공측량 방식은 높은 비용, 긴 제작 주기, 낮은 해상도의 한계 존재 - 드론은 경제성, 신속성, 초고해상도 데이터 취득 능력을 바탕으로 공공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할 획기적인 대안으로 부상					
추진목표	단순 지도 제작을 넘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보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핵심 데이터 인프라 구축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 지원'으로 3D 지도 기반 통합 상황 인식 지원 '고품질 3D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지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등 과학적 행정 실현 '특수환경(접경지역) 공간정보 DB 구축'으로 정보 공백 해소 - 대민/협업 서비스: "하늘에서 본 인천" 대시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인터랙티브 3D 체험 제공 '부서 간 데이터 공동활용 포털' 구축으로 협업 효율 극대화 데이터 구성: - 기본 공간정보: 국산 S/W를 통해 정사영상, 3D 텍스처 메시(Mesh), 포인트 클라우드 등 가공 성과물 생산 - 원시 데이터: 드론이 직접 수집한 고중첩 항공 이미지, 비행 로그,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등 - 품질 관리 데이터: RTK-GNSS 장비로 측량한 지상기준점(GCP) 및 검사점(CP) 성과 - 메타데이터: 촬영일시, 해상도, 정확도, 데이터 버전 등 데이터 상세 정보를 DB로 체계적 관리 정책/제도: - OGC 국제 표준 도입을 의무화하여 상호운용성 확보 - 단순 조종사를 넘어 데이터 처리·분석 등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 및 경력 개발 경로 마련 - 데이터의 전 주기에 걸친 표준 절차와 R&R을 명시한 '드론 데이터 공동활용 규정' 제정 - 실시간 영상 중계 시스템 암호화 및 접경지역 촬영 데이터 보안성 검토 절차 공식화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실현: 과거의 오래된 2D 도면 대신, 최신의 고해상도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재난 위험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밀 분석 및 시뮬레이션 수행 가능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기술 내재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 종속성에서 탈피 드론 운영 및 데이터 처리 노하우를 기관 내부에 자산으로 축적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및 협업체계 강화: 실시간 영상 중계 시스템을 통해 재난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통합 재난 대응 협업 체계 기반 마련 대시민 소통 강화 및 행정 투명성 제고: 시민들이 시의 주요 사업과 변화상을 인터랙티브 3D 콘텐츠로 생생하게 체감하게 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					
성과지표	- 데이터 기반 마련: 고위험/고변화 지역 데이터 갱신 주기 단축률 - 행정 효율성 증대: 연간 예산 절감액 - 시스템 활용도 제고: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활용 건수 (재난/훈련) - 기술 내재화: 국산 S/W 기반 데이터 처리율 - 대시민 서비스 강화: "하늘에서 본 인천" 3D 콘텐츠 방문자 수					

과제명	1-3-2 드론 기반의 지능형 도시관리 서비스 확대(선도과제)					
추진일정	2026년 ~ 2028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3	14	3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시민안전본부, 도시계획과, 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 도시 규모 확대와 기능 복잡성 심화로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노후 시설 안전 문제 등 전통적 도시 관리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 - 현재의 인력 중심, 민원 발생 후 대응 방식의 관리 체계는 선제적 대응에 명백한 한계 존재 - 드론은 AI,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결합하여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반응적 문제 해결'에서 '예측적·예방적 도시 거버넌스'로 전환할 혁신적 대안					
추진목표	- 분산된 드론 자원과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및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드론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 민원 발생 후 대응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와 AI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능동적 관리 모델로 전환 - 공공 안전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는 시정 비전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디지털 트윈 기반 SOC 예방정비'로 시설물 안전 정밀 진단 및 결함 예측 '스마트 그린 환경 감시 및 추적'으로 오염원 실시간 감시 및 역추적 '지능형 교통 흐름 분석 및 관리'로 상습 정체 구간 분석 및 돌발상황 감지 - 대민 서비스: '시민안심 드론 순찰·감시' 서비스로 공원, 우범지역 등 취약 지역을 24시간 자동 순찰하며 AI가 위험 상황(폭력, 쓰러짐, 화재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112/119에 자동 신고 및 영상 제공 데이터 구성: - 드론 취득 데이터: 실시간 영상(4K/8K, 열화상), 3D 점군 데이터(LiDAR), 센서 데이터 등 - 기반 공간정보: 3D 건축물 모델, 3D 지형 데이터, 연속지적도, 도로망 등 - 연계 행정/외부 데이터: 112/119 신고 데이터, 실시간 교통량, 환경측정망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등 - 분석/가공 데이터: AI 분석 결과물(객체 탐지, 군열 분석 등), 시뮬레이션 결과(오염 확산 등) 정책/제도: - 도심 내 드론 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드론 촬영 영상정보 처리 및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플랫폼 및 데이터 전송구간 암호화 등 강력한 보안체계 구축 - 드론 데이터 소유권, 접근 권한 등을 명시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 마련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TF 상설화) 및 전문 인력 확보					
기대효과	선제적 예방 중심의 도시안전망 구축: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벗어나, AI 기반 위험 예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 패러다임 전환 시민 안전 체감도 및 행정 신뢰도 제고: 24시간 감시 체계 및 투명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향상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 도시 이미지 구축 및 드론 데이터 활용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견인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행정 강화: 단일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 및 공동 대응으로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 역량 강화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구축: 드론 운영 자동화율 - 과학적 분석 체계 도입: AI 기반 위험상황 자동 탐지율 - 행정 효율성 증대: 시설물 점검 소요 기간 단축률 - 시민 만족도 향상: 5대 강력범죄 발생률 감소 (시범지역), 시민 안전 체감도					

과제명	1-3-3 도시 변화 탐지 및 수시갱신 체계 강화					
추진일정	2026년 ~ 2030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3	5	4	4	4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재난안전본부, 교통국 등	
추진배경	• '제물포 르네상스'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천의 도시 경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기본도는 연 1회 주기의 갱신 체계에 의존하여 도시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최신성이 결여된 공간정보는 행정 비효율, 재난 대응 지연, 시설물 관리 오류 등을 초래하며,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트윈 구축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위성, 드론, MMS, 웹크롤링 등 다중 소스 데이터를 융합하여 도시 변화를 상시 탐지하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지능형 수시갱신 체계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기존의 정주기적, 후행적 갱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형 상시 국토 모니터링 및 동적 갱신 체계를 구축하여 '살아있는 지도'를 구현 •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시 거버넌스를 실현함을 목표로 함					
주요 추진내용	•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AI 기반 광역 변화 모니터링 서비스'로 국토위성 영상을 분석하여 광역 변화 자동 스크리닝 '드론·MMS 기반 신속·정밀 갱신 서비스'로 변화 의심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초고정밀 3D 데이터 신속 취득 및 자동 갱신 '웹크롤링 기반 예측적 변화 탐지 서비스'로 인허가 정보나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변화 징후 선제적 포착 - 대민/협업 서비스: '통합 작업관리(Job Management) 시스템'으로 모든 변화 정보를 단일 플랫폼에서 접속하고, 중요도에 따라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복 작업을 원천 차단하는 중앙 관제탑 역할 수행 • 데이터 구성: - 기본 공간정보: 국가기본도, 3D 지형, 항공사진 등 플랫폼의 뼈대가 되는 정보 - 원격탐사 데이터: 국토위성 영상, 드론/MMS 취득 데이터(점군, 3D 메시(Mesh) 등) 등 변화탐지의 핵심 소스 - 비정형/행정 데이터: 웹크롤링으로 수집된 개발계획, 인허가 정보 및 행정 시스템 API 연계 데이터 - 관리 데이터: 통합 작업관리 시스템의 작업 현황, 데이터 품질 검사 결과, 메타데이터 등 • 정책/제도: - 인천시가 데이터 품질과 작업 방식을 주도하는 '현명한 고객(Intelligent Client)' 모델 도입 - 최소 3~5년 단위의 '다년 계약' 도입 추진 - 데이터 수집·가공·납품 전 과정에 걸친 표준 품질관리(QC) 절차 수립 및 고유 식별자(ID) 관리 체계 정립					
기대효과	• 선제적 도시관리 체계 구축: 변화를 사후에 따라가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계획 단계부터 변화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도시 관리 실현 • 디지털 트윈 데이터 기반 강화: 최신성이 상시 확보된 고품질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인천시 디지털 트윈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극대화 •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드론, AI,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의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성과지표	• 데이터 최신성 확보: 평균 데이터 갱신 리드타임 • 프로세스 효율성 증대: 자동 변화탐지 비율 • 탐지 범위 및 정확도 향상: 변화탐지 누락률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수시갱신 데이터 활용 건수					

[4] 지능형 도시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명	1-4-1 관내 도시개발 사업현황 열람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2027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10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업부서	제물포르네상스기획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등	
추진배경	- 과거부터 지적된 민간 사이트의 부정확한 개발 정보 및 사용자 편의성이 낮은 공공 시스템 문제 해결 필요 - 현재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대규모 도시변화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 - 이러한 복합성은 기존 2D 도면 기반 검토 방식으로는 계획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 존재					
추진목표	- 분산된 2D/3D 공간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 「3D 기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 이를 통해 ①과학적 분석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②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③시민 소통 및 정책 신뢰도 강화라는 핵심 가치 제공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3D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서비스', '원클릭 규제완화 시뮬레이션', '과학적 영향 분석 서비스'(일조권, 교통 등), '디지털 위원회 심의 지원' 기능 제공 - 대민/협업 서비스: '시민 소통을 위한 3D 시각화 포털'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의 미래 모습 체험 및 의견 제시 '부서 간 협업 및 데이터 공유' 기능으로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데이터 구성: - 기본 공간정보: 항공 LiDAR 측량을 통한 3D 지형 데이터 신규 구축,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 - 건축물/시설물: LOD 2~3 수준의 3D 건축물 모델 구축 및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데이터 실시간 연계 - 도시계획/토지: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토지이용 데이터 연계 - 분석/시뮬레이션: 교통량, 유동인구, 기상, 민원 등 비정형 데이터 포함 정책/제도: '디지털 심의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규정' 제정 - 플랫폼 운영을 위한 '디지털도시플랫폼팀(가칭)' 신설 또는 기능 강화 -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등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시계획 실현: 담당자의 경험이나 정성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문화 정착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모든 계획 과정과 근거를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행정 강화: 관련 부서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함으로써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시민 공감대 기반의 도시 비전 실현: 제물포 르네상스 등 인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속의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도시 발전 견인					
성과지표	-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도시계획 데이터 통합률 - 과학적 분석 체계 도입: 주요 개발사업 시뮬레이션 적용률 - 행정 효율성 증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률 - 시민 소통 및 만족도 향상: 플랫폼 활용 시민 만족도, 플랫폼 일 평균 방문자 수					

과제명	1-4-2 민원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문제 해결 관리체계 구축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1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디지털산업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추진배경	-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반복되는 민원은 단순 개별 현상이 아닌, 주차 공간 부족 등 근본적인 도시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증상'으로 인식 - 현재 민원은 개별적·사후적으로 처리되어 운영 부담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민원 데이터를 시의 통합 공간정보 플랫폼 '인천-트윈'과 연계하고 AI 기술로 패턴을 분석 및 예측하는 것이 시급					
추진목표	- 분산된 민원 데이터를 공간정보와 통합하고 AI 기반 지능형 분석 기술을 적용, 「AI 기반 민원 예측 및 선제대응 플랫폼」 구축 - 민원 데이터를 도시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활용, 행정 패러다임을 '반응적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 - 정책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시민의 실제 불편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비전 달성에 기여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AI 기반 민원 자동분류 및 지능형 배정', '실시간 민원 핫스팟 대시보드', '민원 예측 및 조기경보 서비스', '현장 업무 지원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대민/협업 서비스: '투명한 민원처리 공개 포털'을 통해 시민이 처리 과정을 지도 기반으로 조회 복합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통합 문제 해결' 워크스페이스 제공 데이터 구성: - 핵심 민원 데이터: 모든 채널의 민원 내용, 사진, 위치, 시간 등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오코딩(Geocoding)하여 정제 - 내부 행정 데이터: '인천-트윈' 플랫폼의 공간정보(도로, 건축물 등)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CCTV, IoT 센서) 실시간 연계 - 외부 융합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의 기상 데이터,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을 융합하여 예측 정확도 제고 정책/제도: - 반복 민원에 대한 데이터 기반 원인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을 포함한 데이터 공동활용 규정 마련 민원 데이터 분석 전담 인력 확보 및 전 공무원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실시					
기대효과	선제적·예방적 과학 행정 실현: 과거 경험과 직관이 아닌, 데이터와 AI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문화 정착 시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 확보 부서 간 협업 문화 증진: 단일 플랫폼 기반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성과지표	- 행정 효율성 증대: 반복 민원 감소율, 민원 처리 시간 단축률 - 지능형 기술 도입: AI 민원 자동분류 정확도 - 시민 만족도 향상: 플랫폼 활용 시민 만족도					

과제명	1-4-3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시정' 대시보드 고도화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10	-
추진체계	주관부서	정보화담당관 (혹은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스마트 서비스 소관 부서 등	
추진배경	- 인천시는 스마트 횡단보도,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 중이나, 서비스 공급이 군·구별 특성이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 지역 간 불균형 초래 위험 존재 -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시정 대시보드 '인천e한눈에'는 시정지표 중심 정보 제공으로, 도시 전반의 스마트 서비스 분포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기능은 부재 - 정책 결정자가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한눈에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					
추진목표	- 기존 '디지털 시정' 대시보드에 분산된 스마트 도시 서비스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간정보 기반으로 시각화·분석하는 「스마트 시티 위상분석 서비스」를 추가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모든 시민이 스마트 도시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핵심 기반 마련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스마트 시티 서비스 통합 모니터링'으로 26종 서비스 현황을 GIS 맵과 대시보드로 통합 조회 '권역별 서비스 불균형 분석'으로 군·구별 면적 및 인구 대비 서비스 밀도를 자동 계산하여 과소 또는 과밀 지역 식별 '신규 사업 입지선정 지원' 기능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 - 대민/협업 서비스: '우리 동네 스마트 현황 조회 포털'을 통해 시민이 거주 지역의 서비스 현황을 지도와 그래프로 쉽게 확인하고 비교 '부서 간 협업 및 데이터 공유' 기능으로 관련 부서가 동일한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여 통합적 정책 추진 지원 데이터 구성: - 기본 공간정보: 행정경계(군·구), 도시지역 면적 등 기존 스마트GIS플랫폼 데이터 연계 및 최신화 - 스마트 시설물 정보: 교통(4종), 재난안전(13종), 복지(9종) 등 총 26종의 스마트 서비스 시설물 위치(좌표) 및 현황 정보 통합 - 행정/통계 정보: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군·구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연계 - 분석/시각화 데이터: 기본 공간정보, 시설물 정보, 통계 정보를 융합하여 군·구별 면적당/인구당 시설물 수와 같은 분석용 데이터 생성 정책/제도: - 신규 스마트 도시 사업 심의 시 본 위상분석 서비스의 검토 결과 제출을 관련 지침에 반영 추진 26종 스마트 서비스 데이터의 생성-관리-공유-폐기 전 과정에 대한 표준절차와 R&R을 명확히 하는 공동활용 규정 마련 - 디지털산업과 내 플랫폼 전담 인력의 역할 강화 및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교육 계획 수립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스마트도시 정책 실현: 담당자의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 문화 정착 스마트도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모든 스마트 서비스의 공급 현황과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정책 수용성 향상 시민 체감도 높은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하여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스마트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성과지표	- 데이터 기반 마련: 스마트 서비스 데이터 통합률 - 과학적 분석 체계 도입: 정책결정 시 분석 결과 활용률 -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별 서비스 격차 지수 감소율 - 시민 소통 및 만족도 향상: 플랫폼 일 평균 방문자 수, 플랫폼 활용 시민 만족도					

2. 경제 혁신 촉진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1) 지능형 도시계획 및 원도심 재생 지원

과제명	2-1-1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추진일정	2027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20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업부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등	
추진배경	• '제물포 르네상스', '원도심 균형발전'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 및 각종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복합적인 도시 변화 발생 • 현재 도시계획 업무는 데이터 분산, 2D 도면 중심 검토, 과학적 분석 도구 부재라는 한계에 직면 • 2D도면은 높이 규제 완화에 따른 스카이라인 변화나 일조권 침해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난개발 우려와 반복적 민원의 원인					
추진목표	• 분산된 2D/3D 공간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 「3D 기반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 도시의 물리적, 공간적 변화를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핵심 기반 구축					
주요 추진내용	•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3D 도시계획(안) 검토 서비스'로 계획안의 3D 시각화 및 법규 검토 '원클릭 규제완화 시뮬레이션'으로 규제 변경 시 개발 규모와 경관 변화 즉시 분석 '과학적 영향 분석 서비스'로 일조권, 교통량 변화 등을 정량 분석 '디지털 위원회 심의 지원'으로 3D 기반 심의 환경 제공 - 대민/협업 서비스: '시민 소통을 위한 3D 시각화 포털'로 주요 프로젝트의 미래 모습 3D 체험 및 의견 등록 '부서 간 협업 및 데이터 공유' 기능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부서 간 칸막이 해소 • 데이터 구성: - 기본 공간정보: 항공 LiDAR 측량을 통한 3D 지형 데이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도로망 등 - 건축물/시설물: LOD2수준 이상의 3D건축물모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데이터 실시간 연계 - 도시계획/토지: KLIP, 토지이음의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및 토지정보 연계 - 분석/시뮬레이션: 교통량, 인구/유동인구, 기상, 민원 데이터 등 • 정책/제도: - '디지털 심의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폐기 전 과정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규정' 마련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보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시계획 실현: 담당자의 경험이나 정성적 판단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문화 정착 •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모든 계획 과정과 근거를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 •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행정 강화: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서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 협업함으로써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성과지표	•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도시계획 데이터 통합률 • 과학적 분석 체계 도입: 주요 개발사업 시뮬레이션 적용률 • 행정 효율성 증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률 • 시민 소통 및 만족도 향상: 플랫폼 활용 시민 만족도, 플랫폼 일 평균 방문자 수					

과제명	2-1-2 도시·건축 통합 심의 고도화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1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업부서	건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정보화담당관 등	
추진배경	'제물포 르네상스' 등 복합적 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심의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임 현재 심의 방식은 2D 도면과 서류에 의존하여 3차원 공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위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주관성), 비표준화된 자료로 인한 행정력 소모(비효율성), 복잡한 과정으로 인한 소통 부족 등의 한계에 직면 -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은 안전 관리 기능에 중점을 두어, 심의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3D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합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기존 '통합관리시스템' 위에 BIM 데이터 기반의 3D 시뮬레이션과 분석 기능을 통합, 「데이터 기반의 신속·투명·과학적 통합 심의 지원체계」 구축 - 심의-허가-이행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현하여 도시계획 행정의 품격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3D 기반 계획(안) 분석 서비스'로 스카이라인, 조망권 등 입체적 분석 'AI 법규 자동검토 서비스'로 용적률, 건폐율 등 1차 자동 검토 '디지털 위원회 심의 지원'으로 3D 기반 온라인 심의 환경 제공 '조건부 의결 이행관리' 기능으로 심의 결과의 실효성 확보 - 대민/협업 서비스: '민간 사업자 지원 포털'을 통해 BIM 데이터 온라인 제출, 심의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사전검토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시민 소통 포털'로 주요 개발사업 계획안을 3D로 공개하고 시민 의견 수렴 데이터 구성: - 민간 제출 데이터: 건축 및 개발 계획안(보고서, 도면), IFC 형식의 BIM 모델 데이터 3D 공간정보: 3D 지형 모델(DEM), 3D 건물 모델(LOD 1~2 수준) - 도시계획 규제정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KLIP DB 실시간 연계 -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연계 - 심의 과정 및 결과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직접 생성 및 관리 정책/제도: - 공공사업부터 BIM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BIM 데이터 제출 가이드라인' 제정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상임기획단 내 전문 인력 총원) 확보 - 비공개 심의정보 보호를 위한 다층적 보안 체계 수립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심의 문화 정착: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3D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모든 심의 과정과 근거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관리하고, 시각화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도시 품격 향상 및 계획의 완성도 제고: 개별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경관의 품격 향상 민간 투자 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심의 서비스제공으로 리스크 감소					
성과지표	- 행정 효율성: 평균 심의 준비 기간 단축률 - 심의 품질: 3D 시뮬레이션 활용률, 재심의 비율 감소율 - 플랫폼 활용도: BIM 데이터 제출 비율,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공무원/위원) - 사회·경제적 가치: 위원회 심의 만족도 점수					

과제명	2-1-3 원도심-신도심 연계 발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2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협업부서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도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현재 정비사업이나 기반시설 투자 등 도시정책은 개별 지역 단위로 수립되어, 정책 추진 시 인접 지역에 미치는 상호 연계 효과(풍선효과 등)를 종합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특정 지역 개발이 도시 전체의 인구, 주택, 상권 등에 미치는 복합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모델 도입이 시급					
추진목표	- 분산된 도시 데이터를 융합하고 복합 모델링 기술을 활용, 「원도심-신도심 연계 발전 시뮬레이션 모델 및 플랫폼」 구축 - 도시정책의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선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도시 균형발전 지표 모니터링'으로 원·신도심 간 격차 지표를 시각화하여 진단 '정책 파급효과 시뮬레이션'으로 재개발, 기반시설 건설 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최적 정책 대안 탐색' 서비스로 다양한 정책 조합의 비용 대비 편익,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비교 분석 - 대민/협업 서비스: '개발정보 시각화 포털'을 통해 주요 개발 계획의 미래 모습과 생활 환경 변화를 3D 지도와 그래프로 시민에게 제공 '부서 간 정책 시나리오 공유' 기능으로 여러 부서가 동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하여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지원 데이터 구성: - 기본 공간정보: 3D 지형/건물, 연속지적도, 도로망 등 - 인구/가구 데이터: 주민등록인구, 세대/가구 통계, 인구이동 데이터 및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 주택/부동산 데이터: 건축물대장, 주택 노후도,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 - 산업/경제 데이터: 사업체 현황,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수 등 - 교통/환경 데이터: 대중교통 노선, 교통량, 공원/녹지 현황 등 정책/제도: -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간정보 데이터 공동활용 규정' 제정 또는 개정 추진 -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표준 절차와 R&R을 규정하고 '도시균형발전 데이터 협의체' 구성 - 시뮬레이션 모델 운영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박사급 연구원 등) 확보 -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암호화 등 보안 체계 구축					
기대효과	'선계획-후개발' 체계 정착: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 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 도시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정권이나 담당자 변경에 관계없이 일관된 데이터와 모델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 향상 원도심-신도심 간 격차 완화 및 상생발전 견인: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심 성장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최적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발굴하여, 도시 전체의 포용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성과지표	-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도시 균형발전 데이터 통합률 - 과학적 분석 체계 도입: 주요 정책사업 시뮬레이션 적용률, 시뮬레이션 모델 예측 정확도 - 정책 효율성 증대: 정책 수립 평균 소요 기간 단축률 - 도시 균형발전 기여: 원도심-신도심 핵심 지표 격차 감소율					

과제명	2-1-4 생활권 단위 균형발전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10	-
추진체계	주관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교통정책과, 정보화담당관, 군·구	
추진배경	- 인천시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원의 정확한 투입이 필요함 - 현재 도시 진단 단위는 주로 '군·구' 또는 '행정동'으로, 범위가 너무 넓어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작은 권역의 세밀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이러한 분석 단위의 한계는 실제 쇠퇴 지역이 평균에 가려져 지원에서 소외되는 '정책 사각지대'를 발생시킴					
추진목표	- 분산된 도시 데이터를 시민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통합·가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모니터링하는 「생활권 단위 균형발전 지표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 시민의 삶을 담은 '생활권' 중심의 데이터 기반 진단을 통해 도시의 숨은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포용적 균형발전 실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생활권 단위 쇠퇴도 진단'으로 생활권별 쇠퇴 등급 산출 및 시각화 '균형발전 취약지역 스크리닝'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자동 탐색 '정책효과 시계열 분석'으로 도시재생 등 사업 시행 지역의 지표 변화를 추적·분석 - 대민/협업 서비스: '우리동네 생활지표 포털'을 통해 시민이 거주 생활권의 주요 지표를 직접 조회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대시보드'로 관련 부서가 생활권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안 공유 및 협업 지원 데이터 구성: - 인구/사회 데이터: 고령화율, 1인 가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 - 주택/물리 데이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빈집 현황, 공원·녹지 접근성 등 - 산업/경제 데이터: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감률, 10년 이상 소상공인 밀도, 공시지가 변동률 등 - 생활/안전 데이터: 생활SOC 공급 현황,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CCTV 설치 현황 등 정책/제도: - 도시계획 조례 등에 '생활권'의 정의와 정책 수립 활용 근거 명시 추진 - 각 지표 데이터의 소관 부서, 갱신 주기, 품질 검증 절차를 포함하는 '균형발전 지표 데이터 관리 규정' 마련 - 시스템 활용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정기 교육 실시 - 개인 식별 정보 배제 및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등 보안 대책 수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시 진단 체계 확립: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합리적 행정 문화 정착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의 형평성 제고: 평균값에 가려진 소규모 낙후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정책 지원 실현 정책 신뢰도 및 주민 체감도 향상: 정책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성과지표	-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생활권 단위 지표 DB 구축률 - 과학적 분석 체계 도입: 균형발전 분석 보고서 정기 발간 - 행정 효율성 증대: 취약지역 발굴 소요 시간 단축률 - 정책 만족도 향상: 시스템 활용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					

[2]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혁신 지원

과제명	2-2-1 주요 산업단지 3D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통합 관리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	20	-
추진체계	주관부서	산업입지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소방본부, 환경국, 반도체바이오과 등	
추진배경	• 인천의 주요 산업단지는 조성 3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 안전, 환경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함 • 현재 관리는 부서별로 분절된 2D 도면 및 수기 대장 방식에 의존하여 종합적 현황 파악과 재난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움 •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을 '사전예측' 기반의 지능형 관리로 전환할 3D 디지털트윈 구축 시급					
추진목표	• 주요 산업단지의 지상·지하 시설물을 3차원으로 가상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 현실과 똑같이 작동하는 「3D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단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공간 창출					
주요 추진내용	• 서비스 목록: - 행정 서비스: '안전/재난 통합관제'로 IoT 센서 및 CCTV 연동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재난 확산 시뮬레이션 지원 '환경/에너지 관리'로 오염물질 배출원 추적 및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시설물 이력 및 유지보수 관리'로 모든 지상/지하 시설물의 이력 디지털 관리 및 노후도 예측 - 대민/협업 서비스: '입주기업 지원 포털'로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안전점검 결과 등 실시간 조회 및 행정업무 비대면 신청 '투자유치 가상 홍보관'으로 잠재 투자자를 위한 3D 기반 가상 투어 및 인프라 현황 정보 제공 • 데이터 구성: - 3D 공간정보: 고정밀 3D 지형, LOD 3~4 수준의 건물 모델, 지하 시설물 3D 모델 등 - 실시간 센서(IoT) 데이터: 화재·유해가스 감지기, CCTV, 미세먼지·수질 센서, 스마트미터기 등 - 시설물 정보: 시설물 대장, 설계 도면(CAD/BIM), 점검/보수 이력 등 - 입주기업 정보: 기업 일반 현황, 공장 배치도, 위험물 취급 정보 등 • 정책/제도: - 입주기업이 시설물, 위험물, 에너지 사용량 등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산업단지 관리 지침 또는 관련 조례에 협력 의무 조항 신설 검토 - 3D모델, IoT데이터 등 유형별 데이터 표준수립 외부 해킹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보안체계 구축 -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통합관제센터' 신설 또는 기능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보					
기대효과	• 산업단지 안전관리 수준의 획기적 향상: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근로자 및 기업의 안전 신뢰도 제고 • 미래 첨단기업 유치 활성화: 안전하고 스마트한 첨단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하여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 유치 촉진 •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후 산단을 친환경·고효율·첨단 산업공간으로 재창조					
성과지표	• 데이터 기반 마련: 주요 산업단지 3D 모델 구축률 • 통합관제 체계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연계율 • 안전/효율 증대: 재난 대응 골든타임 단축률,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 • 기업 만족도 향상: 입주기업 플랫폼 활용 만족도					

과제명	2-2-2 산단기업 지원 플랫폼 및 가상 테스트베드 제공					
추진일정	2030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	-	20
추진체계	주관부서	산업입지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정보화담당관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DX)은 기업 생존의 필수 과제임 그러나 인천 산업단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정보 부족,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전문인력 부재, 기술 검증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디지털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모든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 플랫폼'과, 신기술을 위험 부담 없이 실험해볼 수 있는 '가상 테스트베드' 구축이 절실함					
추진목표	- 분산된 기업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신기술을 위험 부담 없이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가상 실험공간을 제공하는 「산단기업 DX 역량강화 통합 지원 플랫폼 및 가상 테스트베드」 구축 - 디지털 전환의 높은 장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통합 지원 허브 및 가상환경 실험공간 제공을 통해 인천 산업단지 전반의 기술 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지원 서비스: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으로 기업 정보 기반 자동 필터링 및 추천 'DX컨설팅 및 전문가 매칭'으로 온라인 비대면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연계'로 기술 도입 필요 자금 원스톱 지원 - 기업/기술 서비스: '가상공장 시뮬레이션'으로 생산라인 변경, 설비 증설 등에 따른 생산성 변화 예측 '로봇/AI 솔루션 가상 검증'으로 DX 솔루션 도입 효과(사이클 타임, 불량률 등) 사전 검증 및 투자수익률(ROI) 분석 리포트 제공 'DX솔루션 마켓플레이스'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문의, 견적, 거래 지원 데이터 구성: - 지원정보 데이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모든 기업 지원사업 공고, 교육/세미나 정보 등 통합 DB 구축 - 기업 데이터: 입주기업 일반 현황 및 자가진단을 통해 파악된 DX 준비 수준, 기술 수요 정보 포함 - 기술/공급 데이터: 검증된 DX 솔루션(로봇, AI 등) 상세 정보 및 기술 분야별 전문가/컨설턴트 DB 구축 - 가상 테스트베드 데이터: 업종별 표준 공정 3D 모델, 주요 로봇 및 자동화 장비 디지털 모델 라이브러리 포함 정책/제도: - 가상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공정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이용 동의 절차 표준화 - 플랫폼 등록 정보의 품질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주체(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 정의 - 플랫폼 운영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예: 인천테크노파크 내 'DX 통합 지원센터') 지정 또는 신설 -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 구축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고, 기술을 검증하는 역량 내재화 지원 디지털 전환(DX) 도입 장벽 해소: 정보 부족, 비용, 리스크, 전문인력 부재 등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생태계 조성: 수요-공급-전문가-지원기관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구축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고도화: 기업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구축: 플랫폼 가입 기업 수, 통합 지원정보 DB 수 - DX 도입 촉진: 가상 테스트베드 이용률, 플랫폼 통한 DX 도입 성공률 - 기업 만족도: 플랫폼 활용 기업 만족도 -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내 전문가 매칭 건수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과제명	2-3-1 UAM 안전 운항을 위한 3차원 공역지도 및 관제 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4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40	-	-	4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항공과		협업부서	정보화담당관, 도시계획과, 소방본부,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UAM(도심항공교통)은 도시 교통난 해결의 핵심으로, 인천시는 'UAM 선도도시'를 목표로 상용화를 준비 중임 - 그러나 고층빌딩이 밀집한 도심 저고도 운항에는 기존 2D 항공관제 시스템으로는 안전 관리에 명백한 한계가 있어, 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 안전 인프라로서 정밀 3차원 공역지도와 디지털 관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추진목표	- UAM 안전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서, 정밀 3차원 공역지도와 지능형 교통관리 기술을 통합한 「UAM 3차원 공역지도 및 관제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트윈 기반의 3차원 공역 관리 및 지능형 관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선도도시 인천 구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행정/관제 서비스: '3차원 UAM 회랑(Corridor) 설계'로 장애물, 소음 등을 고려한 최적 경로 분석 '실시간 UAM 운항 모니터링 및 관제'로 모든 기체의 운항 상태를 3D 지도로 추적 '충돌/위험상황 자동 예측 및 경보'로 잠재적 위험을 시스템이 자동 예측하여 관제사와 조종사에게 경보 - 사업자/대민 서비스: 'UAM 운항 사업자 지원 포털'을 통해 비행계획 제출, 실시간 기상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지원 '실시간 UAM 운항정보 대국민 공개'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운항 중인 UAM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구성: 3D 공간/공역 정보: 고정밀 3D 지형/건물 모델, 타워크레인 등 고정/가변 장애물 DB,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제한구역 정보 포함 - 실시간 동적 정보: UAM 기체 운항정보(위치, 고도, 속도), 실시간 기상정보(풍향, 풍속), 드론 등 비행조적 비행체 탐지 정보 포함 - 운항/기체 정보: UAM 비행계획 및 기체 제원, 성능, 인증 정보 - 시뮬레이션 데이터: 악천후, 기체 이상 등 가상 시나리오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 정책/제도: - 도심 저고도 공역 관리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조례 제정 - UAM 운항 데이터의 수집, 공유, 활용에 관한 데이터 관리 규정 수립 'UAM 통합관제센터' 설립 및 UAM 교통관제사 양성 - 해킹, 재밍(전파 교란) 등으로부터 관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기대효과	UAM 운항의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 가상환경에서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실시간 위험관리를 통해 대시민 안전 신뢰 확보 UAM 상용화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운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UAM 관련 기업 투자 유치 글로벌 UAM 허브도시 위상 정립: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운항 모델을 세계 최초로 제시하며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성과지표	- 인프라 기반 마련: 주요 회랑 3차원 공역지도 구축률 - 관제 체계 도입: 실시간 UAM 기체 정보 수신 성공률 - 안전성 강화: 가상 충돌 예측 시뮬레이션 정확도 - 서비스 활성화: 시범운항 노선 관제 성공률					

과제명	2-3-2 자율주행 물류 통합을 위한 실내외 라스트마일 혁신체계 개발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	20	-
추진체계	주관부서	물류정책과		협업부서	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정보화담당관,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전자상거래 급증에도 불구하고, 최종 배송 단계인 '라스트마일'은 인력 부족, 고비용 등 비효율 심각 -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대안이지만, 현재 기술은 실외와 실내가 단절되어 완전 무인 배송 불가능 - 이에 실내외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통합 운행 기술 개발이 시급함					
추진목표	- 실외 도로와 실내 공간의 지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율주행 로봇의 이동 전 과정을 관제하는 「실내외 라스트마일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 실외 도로에서 건물 내부까지 끊김 없이(Seamless) 이어지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물류 산업을 선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관제/운영 서비스: '실내외 통합경로 생성'으로 끊김 없는 최적 경로 자동 생성 15'자율주행 로봇 통합관제'로 다수 로봇의 위치, 상태, 임무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배차 '돌발상황 원격 관제(Teleoperation)'로 로봇 주행 불능 상태 발생 시 원격 제어를 통해 문제 해결 - 물류/사용자 서비스: '실시간 배송 모니터링'으로 고객이 로봇 위치 및 도착 예정 시간 확인 '공동물류센터(MFC) 연동 주문 처리'로 주문 접수 시 가장 가까운 MFC에서 로봇 자동 출동 '스마트빌딩 연계'로 로봇이 건물 출입문,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호출하고 제어 데이터 구성: - 실내외 통합 정밀지도: 실외 HD맵(차선, 신호등 등)과 실내 3차원 지도(BIM 기반)를 좌표체계를 통일하여 통합 - 실시간 교통/환경 정보: C-IT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상황, 로봇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보행자 등 동적 장애물 정보 포함 - 로봇/배송 정보: 개별 로봇의 현재 위치, 배터리 등 상태 정보와 고객의 배송 주문 정보를 실시간 관리 - 빌딩 시스템 정보: 스마트빌딩의 출입통제 및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API 정보 포함 정책/제도: -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지위부여(중앙정부 협의)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 - 로봇이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및 개인 배송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데이터 관리 지침 수립 '라스트마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전문 원격 관제사 양성 로봇-플랫폼-빌딩 간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기대효과	시민 생활편의성 증대: 24/7비대면 배송서비스 제공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물류서비스 실현 미래 물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 로봇, 관제 플랫폼, 정밀지도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물류 분야의 선도적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성과지표	- 인프라 기반 마련: 실내외 통합 정밀지도 구축 면적 - 운영 체계 도입: 로봇 관제 플랫폼 동시 관제 가능 대수 - 효율/안전성 강화: 실내외 이동 전환 성공률, 원격관제 개입 후 문제 해결 성공률 - 서비스 활성화: 실증 서비스 지역 내 로봇 배송 처리 건수					

[4] 고부가가치 문화 · 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

과제명	2-4-1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10	-
추진체계	주관부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협업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박물관,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제물포 일원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했으나, 정적인 관람 방식은 미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관광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광객의 불편이 큼 '제물포 르네상스' 성공을 위해 AR/VR 등 실감 기술을 활용, '경험'과 '참여' 중심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함					
추진목표	인천의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행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인천 헤리티지(Heritage)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콘텐츠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사라진 근대 건축물을 재현하는 'AR 역사재현',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는 'VR 가상체험관', 위치 기반 음성 해설 'AI 스토리텔링 도슨트' 제공 - 편의 서비스: 모든 관광 정보를 하나의 지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통합관광지도', 개인 맞춤형 'AI 추천 여행코스', 예약·결제·교통 기능을 통합한 '통합 예약/결제/교통패스' 구현 - 행정/분석 서비스: 관광객 이동 동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운영 데이터 구성: - 문화유산 데이터: 문화재 3D 모델(디지털 트윈) 및 고지도, 옛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 및 연계 - 관광자원 데이터: 숙박, 음식점, 쇼핑, 축제, 공연 등 관광 정보를 통합 관리 - 실시간 공간/교통 데이터: 대중교통 도착 정보, 실시간 도로 교통상황, 주차장 정보 등 연계 - 관광객 데이터(비식별): 통신사 유동인구, 카드사 소비 데이터, 플랫폼 이용 로그 데이터 등을 수집 및 분석 정책/제도: - 공공 문화유산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협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관광객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천시 스마트관광 데이터 관리 규정' 수립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예: 인천관광공사 내 '스마트관광팀') 확보 - 지역 상인 등 민간 주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수익 공유 모델 검토					
기대효과	브랜드 가치 제고: 첨단 기술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 동선을 원도심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상점의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 연관 산업 시너지 창출: MICE 등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성과지표	- 콘텐츠/플랫폼 구축: 실감형 콘텐츠 개발 건수, 스마트 관광 앱 다운로드 수 - 관광 활성화: 대상지역 관광객 수 증가율,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 증가율 - 사용자 만족도: 스마트 관광 앱 사용자 만족도					

과제명	2-4-2 마이스(MICE) 방문객의 위치기반 지원체계 구축					
추진일정	2030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	10
추진체계	주관부서	관광마이스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MICE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의 경험이 행사장 내부에만 머물러 소비가 지역 경제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성공적인 MICE 도시는 업무와 여가를 결합한 '블레저(Bleisure)' 경험을 제공해야 하므로, 개인의 일정과 위치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시급					
추진목표	- MICE 행사 정보와 도시의 관광·상권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융합하고, 방문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MICE 방문객 위치기반 인텔리전트 지원 플랫폼」 구축 - 위치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MICE 방문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여 인천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MICE 목적지로 육성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참가자 맞춤형 서비스: '스마트 일정 관리 및 알림', AI가 맛집·관광지를 추천하는 'AI 기반 맞춤형 추천', 행사장 내부에서 외부 상점까지 안내하는 '실내외 통합 길안내' - 지역 상생 서비스: 특정 장소 방문 시 '위치기반 모바일 쿠폰' 자동 발급 및 스탬프 투어, 앱을 통한 '주변 상점 실시간 예약/주문' 기능 - 행사 운영/분석 서비스: 비식별화된 '참가자 동선 및 체류시간 분석'으로 행사 기획을 지원하고,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기능을 제공 데이터 구성: - MICE 행사 데이터: 행사 일정, 세션, 연사, 참가자 리스트(비식별), 부스 배치도 등 - 실내외 공간정보: MICE 시설 실내지도(BIM/IMDF) 및 주변 지역의 상점, 호텔 등 POI(관심지점) 정보 - 실시간 위치/상황 데이터: 참가자의 실내외 위치정보(비콘/GPS) 및 주변 교통, 날씨 정보 - 관광/상권 데이터: 지역 맛집, 관광 명소 정보 및 상점별 실시간 좌석 현황, 프로모션 정보 정책/제도: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투명한 동의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관한 규정(표준 협약 모델) 마련 -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예: 인천관광공사 내 MICE DX팀) 확보 - 행사 주최자(PCO), 지역 상인회 등 민간 주체와의 상시적인 파트너십 채널 구축					
기대효과	'블레저(Bleisure) 도시' 브랜드 구축: MICE 방문객에게 일과 휴양을 함께 즐기는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형성 - MICE-지역상권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MICE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정착 - 데이터 기반 MICE 정책 고도화: 방문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유치 전략 및 지원 정책을 수립					
성과지표	- 플랫폼 구축/활용: 플랫폼 적용 MICE 행사 수, 행사 참가자 앱 사용률 - 지역경제 기여도: MICE 참가자 1인당 역대 소비액 증가율, 플랫폼 연계 쿠폰 사용률 - 만족도 향상: MICE 참가자 서비스 만족도					

[5]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과제명	2-5-1 지속가능한 도시 자산 및 시설 관리체계 구축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2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재산담당관, 사회재난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도로과, 건축과 등 시설물 소관 부서	
추진배경	- 인천시는 수많은 도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산 가치'와 '시설 안전' 관리가 분리되어 예산 낭비와 기회손실이 발생 - 따라서 분산된 정보를 3D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통합하여 '가치'와 '안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분산된 공유재산 정보와 시설물 정보를 3D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통합하고, 자산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과학적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도시자산·시설관리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자산·시설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재정 건전성과 미래 가치를 증대시킴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자산 관리 서비스: 3D 지도 기반 '공유재산 총괄맵', '유휴/저활용 자산 분석',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 시뮬레이션' 제공 - 시설 관리 서비스: '시설물 디지털 이력관리', 'AI 기반 노후도/위험도 예측', '최적 유지보수계획 수립 지원' 제공 - 통합/연계 서비스: 재산과 시설 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자산-시설정보 통합 대시보드', '공공시설 재배치 시뮬레이션' 제공 데이터 구성: - 자산(재산) 데이터: 공유재산 대장,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대부 및 매각 이력 등 - 시설(물리) 데이터: 시설물 제원, 3D모델(BIM),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력, IoT 센서 데이터(균열, 진동 등) - 공간정보 데이터: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항공사진, 고정밀 3D 도시 모델 - 재난/환경 데이터: 침수 이력, 재난 위험지구, 소음, 진동 등 환경 정보 정책/제도: '도시자산·시설 통합관리' 관련 조례 신설 - 자산-시설 연계를 위한 '통합 표준 코드' 개발 등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 핵심 자산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기대효과	시설물 총 유지관리 비용(LCC) 20% 절감: 예방적 유지보수 도입을 통해 긴급 복구 비용 등 절감 공유재산 활용 수입 연 10% 증대: 유휴/저활용 재산의 적극적 발굴 및 매각/임대 추진 과학적 시설관리: 데이터 기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 전략적 자산 경영(SAM) 체계 마련: 자산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성과지표	- 데이터 기반 마련: 자산-시설 데이터 통합률 - 관리 효율화: 유지보수 예산 계획 정확도, 연간 유휴재산 발굴 건수 - 안전성 강화: 노후 고위험 시설물 감소율 - 재정 기여도: 공유재산 활용 수입 증가율					

과제명	2-5-2 도시 교통 및 하천 인프라 건설관리 체계 구축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	20	-
추진체계	주관부서	종합건설본부, 인천대로개발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시설물 관리 부서	
추진배경	- 인천시는 '인천대로 지하화'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나, 2D 도면 기반의 단절된 관리 방식으로 공사 지연, 비용 증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3D BIM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건설관리 체계 도입이 필수적					
추진목표	- BIM(빌딩 정보 모델링) 등 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 건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인프라 건설관리 플랫폼」 구축 -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인프라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통합 관리하여, 건설 사업의 효율성, 안전성,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설계/시공 서비스: 'BIM 설계 데이터 통합 및 간섭검토', '4D 공정 시뮬레이션', '가상시공 및 시공성 검토' - 안전/환경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작업 예측 및 경보' - 행정/소통 서비스: '디지털 공정회의 및 협업', '건설정보 3D 시각화 및 대시민 공개' 데이터 구성: - 설계/모델 데이터: 토목, 건축, 설비 등 모든 분야의 3D BIM 모델, 3D 지형/지반 모델, 공사 시방서 등 - 공정/원가 데이터: 공정계획(WBS), 공정표(Gantt Chart), 자원 및 원가 정보(내역서 등) - 실시간 현장 데이터: 드론측량 데이터, 현장 CCTV영상, IoT 센서 데이터(작업자 위치, 장비상태, 가스농도 등) - 문서/이력 데이터: 설계변경 이력, 공사일지, 검측/감리 보고서, 회의록 정책/제도: - 공공 공사 BIM 설계 의무화 및 대가 기준 마련 - 국가 건설정보분류체계(CALS) 기반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가이드라인 수립 - 발주부서 공무원 대상 BIM 전문 교육 강화 - 공사 계약 시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의무 조항 포함					
기대효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공기 30% 이상 감소: BIM 기반 간섭 사전 검토를 통한 재시공 및 설계변경 최소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률 50% 이상 감소: 스마트 안전장비 연동 및 위험 예측을 통한 사고 예방 사회기반시설의 시공 품질 향상: 가상시공을 통한 최적 공법 적용 및 철저한 품질 검증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성능 향상 선진적인 건설사업 관리체계(PMIS) 정착: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건설관리로 전환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모든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 확보					
성과지표	- BIM 도입 확산: 공공 건설사업 BIM 적용률 - 효율성 증대: 설계단계 재시공 방지율 - 안전성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율 - 소통 강화: 민원 처리 시간 단축률					

과제명	2-5-3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지원체계 구축					
추진일정	2030년			소요예산	5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5	-	-	-	-	5
추진체계	주관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협업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도시 활력의 원천인 골목상권과 공동체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지원 정책은 실제 생활권과 동떨어진 행정구역 단위로 집행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없이 이루어져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어려움					
추진목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생활·상권 경계를 정의하고, 해당 지역의 상권과 공동체 활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상권·공동체 활성화 플랫폼」 구축 - 행정경계에 가려진 생활·상권 경계를 데이터로 발견하고, 상권과 공동체의 자생적 활력을 지원하여 특색있는 골목경제를 되살림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진단/분석 서비스: '상권 유동인구 및 매출 분석', '지역별 공실정보 시각화', '주요 커뮤니티 토픽 및 관심사 분석' - 상인 지원 서비스: '경쟁점포 및 업종분포 분석', '잠재고객 분석 리포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업종별 입지 추천 및 창업 시뮬레이션' - 공동체 지원 서비스: 유휴 공간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활동공간 매칭', '마을 축제/플리마켓 홍보 지원' 데이터 구성: - 상권 데이터: 카드사 매출 데이터, POS 데이터, 공실 정보 - 유동인구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대중교통 승하차 데이터 - 소셜/커뮤니티 데이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SNS 데이터 - 공간/시설 데이터: 건축물대장, 도로/보행로 네트워크, 유휴 공공/민간 공간 정보 정책/제도: -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생활상권'을 공식적인 정책 지원 단위로 인정하도록 관련 조례나 지침을 개정함 - 민감한 상업/소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현장과 데이터를 잇는 '골목경제 매니저'를 양성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함 - 데이터 제공 민간 기업 및 지역 주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함					
기대효과	특색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상권 발전을 유도하여 도시의 다양성을 증진시킴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 상인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함 주민 만족도 및 애향심 증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정보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킴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구축: 생활상권 경계 정의 완료 수, 핵심 데이터 통합률 - 상권 활성화: 지원 상권 매출 증가율, 지원 상권 공실률 감소율 - 공동체 활성화: 상인-공동체 연계 프로젝트 수 - 사용자 만족도: 플랫폼 활용 만족도					

3. 시민 체감 실현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

[1]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과제명	3-1-1 통신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 모델 개발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10	-
추진체계	주관부서	디지털산업과 또는 토지정보과, 장애인복지과		협업부서	시 전 부서	
추진배경	- 기존 도시 정책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라 실제 활동 인구를 반영하지 못해 행정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함 - 특히 업무지구의 시설 부족이나 교통약자 서비스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통신 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분석 모델 개발이 시급함					
추진목표	- 통신 빅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융합하여 인구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인천형 생활인구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행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시민의 실제 삶을 반영하는 '생활인구' 데이터에 기반하여, 행정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감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기본 분석 서비스: '시간/공간별 생활인구 조회', '생활인구 특성 분석' - 정책 지원 서비스: '복지시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재난 시 대피인원 추산' - 특화 분석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데이터 등과 융합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생활인구 핫스팟 분석' 데이터 구성: - 핵심 데이터(통신): 통신 3사의 비식별 모바일 로그 데이터 - 보정 데이터(공공): 주민등록인구, 사업체/종사자 수 통계, 등록외국인 통계 - 융합 분석 데이터: 복지시설/병원 현황, 대중교통 노선, 재난위험지구 정보, 건축물 정보 등 정책/제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개정 등 통신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근거 마련 - 민감 데이터 익명성 검증 및 보안 관리 등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확보 및 전 직원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강화 - 통신 3사와의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기대효과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 활용 문화를 정착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 시민들의 실제 생활패턴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만족도 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행정 실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및 활동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지표	- 모델/데이터 기반 마련: 생활인구 모델 예측 정확도 - 플랫폼 활용도: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이용 건수 - 정책 기여도: 생활인구 활용 정책 결정 건수 - 서비스 개선 효과: 복지시설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율					

과제명	3-1-2 '10분 만족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발 및 관리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1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장애인복지과		협업부서	종합건설본부, 교통국, 군·구	
추진배경	'10분 도시'가 세계적 패러다임이나, 현재 도시계획은 실제 보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수립됨 - 이로 인한 '체감 접근성' 격차는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고 도시 불평등을 심화시킴 - 따라서 실제 보행로 기반의 '실질적 접근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실제 보행 네트워크와 지형, 장애물 정보를 종합하여 시민 유형별 '체감 접근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생활권 접근성 진단 및 관리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접근성 진단을 통해, 모든 시민이 10분 거리 안에서 필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진단/분석 서비스: '생활 필수시설 접근성 분석', '접근성 취약지역 분석', '교통약자 이동 장벽 분석' - 정책 지원 서비스: '시설개선 효과 시뮬레이션', '최적 복지시설 입지 추천' - 대민 서비스: '개인 맞춤형 안심 길찾기', '우리동네 접근성 지도' 데이터 구성: - 보행 네트워크 데이터: 상세 도로/보행로 네트워크 및 경로별 속성(폭, 경사도 등), 횡단보도 등 시설 정보 - 생활 필수시설 데이터: 병원, 공원,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서비스 시설 위치 및 운영 정보 - 수요자 데이터(비식별): 주거 인구 분포,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인구 분포 - 지형/건물 데이터: 수치표고모델(DEM), 경사도 분석도, 건물 출입구 정보(계단/경사로 유무) 정책/제도: - 신규 공공시설 건립 시 '생활권 접근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보행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 -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기반 데이터 갱신 채널을 마련					
기대효과	포용적 도시 환경 구축: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도시계획 실현: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도시계획 및 예산 배분					
성과지표	- 인프라 기반 마련: 상세 보행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률 - 분석 체계 도입: 접근성 취약지역 분석 정기 보고서 발간 - 정책 개선 효과: 접근성 소외인구 감소율 - 시민 만족도: 보행환경 및 생활 편의성 만족도					

과제명	3-1-3 복지·보육 서비스 공급-수요 격차 분석 시스템 개발					
추진일정	2030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	10
추진체계	주관부서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협업부서	도시계획국, 군·구	
추진배경	-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실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지역별로 시설이 남거나 수백 명이 대기하는 '공간적 불일치' 문제가 심각 - 이는 정밀한 수요 분석보다 행정구역별 총인구나 민원에 의존해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급-수요 격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복지·보육 서비스의 공급(시설 현황)과 수요(인구 특성)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양자 간의 격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복지·보육 공급-수요 격차 분석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공급-수요 분석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육 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림 없이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구축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진단/분석 서비스: '서비스 공급-수요 격차 분석', '복지 소외지역(음영지역) 분석', '시설 이용률 및 포화도 분석' - 정책 지원 서비스: '신규시설 최적입지 추천', '시설 재배치/기능전환효과 시뮬레이션' - 대민 서비스: '우리동네 맞춤 복지/보육시설 찾기', '시설 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 데이터 구성: - 공급 데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등 모든 복지·보육시설 위치, 정원, 현원 정보 - 수요 데이터: 주민등록인구(연령, 성별), 특성인구(장애유형별, 수급가구 등), 생활인구 - 공간/환경 데이터: 상세 보행 네트워크, 대중교통 접근성,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도, 학교, 공원 등 정책/제도: - 데이터 기반 입지 선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복지/보육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를 추진 - 담당 공무원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시설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기대효과	- 주요 시설 평균 대기자 수 20% 이상 감소 - 시설 운영 효율성 15% 이상 향상 복지·보육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행정의 신뢰도 및 시민 만족도 향상: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투명한 시설 공급 정책을 통해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 위기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복지/보육 시설 데이터 통합률 - 분석 체계 도입: 공급-수요 격차 분석 정기 리포트 발간 - 정책 개선 효과: 서비스 소외지역 면적 감소율, 주요 시설 대기자 수 감소율 - 시민 만족도: 복지/보육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환경 조성

과제명	3-2-1 시민 체감형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체계(선도과제)					
추진일정	2027년 ~ 2028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5	5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정보화담당관, 군·구 (지적/세무 부서)	
추진배경	- 부동산은 중요 자산이나 정보가 복잡·파편화되어 있고, 특히 공시-실거래가 괴리로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큼 - 시민들은 여러 시스템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전문가 위주 정보로 인해 잘못된 의사결정 위험에 노출됨 -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통합·가공하여 시민 체감형으로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흩어져 있는 모든 공공 부동산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의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부동산 AI 정보 포털」 구축 -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시민 누구나 복잡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 생태계 조성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통합 정보 서비스: '부동산 종합정보 원클릭 조회', '3D 기반 입지환경 분석' - AI 분석 서비스: 'AI 부동산 가치추정(AVM)', '유사 거래사례 비교분석', '미래가치 예측 시뮬레이션' - 개인화 서비스: '내 관심 부동산 관리'(푸시 알림), '맞춤형 매물 추천' 데이터 구성: - 공시가격 데이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실거래 데이터: 부동산 실거래가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건축물/토지 데이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 - 입지/환경 데이터: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POI 정보, 도시계획, 개발계획 등 정책/제도: -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체계를 수립 - 또한 AI 모델 개발 및 운영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를 구축					
기대효과	- 시민의 정보 탐색 비용 50% 이상 절감 - 부동산 관련 민원 30% 이상 감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부동산 공공 데이터 통합률, AI 가치추정 모델 정확도 - 시민 활용도: 포털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 서비스 만족도 점수 - 행정 효율성: 부동산 정보제공 관련 민원 감소율					

과제명	3-2-2 2D·3D 기반 부동산 임장 지원 포털 구축					
추진일정	2030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	10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정보화담당관, 군·구(지적/건축 부서)	
추진배경	- 현장 방문('임장')은 필수적이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민간 로드뷰는 조망권, 일조권 등 입체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고 공공 데이터가 분산되어 불편함 - 따라서 3D 공간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 '디지털 임장' 지원 포털 구축이 시급함					
추진목표	- 고정밀 2D/3D 공간정보와 모든 공공 부동산 데이터를 융합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PC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부동산 임장 지원 포털」 구축 - 디지털 공간에 현실의 부동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시민들이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생생한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임장' 시대를 열어감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통합 조회 서비스: '2D/3D지도 기반 부동산 탐색', '부동산 종합정보 One-Stop조회' - 가상 임장 서비스: '360° VR 파노라마', '드론뷰/항공뷰 제공' - 환경 분석 서비스: '일조권/조망권 시뮬레이션', '소음/경관 분석' 데이터 구성: 2D 공간정보: 고해상도 항공사진(정사영상), 연속지적도 3D 공간정보: 3D 지형모델(DEM), 3D 건물모델(LOD 2~3 수준) - 부동산 공공데이터: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 환경 데이터: 소음지도, 건물 및 지형 고도(높이) 데이터 정책/제도: - 건축 인허가 시 3D 데이터(BIM)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D/3D 공간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 - 또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용					
기대효과	- 시민의 임장 활동 비용 70% 이상 절감 -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및 소송 감소 부동산 정보 격차 해소: 누구나 무료로 고품질의 정보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함 시민 편의성의 획기적 향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부동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주요 도심지 3D 건물 모델 구축률 - 시민 활용도: 포털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 서비스 만족도 점수 - 효율성 증대: 가상 임장 서비스 이용 건수					

[3] 지능형 교통 연계 및 교통 이동권 보장

과제명	3-3-1 정밀도로지도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ITS) 연계 체계 고도화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1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교통정보운영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인천경찰청, 인천스마트시티(주)	
추진배경	- 인천시 ITS 인프라는 시스템들이 개별 운영되는 '데이터 사일로' 문제로 종합적 분석과 예측이 어려움 - 현재 '사후 대응' 체계에 머물러 있어, AI로 미래 교통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신호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통합 플랫폼으로의 고도화가 시급					
추진목표	- 분산된 교통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의 예측 분석을 도입하여, '상황 대응'을 넘어 '미래 예측'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 기존의 분절된 2D 기반 교통관리를 3D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행정) 정밀 ITS 시설물 자산관리: 모든 시설물을 정밀도로지도 위에 통합 관리, 좌표·규격·이력 기반 자산관리 효율화 (행정) 차선 단위 교통상황 모니터링: 스마트교차로 데이터를 정밀도로지도에 실시간 시각화, 병목 구간·차종별 영향 분석 (행정) C-ITS 서비스 지원 인프라: 차선·정지선·신호등 정보 기반, V2I 통신에 필수적인 정밀 위치·신호정보 제공 기반 마련 (대민/협업) 경찰청 협업용 디지털 현장지도: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한 공동 위치 지정·협의 체계, 오류 최소화 및 절차 신속화 (대민/협업) 민간 내비게이션 연계: 정밀 좌표 기반 신호정보, 운전자에게 cm급 신뢰도 서비스 제공 (대민/협업) 긴급차량 우선신호 경로 최적화: 정밀도로지도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긴급차량 최적 경로 산출, 경로상의 신호등 제어 데이터 구성: -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MMS 기반 신규 구축, 국제 표준 준수, 차선·시설물 등 핵심 레이어 포함 - ITS 시설물 데이터: 약 5만여 시설물 위치를 정밀 실측 후 매핑, 고유 ID 연계해 자산정보 정확성 확보 -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교통량·속도·차종 등 데이터를 정밀도로지도와 융합, 3D 디지털트윈 환경에서 입체 시각화 정책/제도: - 데이터 거버넌스: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관리 및 갱신 지침」 제정, 품질 기준·갱신 주기·담당 부서 역할을 명확화 - 조직·인력: 교통정보운영과 내 전담팀 신설, 전문 인력 확보·양성으로 유지관리와 활용 역량 강화 - 보안 체계: 국가 중요 인프라로서 폐쇄망 기반 관리, 외부 제공 시 보안 심사·비식별화·등급 정책 적용					
기대효과	정량적 효과 - 행정 효율화: ITS 시설물 신설·유지보수 시 현장조사·실측 업무를 50% 이상 축소 - 교통 흐름 개선: 차선 단위 정밀 분석 기반 신호 최적화 효과 10% 향상 - 교통 안전 증대: 정밀 위치 기반 돌발상황 알림·위험구간 예측 → 2차 사고 발생률 감소 정성적 효과 - 과학적 정책 수립: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행정으로 전환 → 과학적·객관적 교통 정책 마련 - 미래 교통 선도: C-ITS, 자율주행 등 미래 서비스 인프라 선제 확보 → 도시 경쟁력 강화 - 협업 행정 강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데이터 공유 → 동일 기준 기반 소통·협업 수준 향상					
성과지표	-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ITS 관리 시설물 좌표 정밀도 - 과학적 분석 체계 도입: 차선 단위 교통 분석 보고서 정기 발간 - 행정 효율성 증대: 신규 시설물 정보 시스템 반영 시간 - 서비스 기반 마련: C-ITS 표준 데이터 항목 충족률					

과제명	3-3-2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Barrier-Free) 지원환경 조성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10	-
추진체계	주관부서	택시운수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장애인복지과	
추진배경	-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수요 대비 운영 효율이 낮아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 - 현재 서비스는 '차량' 제공에만 국한되어, 집에서 승차지까지, 하차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물리적 장벽은 고려되지 않음 - 따라서 수요 예측 기반 배차 효율화 및 'Door-to-Door' 무장애 경로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교통약자의 이동 전 과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실현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 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교통약자의 모든 이동 과정을 끊김 없이(Seamless) 지원하여,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구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운영/관제 서비스: '이동 수요 예측 및 사전배치', 'AI 기반 실시간 최적 배차', '차량 운행 통합관제' - 사용자 지원 서비스: '무장애(Barrier-Free) 길안내 내비게이션', '스마트 통합 예약 및 호출 앱', '도착 전 알림 및 운전자 정보 제공' 데이터 구성: - 운행/수요 데이터: 장애인 콜택시 운행 이력, 실시간 예약/호출 데이터 - 차량/운전자 데이터: 차량 실시간 위치(GPS), 차량 종류, 운전자 정보 - 무장애 공간정보: 상세 보행 네트워크(경사도, 턱 등), 건물 출입구 정보, 저상버스 노선 및 정류장 정보 - 사용자 데이터(비식별): 사용자 유형(장애 유형, 휠체어 종류 등), 자주 가는 목적지 정책/제도: - 수요 기반 탄력적 차량 운영 및 요금 체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 민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관리 지침 수립 -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 및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확보 - 수요자·공급자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기대효과	- 평균 배차 대기시간 50% 이상 단축 및 차량 공차 운행률 30% 이상 감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획기적 보장: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의 자유를 확대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확대 기여: 병원, 직장, 여가시설 등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					
성과지표	- 플랫폼 효율성: 평균 배차 대기시간 단축률, 차량 1대당 일일 운행 건수 증가율 - 서비스 품질: 사용자 만족도 점수 - 이동권 보장: 서비스 이용 건수 증가율					

과제명	3-3-3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지원체계 구축					
추진일정	2030년			소요예산	5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5	-	-	-	-	5
추진체계	주관부서	교통안전과, 택시운수과 등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경찰청	
추진배경	• 불법 주정차 등 고질적인 교통 무질서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현재의 '사후 단속' 위주 관리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비효율적 자원 운영으로 시민 불신이 쌓이고 있음 • 따라서 위반 발생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교통 법규 위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기반 교통질서 관리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예방을 통해 교통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					
주요 추진내용	• 서비스 목록: - 분석/예측 서비스: '위반 상습지역 분석 및 시각화', '교통사고-위반유형 연관성 분석', 'AI 기반 위반 발생 예측' - 단속/관리 서비스: '최적 단속지점 추천', '스마트 순찰경로 생성', '버스전용차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 대민/소통 서비스: '교통질서 위험 지도 공개', '시민 제보 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구성: - 위반/단속 데이터: CCTV 단속 데이터(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과속 등), 시민신고 데이터 - 교통사고/흐름 데이터: 교통사고 데이터(e-TAS), 실시간 교통량, 속도(VDS) - 공간/환경 데이터: 도로 네트워크, 주차장 정보, 보호구역 정보 - 외부 요인 데이터: 기상 데이터, 행사/집회 정보, 주변 상권 정보 • 정책/제도: - AI 영상분석 기반 자동 단속시스템 도입근거를 검토, 시-경찰청 간 데이터 공유를 표준화하며 거버넌스를 수립 - 또한 교통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경찰청과의 단속 업무 협력체계 강화					
기대효과	• 교통법규 위반 건수 30% 이상 감소 • 교통사고 발생률 15% 이상 감소 • 단속 업무 효율성 40% 증대 • 시민의 교통안전 체감도 향상 •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단속 회피'가 아닌 자발적 법규 준수 문화 확산 • 행정의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교통 위반 데이터 통합률 • 예측 정확도: 위반 발생 예측 모델 정확도 • 질서 확립 효과: 주요 상습 위반지역 위반 건수 감소율 • 안전성 강화: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율					

[4]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강화

과제명	3-4-1 시민 체감형 융복합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2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도시관리과, 시 전 부서	
추진배경	- 인천시 40여 개 스마트시티 과제가 개별 부서 주도로 추진될 경우, 데이터 중복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스템 미연계로 인한 통합 대응력 저하 문제 발생 - 따라서 모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플랫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수적					
추진목표	- 개별 스마트시티 서비스들을 공간정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4+1 추진 유형」을 적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 API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시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도시 인천 구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플랫폼 API): - 기본 서비스: '통합 지도 시각화 API' - 실시간 연계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API' - 분석/예측 서비스: '공간 분석 API', 'AI/시뮬레이션 API' -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셋 제공 API' 데이터 구성: - 핵심 기반 데이터: 연속수치지형도, 항공사진, 행정경계, 건물, 토지 등 - 실시간 수집 데이터: IoT 센서 데이터(미세먼지, 수위 등),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BIS), 드론/UAM 운항 정보, CCTV 영상 - 융복합 분석 데이터: 유동인구/생활인구, 재난/사고 이력, 스마트시티 서비스별 운영 데이터 정책/제도: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활성화 조례' 등에 플랫폼 우선 활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간 데이터 표준 및 관리 규정 수립 - 또한 '스마트시티-공간정보 연계 협의체' 구성 등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					
기대효과	- 유사·중복 시스템 개발 방지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 절감 - 데이터 공동 활용 및 표준 API 제공을 통한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협업 행정 문화 정착 -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된 혁신적인 시민 체감 서비스 창출 - 도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합리성 및 신뢰도 제고					
성과지표	- 플랫폼 활용도 제고: 플랫폼 연계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 - 개발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API 호출 건수 - 개발 효율성 증대: 서비스 개발 비용 절감액 -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 만족도					

과제명	3-4-2 '인천-트윈' 연계형 시민참여 리빙랩 및 제안 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10	-
추진체계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정보화담당관실, 각 군·구 및 사업부서	
추진배경	- 인천시는 시민참여 동력 약화, 도시계획 정보 접근성 한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부재, 스마트도시 성과 단절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함 - 리빙랩 참여자 수 급감, 정보 확인의 비효율, 2D 기반 심의 등은 시민참여와 과학 행정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추진목표	- 분산된 시민참여 채널, 도시계획 정보, 스마트도시 데이터를 '인천-트윈' 기반의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시민이 참여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결과를 3D 디지털 트윈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참여 생태계' 구축 '디지털 트윈'과 '시민 지성'을 융합하여, 시민이 도시의 계획과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효용을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협력적 도시 거버넌스 구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참여: '스마트 협력 빌리지 리빙랩 포털',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제안 및 컨설팅' - 계획 및 관리: '3D 지구단위계획 열람 및 모의실험', '스마트도시 시설물 통합관리 대시보드' - 소통 및 의사결정: '주민 의견/갈등 모니터링 대시보드', '3D 설명용 스토리맵' 데이터 구성: - 도시계획 데이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도지역, 건폐율, 높이 등 규제 정보 - 시민참여 데이터: 리빙랩/주민 제안 정보, 온라인 설문/공청회 의견 - 스마트 인프라 데이터: 스마트 빌리지 IoT 센서 데이터, 스마트 자가통신망 경로, 사용률 3D 공간 데이터: 지형(DEM), 건물 3D 모델(LOD2 이상), 3D 시뮬레이션 모델 정책/제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주민제안 절차, 처리 기한 등을 명문화하고, '스마트도시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조례' 제정 검토 - 또한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체계를 제도화					
기대효과	- 시민참여 연 50% 이상 활성화 - 도시계획 민원 처리 시간 80% 이상 단축 - 스마트 시설물 관리 효율 30% 이상 향상 - 도시계획의 투명성 및 시민 신뢰도 증진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문화 정착 -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핵심 데이터 통합률 - 시민참여 활성화: 플랫폼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 리빙랩/주민 제안 건수 증가율 - 행정 효율성 증대: 계획정보 확인 소요시간 단축률 - 정책 실효성 강화: 시민 제안 정책 채택률					

4.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도시 안전 및 기후 변화 대응]

[1] 데이터 기반 기후행동 이행

과제명	4-1-1 인천형 탄소지도(Carbon Map) 및 활용체계 구축(선도과제)					
추진일정	2027년 ~ 2028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10	1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환경기후정책과		협업부서	녹지정책과, 교통국, 산업정책관,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인천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현재의 총량 중심 관리는 탄소 배출·흡수의 공간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어디서 배출되고 흡수되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의 모든 탄소 배출원·흡수원 정보를 지도화하는 「인천형 탄소지도」 구축 시급					
추진목표	- 도시의 탄소 배출과 흡수 현황을 격자(Grid) 단위의 정밀한 지도로 시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평가하는 「인천형 탄소지도 및 활용체계」 구축 - 도시의 탄소 배출과 흡수현황을 과학적으로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분석/진단 서비스: '탄소 배출/흡수량 지도 시각화', '지역별 탄소 수지(Balance) 분석', '탄소 배출원/흡수원 핫스팟 분석' - 정책 지원 서비스: '탄소감축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도시숲/공원조성 최적입지 추천' - 대민 서비스: '우리 동네 탄소지도', '시민참여 탄소 줄이기 활동 지원' 데이터 구성: - 배출원 데이터: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도로별/차종별 교통량,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 흡수원 데이터: 녹지 분포도(산림, 공원 등), 식생 정보(수종, 임상도 등), 토지피복도 - 공간/환경 데이터: 3D 도시 모델, 기상 데이터(기온, 풍향/풍속 등) 정책/제도: - 에너지 사용량 등 민간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형 탄소 배출·흡수량 산정 표준 방법론'을 정립 - 또한 탄소지도 운영 및 분석 전담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산·학·연·관·민 거버넌스를 구축					
기대효과	- 탄소 감축 목표 달성률 20% 이상 향상 - 탄소중립 정책 투자 효율성 30% 증대 - 과학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시민의 환경 인식 및 참여 제고 - 친환경 미래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탄소지도 데이터 구축률 - 분석 체계 도입: 탄소 수지 분석 정기 보고서 발간 - 정책 기여도: 탄소지도 활용 정책 결정 건수 - 시민 참여도: 시민참여 탄소 줄이기 프로그램 참여자 수					

과제명	4-1-2 인천 RE100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	10	-
추진체계	주관부서	에너지산업과		협업부서	산업입지과, 사회적경제과,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글로벌 기업의 'RE100' 요구가 수출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천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보와 수단이 부족하고, 이행 제도가 복잡하여 RE100 추진에 어려움 -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수요 정보를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RE100 플랫폼」 구축 시급					
추진목표	- 인천 관내의 재생에너지 공급 자원과 수요 기업을 연결하고, 복잡한 RE100 이행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RE100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 재생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천의 모든 기업이 손쉽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수요기업 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소 찾기', 'RE100 이행방안 컨설팅', 'PPA/REC 통합 거래 지원' - 공급자 서비스: '내 발전소 등록 및 판매 관리', '수요기업 탐색 및 매칭' - 정책/공공 서비스: 'RE100 정책 및 인센티브 통합 안내', '시민참여형 발전소 지원' 데이터 구성: - 재생에너지 공급 데이터: 발전소 현황, 실시간/예측 발전량, 판매 가능 전력량 및 REC 보유량 - 에너지 수요 데이터: RE100 참여(희망) 기업 목록, 기업별 전력 사용량 및 사용 패턴 - 전력계통 데이터: 한전 배전선로 및 변전소 정보, 계통 연계 용량 - 공간/환경 데이터: 3D 공간정보(건물 옥상 면적 등), 기상 정보(일사량, 풍속 등) 정책/제도: - 플랫폼 참여 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인천형 RE100 인센티브' 제공 조례를 제정하고, PPA 표준 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 또한 '인천 RE100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전문 조직을 확보하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기대효과	- 관내 기업 RE100 참여율 20% 증대 -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10% 절감 수출 기업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지역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거래, 컨설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 -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자립 실현 - 탄소중립 선도도시 브랜드 제고					
성과지표	- 플랫폼 활성화: 플랫폼 가입 기업 수, 플랫폼 통한 재생에너지 거래량 - RE100 이행 지원: RE100 컨설팅 및 지원 건수, 참여기업 RE100 이행률 - 만족도: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2]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과제명	4-2-1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재난 예측 및 대응(선도과제)					
추진일정	2029년 ~ 2030년			소요예산	4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40	-	-	-	20	20
추진체계	주관부서	안전상황실, 사회재난과		협업부서	소방본부, 토지정보과, 시설물 관리 부서	
추진배경	- 기후변화와 도시 고밀도화로 재난이 복합화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는 한계에 도달 - 현재 재난 시스템과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협력 대응이 어렵고, 과학적 예측 시스템이 부재 - 따라서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로 재난을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 통합하고, AI 기반의 예측·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지능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재난 예측·대응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트윈과 AI 기반의 예측 분석을 통해, 재난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최적의 대응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제적 재난안전 도시 구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예측/경보 서비스: '침수/산사태 위험 예측 및 경보', '시설물 붕괴 징후 사전 감지', 'AI 기반 화재/연기 확산 시뮬레이션' - 대응/관제 서비스: '재난현장 3D 통합상황도', '최적 대피경로 및 자원배치 지원' - 대민/예방 서비스: '시민 맞춤형 재난정보 알림', '내 주변 대피소 정보 안내' 데이터 구성: - 재난/안전 데이터: 실시간 강우량, 하천/저수지 수위, 시설물 IoT 센서 데이터(균열, 진동 등),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B - 공간정보 데이터: 3D 지형/건물 모델, 지하공간 통합지도, 대피소 정보 - 실시간 현장 데이터: 재난·안전 CCTV 영상, 드론 촬영 영상, 출동 인력/자원 위치(GPS) - 인구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시간대별/지역별 인구) 정책/제도: - 재난 대응 시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통합 지휘를 위한 '인천시 재난대응 통합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재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를 수립함 - 또한 재난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함					
기대효과	-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율 50% 향상 - 인명피해 30%, 재산피해 20% 이상 감소 - 재난 복구 비용 15% 이상 절감 - 도시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강화: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 시민의 안전 체감도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선진 재난관리 체계 정착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재난 관련 데이터 통합률 - 예측 정확도: 주요 재난 예측 정확도 - 대응 역량 강화: 초동대응 시간 단축률 - 피해 감소 효과: 인명/재산피해 감소율					

과제명	4-2-2 환경 유해인자 확산 예측 및 대응 모델 개발					
추진일정	2030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	-	20
추진체계	주관부서	환경안전과		협업부서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인천시는 산업단지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현재 대응체계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음 - 유해물질 확산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도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큼 - 따라서 3D 도시 모델과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산경로와 피해범위를 시뮬레이션하는 모델개발 시급					
추진목표	3D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 각종 환경 유해인자의 확산을 과학적으로 예측·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환경 유해인자 확산 예측 및 대응 플랫폼」 구축 - 보이지 않는 환경 유해인자의 확산 경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예측/시뮬레이션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누출 확산 시뮬레이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예측', '토양/수질 오염 확산 예측' - 대응/지원 서비스: '피해 예상지역 및 영향인구 분석', '최적 대피경로 및 방제자원 배치 지원' - 정보/대민 서비스: '시민 맞춤형 위험정보 전파', '실시간 환경 유해인자 지도' 데이터 구성: - 유해인자 정보: 유해화학물질 DB (물성, 독성, 보관량 등), 대기/수질/토양 오염원 배출량 정보 - 실시간 환경 데이터: 대기질/수질 측정망 데이터, 실시간 기상 데이터 - 공간정보 데이터: 3D 지형/건물 모델, 하천/하수관로 네트워크, 토지피복도, 토양도 - 인구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시간대별/지역별 인구) 정책/제도: -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데이터 제공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환경/재난 데이터 공유 표준 및 절차를 수립 - 또한 환경 재난 분석 및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정례화					
기대효과	- 환경 재난 초동 대응 시간 50% 단축 -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및 사회적 비용 30% 절감 - 방제 및 복구 비용 20% 절감 - 시민의 환경 안전 체감도 향상 - 과학적 환경 재난 대응 역량 확보 -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유해인자 확산 예측 모델 정확도 - 대응 역량 강화: 초동대응 시간 단축률 - 피해 감소 효과: 영향 인구/면적 감소율 - 시민 만족도: 환경 안전 정보 만족도					

[3] 지속가능한 해양·녹지공간 관리

과제명	4-3-1 '바다이음' 해양·연안 공간 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2029년			소요예산	2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	-	-	-	20	-
추진체계	주관부서	항만연안과, 수산과		협업부서	토지정보과,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추진배경	• 인천의 바다는 다양한 이용 수요가 급증하며 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기후변화 위협에도 직면함 • 현재 해양 공간 관리는 항만, 어업 등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통합 시스템이 부재함 • 따라서 모든 해양·연안 정보를 통합하고 과학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바다이음」 플랫폼」 구축이 시급					
추진목표	• 육지와 바다의 경계 없이 모든 해양·연안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3차원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하고, 과학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지원하는 「바다이음」 통합 해양공간관리 플랫폼」 구축					
주요 추진내용	• 서비스 목록: - 행정/계획 서비스: '해양공간 용도구역 통합관리', '입지 적합성 분석', '연안침식 및 해수면 상승 예측 시뮬레이션' - 어업 지원 서비스: '실시간 해황 및 안전조업 정보', AI 기반 '스마트 어장 추천' - 대민 서비스: '해양 레저/관광 정보', '연안 안전 정보' • 데이터 구성: - 공간/지형 데이터: 해안선, 갯벌 분포도, 정밀 수심(해저지형) 데이터, 도서 및 연안 3D 지형 모델 - 해양환경 데이터: 실시간 수온, 염분, 조류, 파고, 위성 기반 해수면 온도, 주요 해양생물 분포 - 이용/시설 데이터: 항로, 어업권/양식장 구역, 해상풍력 등 발전시설, 항만/어항 시설물, 해양보호구역 - 수산자원 데이터: 어종별/해역별 어획량 통계, 주요 어종 산란장, 서식지 정보 • 정책/제도: - '인천형 해양공간계획(MSP)' 수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양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 및 절차 수립 - 또한 해양공간정보 분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해양 분야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기대효과	• 해양공간 이용 갈등 30% 이상 감소 • 어업 생산성 10% 이상 향상 • 연안 재해 복구 비용 20% 이상 절감 • 과학적 해양공간계획(MSP) 수립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실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미래 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해양주권 확립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주요 해양공간 데이터 통합률 • 분석 역량 강화: 해양공간 적합성 분석 수행 건수 • 어업 지원 효과: 플랫폼 이용 어업인 만족도, 어업 관련 안전사고 감소율 • 정책 기여도: 플랫폼 활용 연안관리계획 수립 건수					

과제명	4-3-2 스마트 그린인프라 및 생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2028년			소요예산	1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	-	-	10	-	-
추진체계	주관부서	공원조성과, 녹지정책과		협업부서	환경국, 토지정보과	
추진배경	- 인천시는 그린인프라 확충에 노력 중이나, 개별 녹지를 '점' 단위로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함 - 이로 인해 녹지가 도로 등으로 단절되어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 따라서 흩어진 녹지를 '생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급					
추진목표	- 도시의 모든 그린인프라 정보를 3차원 디지털 트윈 환경에 통합하고, 생태적 연결성과 다차원적 기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최적의 녹지 정책을 지원하는 「'녹색이음' 스마트 그린인프라 및 생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네트워크 도시 구현					
주요 추진내용	서비스 목록: - 분석/평가 서비스: '생태 네트워크 연결성 진단', '그린인프라 다기능 평가', '바람길 분석 및 시뮬레이션' - 계획/관리 서비스: '생태축 설정 및 녹지 조성 최적지 분석', '녹지 소외지역 분석' - 대민/참여 서비스: '내 주변 공원/숲길 찾기', '시민참여 나무심기/정원가꾸기' 데이터 구성: - 그린인프라 데이터: 공원, 산림, 하천, 가로수 등 공간 DB 및 시설물 관리대장 - 생태/환경 데이터: 식생분포도, 식생활력도(NDVI), 주요 동식물 서식지 및 이동경로, 열쾌적성 지수(PET) - 공간/기상 데이터: 3D 지형/건물 모델, 상세 풍향/풍속 등 기상 데이터 - 인구/사회 데이터: 인구 밀도,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인구 분포 정책/제도: '생태 네트워크'의 개념을 도시계획 조례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하고, 그린인프라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함 - 또한 융합형 녹지·생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녹색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함					
기대효과	- 생물종 다양성 및 개체 수 증대 - 녹지 기능 효율 20% 이상 향상 - 도시 열섬 현상 15℃ 이상 저감 - 시민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증대 -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및 회복탄력성 향상 - 과학적 녹지 정책 결정 문화 정착 - 시민의 삶의 질 및 정서적 안정감 증대					
성과지표	- 플랫폼 기반 마련: 그린인프라 데이터 통합률 - 생태 네트워크 개선: 주요 생태축 연결성 지수 - 정책 개선 효과: 녹지 소외지역 면적 감소율 - 시민 만족도: 녹색 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					

5.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및 정책 기반 강화)

(1)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과제명	5-1-1 공간정보정책 총괄 컨트롤타워(토지정보과) 기능 강화					
추진일정	2026년 ~ 2027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인천시 전 부서	
추진배경	- 인천시 토지정보과는 '인천-트윈' 플랫폼 구축, 고정밀 3차원 도시 모델 및 지하 공간 통합지도 개발 등 모든 계획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부서임 - 이러한 중추적 역할로 인해, 토지정보과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종합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이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투자가 투입된 종합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에 그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추진목표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간지능과(가칭)'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부서간 유기적 협업과 지속가능한 공간정보 생태계를 구현					
주요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 부서별 공간정보 담당직 지정 및 협의체 운영: 각 부서 내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공간정보 담당직'을 지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인천시 공간정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 - 공간정보 관련 사업 사전 심사 및 조정 제도 도입: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관련 사업에 대해 토지정보과의 사전 심사 및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여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인천-트윈' 플랫폼 활용 및 데이터 표준 준수를 유도 -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보안 체계 확립 - 법·제도적 근거 마련: 토지정보과의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관 지정, 사전 심사 제도 등 협업 관련 사항을 조례 및 규칙에 명문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 핵심 프로그램 및 기술 '인천-트윈' 플랫폼 고도화 및 핵심 API 개발: 다양한 부서가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플랫폼 데이터와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핵심 API를 적극적으로 개발 및 공개함 - 이종 데이터 통합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모든 행정 데이터의 공간정보화를 강화하고, IoT 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위치 기준으로 공간정보와 연계·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확충 - 실시간 공간정보 공유 및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디지털 시정' 대시보드를 고도화하여 의사결정자들이 도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부서 간 공통의 상황 인식을 신속하고 조율된 협업 가능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 토지정보과 (컨트롤타워): 공간정보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 관련 부서 활동 조율,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거버넌스 주도, 기술 컨설턴트 역할 수행 - 협업 부서: '공간정보 담당직'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데이터 표준 준수, 플랫폼 활용을 통한 업무 혁신 주도 - 조직 개편: 현재 토지정보과의 업무(토지+공간정보)를 분리하고, 공간정보, AI, 스마트 등 분산된 사무를 통합한 '공간지능과(가칭)'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의 시너지 극대화					
	기대효과	- 부서 간 정보 사일로 극복 및 데이터 통합 활용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공간정보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문화 정착 및 정책 품질 제고 - 인천시 전체의 공간정보 활용 역량 상향 평준화				
성과지표	-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서 간 협업 수준 정성적 평가 -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한 중복 투자 예산 절감액, 플랫폼 API 호출 건수, 데이터 표준 준수율 등 정량적 지표 관리 - 공간정보 협업 기여도를 부서 및 개인 성과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제도적 동기 부여					

과제명	5-1-2 최신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조례, 지침 및 실행계획 현행화					
추진일정	2026년 ~ 2027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	-	5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인천시 전부서, 기획조정실, 군·구	
추진배경	- 현재 조례가 중앙 법규를 복사하는 수준에 그쳐, 시의 '글로벌 토포넬 시티' 비전과 50개 신규 추진과제 사이에 전략적 단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 - 정적인 법적 틀은 혁신을 저해하므로, 디지털 전환 노력이 제도적 병목 현상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례의 포괄적 현대화가 시급					
추진목표	- 인천시 공간정보 조례 및 관련 내부 지침의 포괄적인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50개 공간정보 추진과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공간정보정책 총괄 컨트론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추진내용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현대화 - 목적 조항 개정: 디지털트윈국토 실현, 데이터기반 행정 등 미래비전을 목적에 명시함 - 정의 조항 신설: "디지털 트윈국토", "공간지능(GeoAI)", "국토위성정보",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최신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함 - 총괄·조정 기능 강화: 시장 직속 전담 조직 신설 또는 기능 강화,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컨트론타워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함 -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수립: 계획수립(5년) 기준 마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3년차) 수정 - 데이터 거버넌스 조항 강화: 국가표준 준수,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민관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촉진을 규정 - 시민 체감 서비스 및 민간 참여 조항 신설: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발굴·제공 의무,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개방, 리빙랩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 - 중앙-기초 연계 조항 신설: 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 군·구와의 데이터 연계 및 기술 지원 방안,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규정함 - 관련 내부 지침 신설 및 현대화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침」(가칭) 신설: 데이터 표준·품질·보안·공유·이력 관리 등 구체적 실무 절차를 규정함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협업 및 성과 관리 지침」(가칭) 신설: 협업 콘텐츠 책임 체계, 공동 기획 및 예산 편성, 성과 관리 및 확산 절차를 규정함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인프라 운영 및 기술 지원 지침」(가칭) 신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전환, 실시간 데이터 처리, AI 분석 환경 구축 등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수립 -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수정계획(3년차) 및 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					
기대효과	- 혁신 촉진: 디지털 트윈, AI 등 최신 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혁신을 가속화 - 실행력 강화: 명확한 역할과 책임, 예산 연계 근거를 통해 공간정보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함 - 통합적 거버넌스: 중앙-광역-기초 간 연계 체계를 명확히 하여 도시 전반의 통합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 - 시민 체감도 및 신뢰도 향상: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의무화 및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					
성과지표	조례 및 지침 개정 완료율, 신설된 규정에 따른 사업 사전 심의 건수 및 조정 실적, 데이터 표준 준수율 및 개방 실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함					

과제명	5-1-3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보안 체계의 전면적 강화					
추진일정	2028년 ~ 2030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추진체계	주관부서	정보화담당관, 토지정보과, 디지털산업과		협업부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등 데이터 산출·활용 전 부서	
추진배경	- 디지털트윈, AI 행정, 스마트도시 추진 등 고도화된 도시 서비스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 확보 없이는 불가능함 -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의 불균형과 취약성을 그대로 두면, 정책결정의 신뢰도 저하·행정비용 증가·시민 신뢰 상실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함 - 따라서 데이터 표준과 품질, 보안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은 도시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전환의 기초적 토대임					
추진목표	인천시 전 부서와 기관이 생산·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품질관리·보안체계로 통합 관리하여, 도시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주요 추진내용	「인천시 데이터 표준 규정」 제정 및 모든 산출 데이터 의무 적용 - 전 부서 데이터 산출물을 중앙 품질관리 프로세스(수집→정제→검증→적재)로 일원화 - 개인정보·민감정보는 등급화 후 비식별화 처리를 의무화하고, 암호화 및 접근통제 강화 - 보안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표준 준수율·품질 오류·보안 위협 발생을 실시간 관리 - 중앙정부 정책(제7차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국가 표준 부합형 관리체계를 마련					
기대효과	정책결정 신뢰성 확보: 정확하고 최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행정 효율성 제고: 중복 데이터 최소화, 관리 비용 절감 보안 강화: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 수준 제고, 시민 신뢰 향상 혁신 촉진: 민간·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 신뢰도를 높여 신산업 창출 지원					
성과지표	표준 준수율, 품질 오류 감소율, 보안 사고 발생 건수를 주요 KPI로 설정하여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					

[2] 미래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R&D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과제명	5-2-1 공간정보 R&D 발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추진일정	2028년 ~ 2030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인천시 전 부서	
추진배경	-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가 차원의 Geo-AI 투자가 활발하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R&D 역량을 보유한 인천시는 일부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체계적인 R&D 기능이 부재하고 현업 부서의 수요와 연계가 미흡 '인천-트윈' 플랫폼, UAM 안전 운항, 지능형 도시문제 해결 등 핵심 사업들이 모두 선행 R&D를 전제로 하므로, R&D는 다른 모든 과제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핵심적인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 있음					
추진목표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체계적인 R&D 엔진을 구축하여 핵심 과제들의 기술적 종속을 방지하고 기술 역량 내재화와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임					
주요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거버넌스 구조 확립) - R&D 허브 사무국: 컨트롤타워로서 R&D 프로그램 예산 총괄 관리, 파트너십 체결, 기술 표준 강제, 성과 추적 및 평가를 담당함 - 인천 공간정보 R&D 자문위원회: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정부·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간 R&D 계획 및 예산 심의·승인, 전략적 자문을 제공함 핵심 프로그램 설계 ('프로젝트 I-SPARK') - 프로그램 A: '인천-트윈' 핵심 엔진 개발 (기반 R&D): 플랫폼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데이터 융합 엔진, Geo-AI 코어 모델, 표준 API,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연구함 - 프로그램 B: 미션 지향적 응용 R&D (수요 기반 프로젝트): 각 부서가 'R&D 챌린지'를 제출하면, 허브가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UAM 안전 운항, 산업단지 혁신, 통합 재난대응 등 시정 현안을 해결 - 프로그램 C: 개방형 혁신 및 사업화 (생태계 조성): 'I-SPARK 오픈랩' 설립, 스타트업에게 도시 데이터 및 플랫폼 API 제공, '인천 Geo-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간정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를 육성함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 학(學): 인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공식 R&D 파트너십을 체결함 - 산(産): 네이버·카카오 등 선도 기업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스타트업·중소기업과는 생태계 파트너십을 맺는 투트랙(Two-track) 프로그램을 운영함 - 연(研): KICT, KRIHS, LX 등 국가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 - 관(官): R&D 허브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협력을 촉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기대효과	- 정부 효율성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활기찬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성장 견인 - 인천이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가로 변모 - 글로벌 공간지능 선도도시로서 인천의 위상 확립					
성과지표	- 내부 효율성 증대: 도시개발계획 검토 시간 단축률(%), 재난 예측 모델 정확도 향상률(%) 등 - 경제 혁신 촉진: 신규 창업 기업 수, 민간 투자 유치액, 상용 애플리케이션 수 등 - 시민 체감도 향상: 신규 공공 서비스 시민 만족도 점수, 시민 불편사항 처리 시간 단축률 등					

과제명	5-2-2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일정	2026년 ~ 2027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인천시 전 부서	
추진배경	- 종합계획의 비전 실현이 모든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 달려있으며, 인천의 독보적 자산을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아이디어가 기술과 산업,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임 - 인천시는 명확한 비전과 50대 추진과제, '인천-트윈'이라는 핵심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국내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학술·연구 파트너들이 존재					
추진목표	인천의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국가적 R&D를 유치하고 선도하는 '국가 테스트베드'로 브랜딩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목적 지향적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인천 공간정보정책 협의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 행정부시장과 주요 국책연구기관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전략 방향 수립, 핵심 프로젝트 승인 등을 담당함 - 분과별 실무협의체 (운영 엔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 '미래 모빌리티' 등 주제별로 구성하여 공동 프로젝트 개발, 기술 난제 해결 등 실무를 총괄함 - 소통 활성화: '연례 인천 공간지능 포럼', '분기별 R&D 라운드테이블', '공동 협업 플랫폼' 등을 통해 소통과 네트워킹을 촉진함 핵심 프로그램 설계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 국가 테스트베드화: 고정밀 데이터, 통합 플랫폼 환경, 실세계의 복잡성을 가치로 내세워, 인천의 디지털 트윈을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위한 최우선 입지로 제안함 - 플래그십 공동 프로젝트 제안: UAM 공역 안전 및 버티포트 운영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AI 기반 지하 매설물 예측적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제물포 르네상스 및 원도심 재생 영향평가 시뮬레이터 개발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단계별 실행 로드맵) 1단계 (기반 구축, 1차년도): 협의회 공식 출범, MOU 체결, 첫 공동 프로젝트 제안서 개발 및 제출 2단계 (활성화 및 확장, 2~3차년도): 첫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제1회 연례 포럼 개최, '인천형 PPP-R&D' 모델 정교화, 협력 네트워크 확장 3단계 (리더십 확보 및 자생력 강화, 4~5차년도 이후): 핵심 분야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 민간·연구 파트너의 자발적 프로젝트 제안 단계 진입, 상업화 연계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기대효과	- 국가적 R&D 유치를 통한 인천의 기술 및 정책 리더십 확보 - 국비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재정적 한계 극복 - 공동 프로젝트 상용화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 대한민국 공간정보 혁신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 제공					
성과지표	체결된 MOU 및 공동 프로젝트 수, 유치된 국비 및 민간 투자액, 연례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실적,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 및 상용화 건수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함					

과제명	5-2-3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상시 운영					
추진일정	2026년 ~ 2027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인천시 전 부서	
추진배경	- 공간정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책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하므로, 시 내부 역량만으로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 있음 - 현재 개별 사업 단위로 비정기적인 전문가 자문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 전체의 공간정보정책을 아우르는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 기구가 부재한 상태					
추진목표	'인천 공간정보 R&D 자문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여,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내재화 - 기술, 법·제도, 산업 등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인천시 공간정보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주요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 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자문위원 위촉 및 임기 규정: 위원 자격 기준, 위촉 절차, 임기,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 핵심 프로그램 설계 (자문단 기능) - 정기 자문회의: 연간 R&D 계획 및 예산 심의·승인, 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검토 등 - 수시 서면 자문: 신규 사업 기획, 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 등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온라인/ 서면 자문 - 분과위원회 운영: 디지털 트윈, 미래 모빌리티 등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 위원장: 행정부시장 등 고위급 리더가 맡아 자문단의 위상과 실행력을 담보함 - 사무국 (토지정보과): 자문단 운영 실무를 총괄함(회의 개최, 안건 준비, 결과 관리 등) - 구성: 시 정부 핵심 부서장, 학계(인하대 등), 연구계(KICT, KRIHS 등), 산업계(네이버/ 카카오,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함					
기대효과	정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정책 품질을 제고함 시행착오 감소 및 예산 효율성 증대: 신기술 도입, R&D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위험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함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 신속 반영: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함 산·학·연·관 협력 강화: 자문단 활동을 통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시의 핵심 자산으로 내재화함					
성과지표	- 운영 효율성: 자문 요청부터 최종 의견서 전달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 - 정책 영향력: 핵심 권고안의 정책 및 사업 반영률 - 사업 품질 기여: 주요 사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여 완화한 건수 - 수요자 만족도: 자문 서비스를 이용한 시 부서의 연간 만족도 점수 - 생태계 기여: 자문단의 제안을 통해 시작된 공동 R&D 또는 민관협력(PPP) 사업 수					

과제명	5-2-4 민간 주도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리빙랩 운영 확대					
추진일정	2029년 ~ 2030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	-	-	비예산	비예산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협업부서	인천시 전 부서	
추진배경	- 인천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예산축소와 참여자 수 급감으로 동력 약화 - 민간 기업이 시의 공공데이터나 플랫폼을 활용할 체계적인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 - 인천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 시민의 집단지성을 시정에 접목하는 것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임					
추진목표	- 인천시 전체를 민간과 시민을 위한 거대한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로 포지셔닝하고, '인천-트윈' 플랫폼을 개방형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제공하여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 '인천-트윈' 플랫폼과 공공데이터를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도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상향식(Bottom-up) 혁신					
주요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 테스트베드/리빙랩 운영 지침 마련(조례에 근거 마련): 참여 기업 및 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데이터 제공, 실증 공간 등), 성과 공유, 지식재산권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범위, 형식, 절차를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을 강화함 핵심 프로그램 설계 'I-SPARK 오픈랩' 설립: 스타트업에게 공간, 컴퓨팅 자원, 멘토십 등을 제공하는 창업지원 공간(온/오프라인) 조성 '인천 Geo-챌린지' 개최: 특정 도시 문제 해결을 주제로 상금 기반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발굴 '스마트 협력 빌리지' 등 주제별 리빙랩 운영: 플랫폼과 연계하여 빗물받이, 대중교통 등 특정 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상시 운영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 토지정보과/도시관리과: 테스트베드 및 리빙랩 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운영, 플랫폼 기술 지원 - 인천테크노파크(TP) 등 유관기관: 'I-SPARK 오픈랩'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 민간 기업/스타트업: 테스트베드 및 리빙랩의 주체로서 신기술 실증 및 서비스 개발 - 시민: 리빙랩의 주체로서 아이디어 제안, 실증 참여, 서비스 평가					
기대효과	민간 주도 혁신 촉진: 상향식(Bottom-up)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정에 접목되어 혁신이 가속화됨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공간정보 기반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 실제 필요에 기반한 리빙랩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은 문제를 제시하고 민간과 시민은 해결책을 찾는 협력적 거버넌스 문화 정착					
성과지표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 수 및 신규 서비스 개발 건수, 리빙랩 참여 시민 수 및 제안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률, 신규 창업 기업 수 및 투자 유치액, 참여 기업 및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함					

[3] 공간 지능 역량 내재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과제명	5-3-1 공무원 데이터 문해력 및 공간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	2027년 ~ 2028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	비예산	비예산	-	-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인재개발원		협업부서	디지털산업과, 인천시 전 부서	
추진배경	- 현재 특정 직무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있으나,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이 부재 '인천-트윈' 등 최첨단 인프라의 성공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 달려있으며, 현재의 행정문화와 시의 비전 사이의 '역량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가 실패할 위험이 큼					
추진목표	- 모든 직급과 직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문해력과 공간 분석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조직 문화의 표준으로 정착 - 모든 공무원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전환					
주요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제도적 지원) - 필수 및 선택 과정 운영: '기초' 데이터 문해력 과정을 신규 임용자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고, 기존 직원은 2년 내 이수를 의무화함 - 인센티브 구조 확립: 개인 성과평가 지표에 '데이터 활용 역량' 항목을 포함하고, 심화/전문가 과정 수료 시 승진 가점을 부여하며, '공간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함 핵심 프로그램 설계 (맞춤형 교육 체계) - 리더 그룹(정책결정자): 데이터 기반 행정 가치, 분석 결과의 전략적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에 집중 - 실무 전문가 그룹(분석가 및 담당자): GIS S/W, 공간통계, 3D 데이터 처리 등 기술적 숙련도 향상에 집중 - 전 직원 그룹(일반 공무원): 데이터 기본 개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찾기, 차트와 지도 이해하기 등 데이터 문해력 기초 소양 증진에 집중 - 기술 인프라: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 안전한 실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 샌드박스' 환경을 구축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 토지정보과: 교육계획 수립, 기술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강사, 실무 사례 제공 - 인재개발원: 프로그램 전반의 기획·운영을 관리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 디지털산업과: 시 전사 데이터 거버넌스와의 정합성을 확보함					
기대효과	디지털 전환 선도: '인천-트윈' 플랫폼 활용 가속화 및 데이터 품질 향상 경제 혁신 촉진: 지능형 도시계획,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데이터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 시민 체감 실현: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환경 설계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탄소지도 데이터 해석, 재난 예측시뮬레이션 결과 정책 반영					
성과지표	KPI(산출물): 교육 이수율, 역량 향상도, 교육 만족도 영향 지표(성과): 데이터 기반 보고 비율, 플랫폼 활용률, 특정 분석 업무 소요 시간 단축률, 중앙정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등급					

과제명	5-3-2 시민 대상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 활용 교육·홍보 강화					
추진일정	2029년 ~ 2030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	-	-	비예산	비예산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교육협력담당관, 대변인실, 시민소통담당관	
추진배경	• 시민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체감할 상설 체험 공간이 없고 정책 홍보는 단편적 • 리빙랩 참여자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인천 On 마을' 등 참여 플랫폼은 파편화되어 있고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플랫폼이 '전시성 인프라'로 전락할 위험이 크므로, 시민 역량 강화는 핵심적인 위험 완화 투자임					
추진목표	• 시민을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에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혁신 파트너로 전환 • 모든 세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간 데이터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 참여를 도시 문화의 표준으로 정착 • 모든 시민이 공간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기반의 협력적 도시 거버넌스 구현					
주요 추진내용	• 제도적 기반 강화 (제도적 지원) -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유스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작에 시장상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을 지원함 - 시민 전문가 인증 및 역할 부여: '시민 데이터 과학자' 과정 이수자를 '디지털 트윈 명예 앰버서더'로 위촉하고, 지역 커뮤니티 멘토나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함 - 지속적인 소통 및 환류: 시민 제안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여 참여 효능감을 높임 • 핵심 프로그램 설계 (맞춤형 교육 체계) - 미래 세대(초·중·고등학생):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데이터 교육 모듈 개발, '인천 유스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일반 시민(성인): '디지털 트윈, 내 삶을 어떻게 바꾸나?' 등 쉬운 영상 콘텐츠 및 실생활 적용 가능한 온라인 강좌 제공 - 시민 전문가 그룹(커뮤니티 리더 등): '시민 데이터 과학자 양성 과정' 등 심화 교육을 통해 지역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역량 배양 - 기술 인프라:(가칭) '인천 디지털 트윈 체험관'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할 '통합 온라인 포털 및 모바일 앱'을 개발 •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 '시민 공간지능 확산 실무협의체' 구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 토지정보과: 프로그램 총괄 기획, 예산 확보, 체험관 및 온라인 포털 기획·운영 - 교육협력담당관: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 공동 기획 - 대변인실: 전략적 홍보 계획 수립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확산 - 시민소통담당관: 리빙랩, 제안 플랫폼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디지털 전환 선도: '인천-트윈' 플랫폼의 시민 활용도 증진 및 고도화에 기여함 • 경제 혁신 촉진: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주도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함 • 시민 체감 실현: 시민의 실제 필요에 기반한 정책 제안 및 해결 과정 참여로 만족도를 극대화함 •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 기후위기, 재난 등 공공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					
성과지표	• KPI(산출물): 연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디지털 트윈 체험관 연간 방문객 수, 온라인 포털/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 영향 지표(성과): '공간정보정책' 시민 인지도, 데이터 기반 시민 제안 채택률, 리빙랩을 통한 정책 개선 건수					

과제명	5-3-3 공간정보정책 성과 홍보 및 시민 참여 채널 다각화					
추진일정	2028년 ~ 2030년			소요예산	비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예산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추진체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업부서	대변인실, 시민소통담당관 등 인천시 전 부서	
추진배경	- 현재 정책 홍보는 단편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그치며, '인천 On 마을' 등 시민 참여 채널은 파편화되어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우수한 정책이라도 그 성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정책 품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					
추진목표	'보여주는 홍보'에서 '경험하고 참여하는 소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공간정보정책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도록 알리며,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 - 정책을 통해 개선된 시민의 삶과 도시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임					
주요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 강화 - 시민 제안 처리 규정 마련: 온라인으로 접수된 시민 제안의 검토 절차, 처리 기한, 피드백 의무 등을 명문화 - 우수 제안 인센티브 제도: 정책 채택 시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 - 핵심 프로그램 설계 - 성과 홍보 프로그램: '연례 인천 공간지능 포럼' 개최: 산·학·연·관·민이 참여하여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대표 행사로 육성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 제작: 공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 변화와 정책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정기 발행 참여 채널 다각화 프로그램: '디지털 트윈 체험관' 운영: 시민들이 AR/VR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직접 체험하는 오프라인 거점 마련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 고도화: '인천-트윈'과 연계하여 시민이 3D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기능 구현 '시민참여 지도' 앱 운영: 보행 불편사항, 위험요소 등 생활 속 문제점을 시민이 직접 제보하는 채널 활성화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R&R) - 토지정보과: 성과 홍보 및 시민 참여 채널 다각화 총괄 기획 - 대변인실: 시정 홍보 채널(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및 언론 대응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 제안 플랫폼 운영 및 리빙랩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기대효과	정책 공감대 및 지지 확보: 정책성과를 투명하게 공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추진의 동력 확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 '깜깜이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 행정 구현 시민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 품질 향상: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성 높은 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 문화 정착					
성과지표	정책 홍보 콘텐츠의 연간 조회 수 및 공유 건수, 온라인 시민 제안 건수 및 정책 채택률, 시민참여 채널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함					